

20
16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GLOBAL LEGAL ISSUES (II)

- 국제환경법 분야
- 국제투자법 분야
- 농업식량법 분야
- 원자력법 분야

Issue
01

국제환경법 분야..... 07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오 선 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30

Issue
02

국제투자법 분야..... 83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 연 식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118

Issue
03

농업식량법 분야..... 179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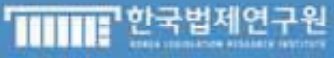
송 재 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254

Issue
04

원자력법 분야..... 271
에너지·원자력법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형 상 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변호사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30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1

국제환경법 분야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 부록 ▶
1. UNFCCC COP 21 Decision
 2. Paris Agreement

오 선 영

승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오선영교수는 미국 **American University** 대학교에서 국제통상법과 국제환경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승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승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국제통상법과 국제환경법 분야이다.

01

국제환경법 분야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오 선 영

Abstract

환경 관련 이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간의 건강, 환경기준 등 다양하다. 더욱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기후변화 징후들이 증가하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 보호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2015년에는 ‘기후변화’가 최대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토의정서를 대신하여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수립할 새로운 협정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 이슈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인 파리협약을 요약 정리하여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나고야의 정서 이행법률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들의 최근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개관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우리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검토해야 할 점들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역에서의 환경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여,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사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OECD의 물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과 활동현황을 소개하며,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았다.

1. 들어가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관리, 인간의 건강보호 등의 다양한 환경 이슈들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연관 지어 통합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주제별로 대표적인 국제기구와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및 활동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국제환경 이슈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동향

1.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및 관련 국제협약

가. 유엔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UNCED)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¹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및 결과²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997년 제3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¹ <http://newsroom.unfccc.int/paris-agreement/>

² 자세한 내용은 UNFCCC의 홈페이지(<http://newsroom.unfccc.int/paris-agreement/>)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채택과정과 주요내용”을 참고하였음.

합의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로 인하여 2015년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행동강화를 위해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하 ADP)이 신설되어 파리협정 초안이 완성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규제를 담은 국제협약으로 선진국뿐만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한 당사국 모두를 구속시키는 국제적 합의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한다’는 장기목표를 세우고,³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⁴ INDC는 파리협정 발효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⁵ 우리나라는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이미 제출하였다.⁶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인 글로벌 스탁테이킹(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고, 이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⁷ 이러한 중간점검 시스템은 2015년 10월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

3 파리협정 제2조 1항 (a)

4 UNFCCC COP 21 Decision, paras. 12- 21.

5 파리협정 제22조.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파리협정 제21조).

6 우리 정부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에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INDC를 2015년 6월 UN에 제출하였다.

7 파리협정 제14조 및, UNFCCC COP 21 Decision paras. 100- 102.

로, 2018년에 사전 이행점검 성격의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를 먼저 실시해 보기로 합의하였다.⁸

전술하였듯이, 본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감축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적인 감축방식(**economy-wide absolute**)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economy-wide**) 감축방식으로 절대량 감축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자국 여건에 따라 감축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⁹ 이처럼 개도국 역시 감축의무의 대상에 동참하는 대신 선진국들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책임 및 역량 차이와 함께, 파리협정에서는 ‘적응(**adaptation**)’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¹⁰ 교토의정서에서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파리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규제에는 감축수단뿐만 아니라 적응수단 역시 중요한 요소임이 재확인되었다. 개도국들의 적응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의무화하였다.¹¹

적응과는 별개로,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들이 입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인지 및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별도 조항을 두었다.¹² 사실 이 부분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다. 파리협정에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직접 배상 책임(**liability**)이나 보상(**compensation**)을 부담한다는 문구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다.¹³

8 UNFCCC COP 21 Decision, para. 20.

9 파리협정 제4조 4항.

10 파리협정 제7조.

11 파리협정 제7조 13항.

12 파리협정 제8조.

13 UNFCCC COP 21 Decision, para. 52.

파리협정의 감축목표와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의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에게 UNFCCC 에 의해 부여받았던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고,¹⁴ 기타 국가들에게도 자발적 지원을 권장하였다.¹⁵ 한편 파리협정에서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사전, 중간 그리고 사후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선진국들은 2년 주기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그리고 공공재원(public financial resources)의 예상수준(projected level)을 보고해야 한다.¹⁶ 중간 점검의 시스템인 글로벌스탁테이킹은 기후재원 관련 정보를 점검하며,¹⁷ 선진국들은 또한 2년 주기로 개도국에게 지원하였던 공공부문 기후재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¹⁸ 이를 측정·보고·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이하 MRV)이라고 한다.

(2) 시사점

전술하였듯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부담하여 교토의정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자발적인 감축 목표와 함께 재정지원 및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강력한 제재(규정의 적용)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에 제재 수단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것

14 파리협정 제9조 1항.

15 파리협정 제9조 2항.

16 파리협정 제9조 5항.

17 파리협정 제9조 6항.

18 파리협정 제9조 7항.

으로 평가된다. 파리 당사국 총회 때 이행준수위원회¹⁹를 포함한 이행준수 메커니즘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마련되었으나 개별 국가들이 파리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재 수단 및 이행 강제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던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감축의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INDC 를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 신(新)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파리협정에는 세계 최대의 탄소량을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였으므로 기후변화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하기 위한 국내 대응체계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기준을 위한 절차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²⁰

(1)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²¹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러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1992년 UNEP 주관 하에 CBD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CBD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0년 CBD 협약의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일본 나고야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

¹⁹ 파리협정 제15조.

²⁰ <https://www.cbd.int/abs/>

²¹ 자세한 내용은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와 CBD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정보공유 체계인 ABS Clearing-House 홈페이지(<https://absch.cbd.int/>) 참조

회가 열린 평창에서 나고야의정서가 공식발효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아직 본 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의 ‘접근(Access)’ 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Benefit- Sharing)’ 이기에 나고야의정서를 ABS 협정이라고 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해외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을 받아야 하며,²² 이때 이용자는 이용 후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제공자와 나눌 것인지 계약서(Mutually Agreed Terms, MAT)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²³ 나고야의정서 역시 유전자원 제공국(대체로 개도국)과 유전자원 이용국(대체로 선진국)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많은 조항들이 모호하게 체결되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의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및 바이오업계는 중국의 유전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영향이 실로 크다. 더불어 중국은 2016년 6월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오는 9월에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며, 국내 이행을 위한 중국 이행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에 공식 발효되고 2016년에 제13차 당사국총회가 열릴 계획이라 2015년에는 주요 안건인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과²⁴ 정보공유센터(Clearing- House)에 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하여 유럽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15일- 17일에 걸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나고야의정서 능력개발에 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²⁵ 본 회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

22 나고야의정서 제6조.

23 나고야의정서 제5조.

24 나고야의정서 제22조.

및 지원을 위한 현행 능력배양 및 개발 도구 및 자료 평가(Item 3)'를 위하여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 관련 이행법률, 인식제고 전략 등을 비교하였으며, '능력배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교훈 공유와 개선을 위한 제안(Item 4)'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유가 돼야 하며, 이는 정보공유센터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능력배양은 개도국에게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인데, 2015년 11월에는 '유전자원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베트남 능력배양' 프로젝트에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 미화12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²⁶

2015년 10월 28-30일에 걸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센터에 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²⁷ 정보공유센터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CBD 협약의 정보공유센터 일부분이 된다.²⁸ 비공식 자문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15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²⁹ 이들은 정보공유센터에 정보를 제출하는 공통양식을 검토하고 CBD 협약과 정보공유센터와의 연계,³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

25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ITS FIRST MEETING <https://www.cbd.int/doc/meetings/abs/absbiac-2015-01/official/absbiac-2015-01-03-en.pdf>

26 베트남 ABS 역량 강화를 위해 UN의 재정지원, <http://english.vietnamnet.vn/fms/environment/146167/un-grants--12-5m-to-bolster-biodiversity-in-vietnam.html>

27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https://www.cbd.int/doc/meetings/abs/absch-iac-01/official/absch-iac-01-03-en.pdf>

28 나고야의정서 제14조 1항.

29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1-4.

30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22-29.

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과 같은 관련 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³¹

개별국가의 상황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자국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데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이용국들은 타 국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을 소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주요 이용국임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511/2014/EU를 2014년에 마련³²하는 등, 본 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위원회는 동 규칙의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2015/1866을 2015년 10월 13일에 채택하여, 11월 9일부터 이를 전격 발효하였다.³³ 동 시행규칙은 유럽연합 이행입법인 규칙511/2014/EU의 제5조(collections), 제7조(monitoring user compliance), 제8조(best practices)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컬렉션의 등록과 기록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록 절차, 등록 전후 점검되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³⁴ 특히 연구비의 수령 및 개발단계에서의 이용자 준수와 관련하여 적정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³⁵ 아래의 그림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과 비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7월 30일 현재 74개의 당사국이 있으며 중국은 9월부터 당사국이 된다.

31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30- 33.

32 EU ABS Regulation -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3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3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제3- 4조.

3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제5- 6조.

<그림 1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³⁶



(2)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약재를 포함한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의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되고, 중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과 산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계 부처 간의 이해갈등을 좁히고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외의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PIC 과 MAT 와 관련된 의무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르게 부여되어 있고, 이익 공유를 위한 MAT 체결은

³⁶ <https://absch.cbd.int/>

의무가 아닌 장려 사항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의 지정은 완료된 반면, 해외 유전자원의 이행준수와 관련된 국가점검기관의 지정은 시행령으로 미루고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사항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을 좁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행법률안의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산업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Basel Convention),³⁷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³⁸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³⁹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약들의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이 있으며, 세 협약 모두 UNEP 주관 하에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세 개의 협약에 모두 당사국이다. 2015년 5월 4~15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젤협약의 제12차 당사국총회, 로테르담협약의 제7차 당사국총회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의 제7차 당사국총회가 잇따라서 열렸다.⁴⁰ 본 당사국총회들은 ‘안전한 내일을 위한, 과학에서 행동으로

37 <http://www.basel.int/>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위한 것으로, 당사국들에게는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안전한 관리와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38 <http://www.pic.int/> 공식 명칭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으로,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을 규제하는 것으로 2개 이상 지역이나 국가에서 판매금지나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제조도 수출도 할 수 없다.

39 <http://chm.pops.int/>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조·사용금지와 제한, POPs를 포함한 폐기물·재고의 적정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40 <http://synergies.pops.int/2015COPs/Overview/tabid/4196/mctl/ViewDetails/EventModID/9163/EventID/539/xmid/12867/language/en-US/Default.aspx>

(From science to action, working for a safer tomorrow)' 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열렸으며, 두 개 협약 또는 세 개 협약의 합동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였다.⁴¹ 본 회의에서는 세 개의 협약 사이의 협력 증진과 조화,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재원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⁴²

가전제품, 핸드폰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대량생산 및 소비로 말미암아 전자폐기물 증가가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12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전자폐기물(E- Waste)의 관리에 대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기술적 관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⁴³ 제7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PIC)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속서 III 대상물질로 메타미도포스가 추가되었다.⁴⁴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Ns, PCP, HCBd 가 신규 POPs 물질로 추가되었다.⁴⁵

(2) 시사점

바젤협약에 따라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전자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국제동향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일본의 유독성 전자쓰레기 수백 톤이 고철, 구리 등으로 둔갑해 태국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돼 전자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⁴⁶ 이에 지속가능한 전자폐기물 재활용 방

⁴¹ <http://chemicals-1.iisd.org/events/basel-cop-12-rotterdam-cop-7-and-stockholm-cop-7/>

⁴² Id.

⁴³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n the work of its twelfth meeting, UNEP/CHW12/27 (4- 15 May 2015).

⁴⁴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on the work of its seventh meeting, UNEP/FAO/RC/COP.7/21 (29 July 2015).

⁴⁵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on the work of its seventh meeting, UNEP/POPs/COP.7/36 (23 June 2015).

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국가의 협력 제고와 함께 우리 국내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전자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로테르담협약과 스톡홀름협약에서 새로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화학물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⁴⁷

안전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옥시 사태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모든 단계에서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화학물질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해왔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 화학물질이 개발된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사용되기 이전 단계인 시장진입 및 유통단계에서는 유독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였다.⁴⁸ 국내에서는 매년 약300건의 신규 화학물질들이 심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제2의 가습

46 연합뉴스, “일본, 유독성 전자쓰레기 수출? … 태국, 200t 적발해 반송,”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002500076.H TML?input=1195m>

47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입법으로는 바젤협약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이 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전술한 국제협약과 함께 2015년에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있다. 전술한 화학물질 관련 국제조약과 화평법과 화관법이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라는 공통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럽에서 화학물질이 REACH에 의해 개편된 이후, 우리나라의 화평법과 화관법은 EU의 REACH를 많이 도입하였다.

48 http://www.chemistory.go.kr/csu/teach/02/par_02_02.jsp

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기구와 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잡힌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⁴⁹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관리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점 역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WTO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공정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관련 국제기구이지만, 환경이슈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거나, 무역의 일반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WTO**에서 환경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환경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이하 **CTE**)를 비롯하여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위생및식물위생(**SPS**)위원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거버넌스, 불법 벌목, 기술표준, 위생기준,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더욱이 **2015**년은 **WTO**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는데, **WTO** 사무총장은 그 기념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WTO**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⁵⁰ 아래에서는 **2015**년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환경관련 주요 사례들을 개관하였다.

⁴⁹ 정호경·마정근,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호, 218면 (2016).

⁵⁰ https://www.wto.org/english/news_e/spra_e/spra83_e.htm

가. 환경이슈 관련 WTO 주요 판례 소개

2015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상대로 WTO 에 제소하였던 쇠고기 분쟁 사례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다.⁵¹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이 발생하여 미국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북부 지역과 **Patagonia** 지역은 구제역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 전부를 수입금지 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재확인해달라는 신청을 미국이 지연시킨 것은 WTO 의 ‘위생및식품검역협정(**SPS**)’ 에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부당한 지연절차는 **SPS** 협정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제역 판단에 있어, 관련된 국제조치인 ‘국제수역사무국(**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국제조치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으며,⁵² 미국이 **SPS** 협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지연임을 인정하였고,⁵³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들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SPS** 협정 제5.7조도 본 사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객관적인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위해 추가정보 수집을 계속 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국 조치를 재검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⁵⁴

나. 시사점

SPS 협정 관련 위 사례 등은 현재 우리 정부가 피제소국으로 대응 중인 사례에도

51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nimals, Meat and Other Animal Products from Argentina, WT/DS447/R/Add.1 (July 24 2015).

52 **SPS**협정 제3조 1항.

53 **SPS**협정 제8조 및 Annex C(1)(a).

54 **SPS**협정 제5.7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광우병 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⁵⁵ 이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정당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해성평가 없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 한 것은 SPS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였다.⁵⁶ 본 사안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WTO의 첫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⁷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근거하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사전 예방적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⁵⁸ 그동안 SPS 협정 제5조 7항과 관련된 WTO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었지만 본 조항을 원용한 피제소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았다. 본 사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우리나라가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돼야 하는데, 위 미국의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분쟁에서처럼 SPS 협정 제5조 7항의 나머지 구성요소(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의 기초 의무,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수집 의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된 조치의 재검토 의무)를 모두 충족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원전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우리 자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⁵⁹

55 일본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강제해결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0/0200000000AKR20150820168500073.HTML?input=1195m>

56 Japan files dispute against Korea over import restriction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5_e/ds495rfc_21may15_e.htm

57 일본産 수산물 분쟁 WTO 패널설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430086609505040&DCD=A00106&OutLnkChk=Y>

58 류병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일간의 WTO 분쟁,”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63면 (2015).

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 물(water) 관리에 있어서의 OECD 주요 활동 및 내용

OECD는 국가 간 경제정책, 에너지, 환경, 통상, 노동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정부 간 정책연구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로써,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 및 협력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OECD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이슈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물(water)’에 한정하여 그 활동을 기술하기로 한다.

OECD는 이미 2012년 3월에 개최된 제10차 환경장관회의에서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al Outlook 2050)’ 최종본을 발간하였고,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과 보건 등 4개 분야를 주요 의제로 구성하여, 2050년 지구 환경 전망과 정책적 조언을 제시한 바 있다.⁶⁰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경제성장은 4배 정도 증가하고 인구 역시 20억 명이 증가되어 이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⁶¹ 물과 관련하여서도 물의 수질, 수량, 물 공급과 위생, 그리고 물 관련 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래의 <그림2>에 따르면, 2050년의 물 수요는 5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부문의 물 수요는 무려 400%, 발전 부문은 140%, 가정용 물 수요는 130%가 증가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였다.⁶²

지난 2015년 4월 한국 대구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 이하

59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패널 WTO에 설치 요청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99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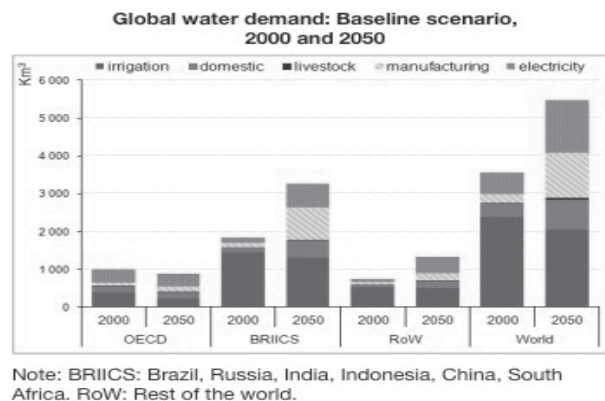
60 <http://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9846090.pdf>

61 *Id.*

62 <https://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9910023.pdf>

WWF) 이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⁶³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모범적인 물 관리(water governance)를 위한 OECD의 기본원칙으로 (1)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 또는 정책일관성과 역량 개발과 연결되는 효과성(effectiveness), (2) 데이터와 정보의 규모 또는 재원과 정책구조를 포함하는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3) 투명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는 신뢰와 참여(trust and engagement)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⁶⁴ OECD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도 사이드 이벤트(side event)를 열어 기후변화는 곧 물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후변화의 적응(adaptation)은 물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⁶⁵

< 그림 2 세계 물 수요: 2000년-205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⁶³ OECD at the 7th World Water Forum in Daegu & Gyeongbuk, Republic of Korea, <http://www.oecd.org/env/resources/7th-world-water-forum.htm>,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가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만든 물 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⁶⁴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From Vision to Action - 7th World Water Forum <http://www.oecd.org/about/secretary-general/oecd-principles-on-water-governance-from-vision-to-action.htm>

⁶⁵ COP21 session - Defining water resilient actions to climate change, <http://www.oecd.org/environment/cc/cop21session-definingwaterresilientactionstoclimatexchange.htm>

나. 시사점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예측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절한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목적댐 등 대규모 식수원을 건설하여 물을 공급해 왔으며, 경제개발을 위해 공단과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자원 물량의 확보·공급 차원에서 물 문제에 접근해 왔다.⁶⁶ 하지만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의 감소, 지역주민의 반대, 특히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으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⁶⁷ 더욱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국민과 정부와의 신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OECD 국가 중의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야 하며, 물 부족 현황과 지속사용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⁶⁶ 남궁은,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황과 대응방향

http://www.unep.or.kr/sub/sub05_01.php?boardid=planet&mode=view&idx=30&sk=&sw=&offset=1140&category=

⁶⁷ *Id.*

III. 맺음말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다양한 환경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인 이슈이기에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들의 활동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 생물다양성의 보호,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안전한 먹거리와 연관된 무역과 환경 이슈 그리고 물 부족 해결 및 건전한 물 관리 문제를 UN 관련 기구와 WTO 그리고 OECD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5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 획을 긋는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탄생되었다. 이는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정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부과시키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부담시켜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추가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리협정을 비준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 이행법 점검 및 구축, 그리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국제적 약속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약재를 포함한 중국산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에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최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

여 오는 9월에 당사국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 부처 간의 이해갈등을 좁히고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와 제2의 가습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가전제품 등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협약들의 규제 지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는 특히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새로이 규제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통상의 규범질서와 결부되어, 막강한 분쟁해결 절차를 구축하고 있는 WTO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 현재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사전주의적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SPS 협정 제5조 7항의 성립 요건인,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의 기초 의무,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 의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된 조치의 재검토 의무를 모두 충족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정부와의 신뢰를 견고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 부족 현황과 지속사용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 부록 1 > UNFCCC COP 21 Deci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CP/2015/L.9/Rev.1

Distr.: Limited
12 December 2015

Original: English

Conference of the Parties

Twenty-first session

Paris, 30 November to 11 December 2015

Agenda item 4(b)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decision 1/CP.17)**Adoption of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Proposal by the President****Draft decision -/CP.21***The Conference of the Parties,**Recalling* decision 1/CP.17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Also recalling* Articles 2, 3 and 4 of the Convention,*Further recalling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decisions 1/CP.16, 2/CP.18, 1/CP.19 and 1/CP.20,*Welcoming* the adoption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its goal 13, and the adoption of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the adoption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Recognizing* that climate change represents an urgent and potentially irreversible threat to human societies and the planet and thus requires the widest possible cooperation by all countri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international response, with a view to accelerating the reduction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Also recognizing* that deep reductions in global emissions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urgenc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Acknowledging* that climate change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Parties should,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GE.15-21932(E)



Please recycle



local communities, migrant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s well as gender equality, empowerment of wome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Also acknowledging the specific needs and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ising from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and, in this regard, decisions 5/CP.7, 1/CP.10, 1/CP.16 and 8/CP.17,

Emphasizing with serious concern the urgent need to address the significant gap between the aggregate effect of Parties' mitigation pledges in terms of global annua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2020 and aggregate emission pathways consistent with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lso emphasizing that enhanced pre-2020 ambition can lay a solid foundation for enhanced post-2020 ambition,

Stressing the urgency of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ts Kyoto Protocol in order to enhance pre-2020 ambition,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enhance the provision of finance, technology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by developed country Parties, in a predictable manner, to enable enhanced pre-2020 action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Emphasizing the enduring benefits of ambitious and early action, including major reductions in the cost of futur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Acknowledging the need to promote universal access to sustainable energy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in Africa, through the enhance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greeing to uphold and promot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mobilize stronger and more ambitious climate action by all Parties and non-Party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cities and other subnational authorities,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I. ADOPTION

1. *Decides* to adopt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s contained in the annex;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be the Depositary of the Agreement and to have it open for signature in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2 April 2016 to 21 April 2017;
3. *Invites* the Secretary-General to convene a high-level signature ceremony for the Agreement on 22 April 2016;
4. *Also invites* all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sign the Agreement at the ceremony to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r at their earliest opportunity, and to deposit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where appropriate, as soon as possible;
5. *Recognizes* that Parties to the Convention may provisionally apply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and *requests* Parties to provide notification of any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to the Depositary;

6. *Notes* that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17, paragraph 4, has been completed;
7. *Decides* to establish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same arrangement, *mutatis mutandis*, as those concerning the election of officers to the Bureau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¹
8. *Also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shall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for the convening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9. *Further decides*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programme resulting from the relevant requests contained in this decision;
10.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report regular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progress of its work and to complete its work by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1.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shall hold its sessions starting in 2016 in conjunction with the sessions of the Convention subsidiary bodies and shall prepare draft decisions to be recommended throug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at its first session;

II.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2. *Welcomes*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have been communicated by Parties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19, paragraph 2(b);
13. *Reiterates* its invitation to all Parties that have not yet done so to communicate to the secretariat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as soon as possible and well in advance of the twenty-secon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November 2016) an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4. *Requests* the secretariat to continue to publish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on the UNFCCC website;
15. *Reiterates* its call to developed country Parties, the operating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and any other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do so to provide support for the prepar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of Parties that may need such support;
16. *Takes note* of the synthesis report on the aggregate effect of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by 1 October 2015, contained in document FCCC/CP/2015/7;
17. *Notes* with concern that the estimated aggregate greenhouse gas emission levels in 2025 and 2030 resulting from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do not fall within least-cost 2 °C scenarios but rather lead to a projected level of 55 gigatonnes in 2030, and *also notes* that much greater emission reduction efforts will be required than those associated with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order to hold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by

¹ Endorsed by decision 2/CP.18, paragraph 2.

reducing emissions to 40 gigatonnes or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by reducing to a level to be identified in the special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21 below;

18. *Also notes, in this context, the adaptation needs expressed by many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9. *Requests the secretariat to update the synthesis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6 above so as to cover all the information i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pursuant to decision 1/CP.20 by 4 April 2016 and to make it available by 2 May 2016;*

20. *Decides to convene a facilitative dialogue among Parties in 2018 to take stock of the collective efforts of Parties in relation to progress towards the long-term goal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greement and to inform the prepar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8, of the Agreement;*

21. *Invites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o provide a special report in 2018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II. DECISIONS TO GIVE EFFECT TO THE AGREEMENT

MITIGATION

22. *Invites Parties to communicate their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o later than when the Party submits its respectiv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ssion, or approval of the Paris Agreement. If a Party has communica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ior to joining the Agreement, that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satisfied this provision unless that Party decides otherwise;*

23. *Urges those Parties whos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ursuant to decision 1/CP.20 contains a time frame up to 2025 to communicate by 2020 a new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to do so every five years thereafter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9, of the Agreement;*

24. *Requests those Parties whos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ursuant to decision 1/CP.20 contains a time frame up to 2030 to communicate or update by 2020 these contributions and to do so every five years thereafter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9, of the Agreement;*

25. *Decides that Parties shall submit to the secretariat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Agreement at least 9 to 12 months in advance of the relevan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these contributions, including through a synthesis report prepared by the secretariat;*

26.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develop further guidance on features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27. *Agrees tha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communicating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may include, as appropriate, inter alia, quantifiable information on the 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time frames and/or periods for implementation, scope and coverage, planning process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those for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s appropriate, removals, and how the Party considers that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s fair and ambitious, in the light of its national circumstances, and how it contribute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28.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develop further guidance for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29. *Also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to develop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public registry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2, of the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30. *Further requests* the secretariat to make available an interim public registry in the first half of 2016 for the recording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Agreement, pending the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f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9 above;

31.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elaborate, drawing from approach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related legal instruments as appropriate, guidance for accounting for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3, of the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which ensures that:

(a) Parties account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in accordance with methodologies and common metrics assess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b) Parties ensure methodological consistency, including on baselines, between the commun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 Parties strive to include all categories of anthropogenic emissions or removals in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once a source, sink or activity is included, continue to include it;

(d) Parties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of why any categories of anthropogenic emissions or removals are excluded;

32. *Decides* that Parties shall apply the guidance mentioned in paragraph 31 above to the second and subsequ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that Parties may elect to apply such guidance to their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33. *Also decides* that the Forum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under the subsidiary bodies, shall continue, and shall serve the Agreement;

34. *Further decides* that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hall recommend,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the modalities, work programme and functions of the Forum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to address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under the Agreement by enhancing cooperation amongst Parties on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mitigation actions under the Agreement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amongst Parties to raise their resilience to these impacts;*

36. *Invites* Parties to communicate, by 2020, to the secretariat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9, of the Agreement, and *requests* the secretariat to publish on the UNFCCC website Parties'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as communicated;

37.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develop and recommend the guidance referred to under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for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including guidance to ensure that double counting is avoided on the basis of a corresponding adjustment by Parties for both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covered by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Agreement;

38. *Recommend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dopt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Agreement on the basis of:

- (a) Voluntary participation authorized by each Party involved;
- (b) Real, measurable, and long-term benefits related to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c) Specific scopes of activities;
- (d) Reductions in emissions that are additional to any that would otherwise occur;
- (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mitigation activities by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 (f) Experience gained with and lessons learned from existing mechanisms and approaches adopted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related legal instruments;

39.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develop and recommend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38 above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40. *Also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undertake a work programme under the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8, of the Agreement, with the objective of considering how to enhance linkages and create synergy between, inter alia,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nd how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of non-market approaches;

41. *Further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recommend a draft decision on the work programme referred to in paragraph 40 above,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Partie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DAPTATION

* Paragraph 35 has been deleted, and subsequent paragraph numbering and cross references to other paragraphs within the document will be amended at a later stage.

42. *Requests* the Adaptation Committee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to jointly develop modalities to recognize the adaptation effort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7, paragraph 3, of the Agreement,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43. *Also requests* the Adaptation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its mandate and its second three-year workplan, and with a view to preparing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 To review, in 2017, the work of adaptation-rel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ways to enhance the coherence of their work, as appropriate, in order to respond adequately to the needs of Parties;

(b) To consider methodologies for assessing adaptation needs with a view to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placing an undue burden on them;

44. *Invites* all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and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information to Parties through the secretariat on how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and climate finance programmes incorporate climate-proofing and climate resilience measures;

45. *Requests* Parties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on adaptation where appropriate and, where necessary, establish regional centres and network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decision 1/CP.16, paragraph 13;

46. *Also requests* the Adaptation Committee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o develop methodologie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on:

(a)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 facilitate the mobilization of support for adap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limit to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b) Reviewing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adapta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7, paragraph 14(c), of the Agreement;

47. *Further requests* the Green Climate Fund to expedite suppor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formulation of national adaptation plans, consistent with decisions 1/CP.16 and 5/CP.17, and for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ojects and programmes identified by them;

LOSS AND DAMAGE

48. *Decides* on the continuation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following the review in 2016;

49. *Request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to establish a clearinghouse for risk transfer that serves as a repository for information on insurance and risk transfer, in order to facilitate the efforts of Parties to develop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trategies;

50. *Also request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to establish, according to its procedures and mandate, a task force to complement, draw upon the work of and involve, as appropriate, existing bodies and expert group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Adaptation Committee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as well as relevant organizations and expert bodies outside the Convention,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approaches to avert, minimize and address displacement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51. *Further request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to initiate its work, at its next meeting, to operationalize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49 and 50 above, and to report on progress thereon in its annual report;

52. *Agrees* that Article 8 of the Agreement does not involve or provide a basis for any liability or compensation;

FINANCE

53. *Decides*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financial resource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olicies, strategies, regulations and action plans and their climate change actions with respect to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2;

54. *Also decid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Agreement, developed countries intend to continue their existing collective mobilization goal through 2025 in the context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cy on implementation; prior to 202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set 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from a floor of USD 100 billion per year,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55.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dequate and predictable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for results-based payments, as appropri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f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as well as alternative policy approaches, such as 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approaches for the integral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whil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non-carbon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pproaches; encouraging the coordination of support from, inter alia, public and private, bilateral and multilateral sources, such as the Green Climate Fund, and alternative sourc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decision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56. *Decides* to initiate, at its twenty-second session, a process to identify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with the view to providing a recommendation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57. *Also decides* to ensure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7 of the Agreement shall be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6 below;

58. *Requests*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develop modalities for the accounting of financial resources provided and mobilized through public interven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7, of the Agreement for considera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ourth session (November 2018), with the view to making a recommendation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59. *Decides* that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e entities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and 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administered by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shall serve the Agreement;

60. *Recognizes* that the Adaptation Fund may serve the Agreement, subject to relevant decision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61. *Invit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to consider the issue referred to in paragraph 60 above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62. *Recommend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provide guidance to the entities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on the policies,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criteria related to the Agreement for transmiss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63. *Decides* that the guidance to the entities entrusted with the operations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those agreed before adoption of the Agree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64. *Also decides* that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shall serve the Agreement in line with it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65. *Urges* the institutions serving the Agreement to enhance the coordination and delivery of resources to support country-driven strategies through simplified and efficient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nd through continued readiness support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clud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s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66. *Takes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on guidance on enhanced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echnology needs assessments as referred to in document FCCC/SB/2015/INF.3;

67. *Decides*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requests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o undertake further work relating to, *inter alia*:

- (a)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 (b)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ndogenous capacities and technologies;

68.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initiate, at its forty-fourth session (May 2016), the elaboration of the technology framework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paragraph 4, of the Agreement and to report on its finding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a view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king a recommendation on the framework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at its first se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framework should facilitate, *inter alia*:

- (a) The undertaking and updating of technology needs assessments, as well as the *enhanced* implementation of their results, particularly technology action plans and project ideas, through the preparation of bankable projects;

- (b) The provision of enhanced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technology needs assessments;

(c) The assessment of technologies that are ready for transfer;

(d) The enhancement of enabling environments for and the addressing of barriers to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69. *Decides* that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shall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rough the subsidiary bodies, on their activiti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70. *Also decides* to undertake a periodic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nd the adequacy of the support provided to the Technology Mechanism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matters relating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71.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to initiate, at its forty-fourth session, the elaboration of the scope of and modalities for the periodic assess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70 above, taking into account the review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as referred to in decision 2/CP.17, annex VII, paragraph 20 and the modalities for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ifth session (November 2019);

CAPACITY-BUILDING

72. *Decides* to establish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whose aim will be to address gaps and needs, both current and emerging, in implementing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further enhancing capacity-building efforts, including with regard to coherence and coordination in capacity-building activities under the Convention;

73. *Also decides* that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will manage and oversee the work plan mentioned in paragraph 74 below;

74. *Further decides* to launch a work plan for the period 2016–2020 with the following activities:

(a) Assessing how to increase synergies through cooperation and avoid duplication among existing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that implement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collaborating with institutions under and outside the Convention;

(b) Identifying capacity gaps and needs and recommending ways to address them;

(c)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ools and methodolo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city-building;

(d) Fostering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cooperation;

(e) Identifying and collecting good practices, challenge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work on capacity-building by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f) Exploring how developing country Parties can take ownership of building and maintaining capacity over time and space;

(g)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apac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subnational level;

(h) Fostering dialogue, coordination, collaboration and coherence among relevant processes and initiative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through exchanging

information on capacity-building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i) Providing guidance to the secretariat on the mainten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web-based capacity-building portal;

75. *Decides* that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will annually focus on an area or theme related to enhanced technical exchange on capacity-building, with the purpose of maintaining up-to-date knowledge on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in building capacity effectively in a particular area;

76.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to organize annual in-session meetings of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77. *Also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to develop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in the context of the thir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building framework, also taking into account paragraphs 75, 76, 77 and 78 above and paragraphs 82 and 83 below, with a view to recommending a draft decision on this matter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second session;

78. *Invites*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on the membership of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by 9 March 2016;²

79. *Requests* the secretariat to compile the submis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78 above into a miscellaneous document for consideration by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at its forty-fourth session;

80. *Decides* that the inputs to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will include, inter alia, submissions, the outcome of the thir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building framework, the secretariat's annual synthes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for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ecretariat's compilation and synthesis report on capacity-building work of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Kyoto Protocol, and reports on the Durban Forum and the capacity-building portal;

81. *Requests*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to prepare annual technical progress reports on its work, and to make these reports available at the sessions of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coinciding with the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82. *Also request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ifth session (November 2019), to review the progress, need for extension, the effectiveness and enhancement of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and to take any ac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with a view to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on enhanc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consistent with Article 11,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83. *Calls upon* all Parties to ensure that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s reflected i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nd in Article 12 of the Agreement are adequately considered in their contribution to capacity-building;

84. *Invit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to explore ways of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² Parties should submit their views via the submissions portal at <<http://www.unfccc.int/5900>>.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o as to enhance actions under the Agreement;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85. *Decides* to establish a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in order to build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apacity, both pre- and post-2020. This initiative will support developing country Parties, upon request, in meeting enhanced transparency requirements as defined in Article 13 of the Agreement in a timely manner;

86. *Also decides* that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will aim:

(a) To strengthen national institutions for transparency-related activities in line with national priorities;

(b) To provide relevant tools, training and assistance for meeting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Article 13 of the Agreement;

(c) To assist i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over time;

87. *Urges and requests*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o make arrangement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as a priority reporting-related need, including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ixth replenishment o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nd future replenishment cycles, to complement existing support under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88. *Decides*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the seventh review of the financial mechanism;

89. *Requests* that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include in its annual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progress of work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85 above starting in 2016;

90. *Decid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provided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including in the scope, frequency and level of detail of reporting, and in the scope of review, and that the scope of review could provide for in-country reviews to be optional, while such flexibilities shall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below;

91. *Also decides* that all Parties, excep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hall submi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3, paragraphs 7, 8, 9 and 10, as appropriate, no less frequently than on a biennial basis, and that the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submit this information at their discretion;

92.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13, of the Agreement, and to define the year of their first and subsequent review and update, as appropriate, at regular intervals, for considera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ourth session, with a view to forwarding them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adoption at its first session;

93. *Also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in developing the recommendations for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above to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 (a)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improved reporting and transparency over time;
- (b) The need to provide flexibility to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 (c) The need to promote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nsistency, and comparability;
- (d) The need to avoid duplication as well as undue burden on Parties and the secretariat;
- (e) The need to ensure that Parties maintain at least the frequency and quality of repor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 (f) The need to ensure that double counting is avoided;
- (g) The need to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94. *Further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when developing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above, to draw on the experiences from and take into account other on-going relevant processes under the Convention;

95.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when developin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above, to consider, inter alia:

- (a) The types of flexibility available to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at need it on the basis of their capacities;
- (b) The consistency between the methodology communicated in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the methodology for reporting on progress made towards achieving individual Parties' respect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c) That Parties report information on adaptation action and planning including, if appropriate, their national adaptation plans, with a view to collectively exchanging information and sharing lessons learned;
- (d) Support provided, enhancing delivery of support for both adaptation and mitigation through, inter alia, the common tabular formats for reporting support, and taking into account issues considered by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on methodologies for reporting on financial information, and enhancing the reporting by developing countries on support received, including the use, impact and estimated results thereof;
- (e) Information in the biennial assessments and other report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other relevant bodies under the Convention;
- (f) Information 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response measures;

96. *Also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when developing recommendations for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above,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suppor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greement;

97. *Further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report on the progress of work on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92 above to future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at this work be concluded no later than 2018;

98. *Decides* that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developed under paragraph 92 above, shall be applied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aris Agreement;

99. *Also decides* that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of this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build upon and eventually supersede th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 established by decision 1/CP.16, paragraphs 40 to 47 and 60 to 64, and decision 2/CP.17, paragraphs 12 to 62, immediately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final biennial reports and biennial update reports;

GLOBAL STOCKTAKE

100.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identify the sources of input for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nd to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a view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king a recommendation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at its first sess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a) Information on:
 - (i) The overall effect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 (ii) The state of adaptation efforts, support, experiences and priorities from the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7, paragraphs 10 and 11, of the Agreement, and reports referred to in Article 13, paragraph 7, of the Agreement;
 - (iii) The mobilization and provision of support;
- (b) The latest report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c) Reports of the subsidiary bodies;

101. *Also request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to provide advice on how the assessment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n inform the global stocktak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its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nd to report on this matter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t its second session;

102. *Further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develop modalities for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nd to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a view to making a recommendation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at its first session;

FACILITATING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103. *Decides* that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shall consist of 12 member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relevant scientific, technical, socio-economic or legal fields, to be elec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with two members each from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United Nations and one member each from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goal of gender balance;

104. *Request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to develop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with a view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completing its work on such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FINAL CLAUSES

105. *Also requests* the secretariat, solely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1 of the Agreement, to make available on its website on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greement as well as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irst session, information on the most up-to-date total and per c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ommunicated by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their national communications,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s, biennial reports or biennial update reports;

IV. ENHANCED ACTION PRIOR TO 2020

106. *Resolves* to ensure the highest possible mitigation efforts in the pre-2020 period, including by:

(a) Urging all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that have not already done so to ratify and implement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b) Urging all Parties that have not already done so to make and implement a mitigation pledge under the Cancun Agreements;

(c) Reiterating its resolve, as set out in decision 1/CP.19, paragraphs 3 and 4, to accelera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constituting the agreed outcome pursuant to decision 1/CP.13 and enhance ambition in the pre-2020 period in order to ensure the highest possible mitigation efforts under the Convention by all Parties;

(d) Inviting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have not submitted their first biennial update repor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e) Urging all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processes under the Cancun Agreements, in a timely manner, with a view to demonstrating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mitigation pledges;

107. *Encourages* Parties to promote the voluntary cancellation by Party and non-Party stakeholders, without double counting of units issued under the Kyoto Protocol, including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that are valid fo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108. *Urges* host and purchasing Parties to report transparently on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ncluding outcomes used to meet international pledges, and emission units issued under the Kyoto Protocol with a view to promoting environmental integrity and avoiding double counting;

109. *Recognizes*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of voluntary mitigation actions and their co-benefits for adaptation,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10. *Resolves* to strengthen, in the period 2016–2020, the existing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mitigation as defined in decision 1/CP.19, paragraph 5(a), and decision 1/CP.20, paragraph 19, taking into account the latest scientific knowledge, including by:

(a) Encouraging Parties, Convention bod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ngage in this process, including, as appropriate,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non-Party stakeholder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suggestions, including from regional events, and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identified during this proces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riorities;

(b) Striving to improve, in consultation with Parties,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by developing country Party and non-Party experts;

(c) Requesting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i) To engage in the technical expert meetings and enhance their efforts to facilitate and support Parties in scaling up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identified during this process;

(ii) To provide regular updates during the technical expert meetings on the progress made in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previously identified during this process;

(iii)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ir activities under this process in their joint annual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d) Encouraging Parties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to obtain assistance to develop economically,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viable project proposals in the high mitigation potential areas identified in this process;

111. *Encourages* the operating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o engage in the technical expert meetings and to inform participants of their contribution to facilitating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identified during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112. *Requests* the secretariat to organize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and disseminate its results, including by:

(a) Organizing, in consultation with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relevant expert organizations, regular technical expert meeting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representing best practices and with the potential to be scalable and replicable;

(b) Updating, on an annual basis, following the meet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a) above and in time to serve as input to the summary for policymak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c) below, a technical paper on the mitigation benefits and co-benefits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for enhancing mitigation ambition, as well as on options for supporting their implementation, information on which should be made available in a user-friendly online format;

(c) Preparing, in consultation with the champ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22 below, a summary for policymakers, with information on specific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representing best practices and with the potential to be scalable and replicable, and on options to support their implementation, as well as on relevant collaborative initiatives, and publishing the summary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eac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s input for the high-level ev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21 below;

113. *Decides* that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should be organized jointly by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and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should take place on an ongoing basis until 2020;

114. *Also decides* to conduct in 2017 an assessment of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so a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115. *Resolves* to enhance the provision of urgent and adequate finance, technology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by developed country Parties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ambition of pre-2020 action by Parties, and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scale up their level of financial support, with a concrete roadmap to achieve the

goal of jointly providing USD 100 billion annually by 2020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while significantly increasing adaptation finance from current levels and to further provide appropriate technology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116. *Decides* to conduct a facilitative dialogue in conjunction with the twenty-secon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assess the progress in implementing decision 1/CP.19, paragraphs 3 and 4, and identify relevant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with a view to identifying ways to enhance the ambition of mitigation efforts by all Parties, including identifying relevant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provision and mobilization of support and enabling environments;

117. *Acknowledges* with appreciation the results of the Lima-Paris Action Agenda, which build on the climate summit convened on 23 September 2014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18. *Welcomes* the efforts of non-Party stakeholders to scale up their climate actions, and *encourages* the registration of those actions in the 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 platform;³

119. *Encourages* Parties to work closely with non-Party stakeholders to catalyse efforts to strengthen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

120. *Also encourages* non-Party stakeholders to increase their engagement in the proces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and paragraph 125 below;

121. *Agrees* to convene, pursuant to decision 1/CP.20, paragraph 21, building on the Lima-Paris Action Agenda and in conjunction with eac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during the period 2016–2020, a high-level event that:

(a) Further strengthens high-level engag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options and actions arising from the proces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and paragraph 125 below, drawing on the summary for policymak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c) above;

(b)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nnouncing new or strengthened voluntary efforts, initiatives and coalition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arising from the proces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and paragraph 125 below and presented in the summary for policymak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c) above;

(c) Takes stock of related progress and recognizes new or strengthened voluntary efforts, initiatives and coalitions;

(d) Provides meaningful and regular opportunities for the effective high-level engagement of dignitaries of Par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ve initiatives and non-Party stakeholders;

122. *Decides* that two high-level champions shall be appointed to act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facilitate through strengthened high-level engagement in the period 2016–2020 the successful execution of existing efforts and the scaling-up and introduction of new or strengthened voluntary efforts, initiatives and coalitions, including by:

³ <<http://climateaction.unfccc.int/>>.

(a) Working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and the current and incoming President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coordinate the annual high-level ev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21 above;

(b) Engaging with interested Parties and non-Party stakeholders, including to further the voluntary initiatives of the Lima-Paris Action Agenda;

(c) Providing guidance to the secretariat on the organization of technical expert meet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a) above and paragraph 130(a) below;

123. *Also decides* that the high-level champ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22 above should normally serve for a term of two years, with their terms overlapping for a full year to ensure continuity, such that:

(a)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wenty-first session should appoint one champion, who should serve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appointment until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second session;

(b)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wenty-second session should appoint one champion who should serve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appointment until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third session (November 2017);

(c) Thereafter, each subsequent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ould appoint one champion who should serve for two years and succeed the previously appointed champion whose term has ended;

124. *Invites* all interested Part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to provide support for the work of the champ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22 above;

125. *Decides* to launch, in the period 2016–2020, a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adaptation;

126. *Also decides* that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adap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will endeavour to identify concrete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s;

127. *Further decides* that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should be organized jointly by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and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conducted by the Adaptation Committee;

128. *Decides* that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will be pursued by:

(a) Facilitating the sharing of good practice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b) Identifying actions that could significantly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s, including actions that could enhance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have mitigation co-benefits;

(c) Promoting cooperative action on adaptation;

(d)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enabling environments and enhance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specific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129. *Also decides* that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adap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will take into account the process, modalities, outputs, outcom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mi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10 above;

130. *Requests* the secretariat to support the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by:

(a) Organizing regular technical expert meeting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s;

(b) Preparing annually, on the basis of the meet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30(a) above and in time to serve as an input to the summary for policymak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12(c) above, a technical paper on opportunities to enhance adaptation action, as well as options to support their implementation, information on which should be made available in a user-friendly online format;

131. *Decides* that in conducting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the Adaptation Committee will engage with and explore ways to take into account, synergize with and build on the existing arrangements for adaptation-related work programmes, bodies and institutions under the Convention so as to ensure coherence and maximum value;

132. *Also decides* to conduct, in conjunction with the assess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20 above, an assessment of th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25 above, so a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133. *Invites* Parties and observer organizations to submit information on the opportun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26 above by 3 February 2016;

V. NON-PARTY STAKEHOLDERS

134. *Welcomes* the efforts of all non-Party stakeholders to addres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including those of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cities and other subnational authorities;

135. *Invites* the non-Party stakehold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34 above to scale up their efforts and support actions to reduce emissions and/or to build resilience and decrease vulnera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demonstrate these efforts via the 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 platform⁴ referred to in paragraph 118 above;

136. *Recognizes* the need to strengthen knowledge, technologies, practices and efforts of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related to addressing a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establishes* a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a holistic and integrated manner;

137. *Also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providing incentives for emission reduction activities, including tools such as domestic policies and carbon pricing;

VI.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MATTERS

138. *Takes note* of the estimated budgetary implications of the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secretariat referred to in this decision and requests that the actions of the secretariat called for in this decision be undertaken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139. *Emphasizes* the urgency of making additiona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actions, including actions referred to in this deci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programme referred to in paragraph 9 above;

⁴ <<http://climateaction.unfccc.int/>>.

140. *Urges* Parties to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for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this decision.

Annex

PARIS AGREEMEN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eing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established by decision 1/CP.17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its seventeenth session,

In pursui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being guided by its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equity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Recognizing the need for an effective and progressive response to the urgent threat of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knowledge,

Also recognizing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Taking full account of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situation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ith regard to funding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cognizing that Parties may be affected not only by climate change, but also by the impacts of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it,

Emphasizing the intrinsic relationship that climate change actions, responses and impacts have with equitable acces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radication of poverty,

Recognizing the fundamental priority of safeguarding food security and ending hunger, and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food production systems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s of a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in accordance with nationally defined development priorities,

Acknowledging that climate change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Parties should,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migrant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s well as gender equality, empowerment of wome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as appropriate, of sinks and reservoirs of the greenhouse gases referred to in the Convention,

Not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integrity of all ecosystems, including oceans, and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recognized by some cultures as Mother Earth, and noting the importance for some of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Affirm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t all levels on the matters addressed in this Agree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engagement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various actors,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s of Partie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lso recognizing that sustainable lifestyles and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 developed country Parties taking the lead,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In addition:

1.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opted in New York on 9 May 1992.
2. “Conference of the Parties” mean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3. “Party” means a Party to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is Agreement, i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bjec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2. This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o reflect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Article 3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l Parties are to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defined in Articles 4, 7, 9, 10, 11 and 13 with the view to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 2. The efforts of all Parties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over time,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4

1. In order to achieve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set out in Article 2, Parties aim to reach global peak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peaking will take longe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o undertake rapid reductions thereafter in accordance with best available science, so a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3.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4.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enhancing their mitigation efforts, and are encouraged to move over time towards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5.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recognizing that enhance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actions.

6.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prepare and communicate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7. Mitigation co-benefits resulting from Parties' adaptation actions and/or economic diversification plans can contribute to mitigation outcomes under this Article.
8. In communicating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ll Parties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9.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very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nd be informed by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10.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consider common time frames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t its first session.
11. A Party may at any time adjust its existing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th a view to enhancing its level of ambition,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13. Parties shall account for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corresponding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arties shall promote environmental integrity,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sure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4. In the context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when recognizing and implementing mitigation actions with respect to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existing methods and guidance under the Convention,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15. Part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cerns of Parties with economies most affected by the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Parties.
16. Partie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 States, that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act jointl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ify the secretariat of the terms of that agreement, including the emission level allocated to each Party within the relevant time period, when they communicate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e secretariat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and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of the terms of that agreement.
17. Each party to such an agree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emission level as set out in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6 abov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3 and 14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13 and 15.
18. If Parties acting jointly do so in the framework of, and together with,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is itself a Party to this Agreement, each member State of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dividually, and together with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emission level as set out in the agreement communicated under paragraph 16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3 and 14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13 and 15.
19. All Parties should strive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mindful of Article 2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Article 5

1. Parties should take action to conserve and enhance, as appropriate, sinks and reservoirs of greenhouse gas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d), of the Convention, including forests.
2.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action to implement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results-based payments, the existing framework as set out in related guidance and decisions already agreed under the Convention for: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for activities relating to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ternative policy approaches, such as 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approaches for the integral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whil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incentivizing, as appropriate, non-carbon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pproaches.

Article 6

1.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3.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voluntary and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ies.
4.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or use by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It shall be supervised by a body designa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nd shall aim:
 - (a) To promote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b) To incentivize and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uthorized by a Party;
 - (c)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mission levels in the host Party, which will benefit from mitig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emission reductions that can also be used by another Party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 (d) To deliver an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5.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used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host Party'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f used by another Party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ensure that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ctivities unde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used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adopt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 its first session.
8.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holistic and balanced non-market approaches being available to Parti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 a coordinated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inter alia,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s appropriate. These approaches shall aim to:
 - (a) Promo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bition;
 - (b) Enhanc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 (c) Enable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across instru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9. A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defined to promote the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this Article.

Article 7

1.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of enhancing adaptive capacity, strengthening resilience and reduc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ing an adequate adaptation response in the context of the temperature goal referred to in Article 2.
2. Parties recognize that adaptation is a global challenge faced by all with local, sub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and that it is a key component of and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ong-term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protect people, livelihoods and ecosystems,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t and immediate needs of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3. The adaptation effort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all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4. Parties recognize that the current need for adaptation is significant and that greater levels of mitigation can reduce the need for additional adaptation efforts, and that greater adaptation needs can involve greater adaptation costs.
5. Parties acknowledge that adaptation action should follow a country-driven, gender-responsive, participatory and fully transparent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vulnerable groups, communities and ecosystems, and should be based on and guided by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as appropriate, traditional knowledg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knowledge systems, with a view to integrating adaptation into relevant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actions, where appropriate.
6.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pport fo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daptation efforts and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7. Parties shoul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n enhancing action on adap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ancun Adaptation Framework, including with regard to:
 - (a) Sharing information, good practice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cluding, as appropriate, as these relate to science, planning, policies and implementation in relation to adaptation actions;
 - (b)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those under the Convention that serve this Agreement, to support the synthesi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rovision of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 to Parties;
 - (c) Strengthening scientific knowledge on climate, including research, systematic observation of the climate system and early warning systems, in a manner that informs climate services and supports decision-making;
 - (d)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identifying effective adaptation practices, adaptation needs, priorities, support provided and received for adaptation actions and efforts, and challenges and gap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couraging good practices;
 - (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durability of adaptation actions.
8. United Nations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are encouraged to support the efforts of Parties to implement the a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7 of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9.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engage in adaptation plann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c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r enhancement of relevant plans, policies and/or contributions, which may include:
 - (a)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s, undertakings and/or efforts;
 - (b) The process to formulate and implement national adaptation plans;
 - (c) Th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y, with a view to formulating nationally determined prioritized actions, taking into account vulnerable people, places and ecosystems;
 - (d) Monitoring and evaluating and learning from adaptation plans,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s; and
 - (e) Building the resilience of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systems, including through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10. Each Party should, as appropriate, submit and update periodically an adaptation communication, which may include its priorities, implementation and support needs, plans and actions, without creating any additional burden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11.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as appropriate, submitted and updated periodically, as a compon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communications or documents, including a national adaptation plan,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2, and/or a national communication.
12. The adaptation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13. Continuous and enhanced international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7, 9, 10 and 11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9, 10 and 11.
14.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inter alia:
 - (a) Recognize adaptation effort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 (b)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 (c) Review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adaptation and support provided for adaptation; and
 - (d) Review the overall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8

1.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verting, minimizing and addressing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and slow onset events, and the ro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ducing the risk of loss and damage.
2.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shall be subject to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nd may be enhanced and strengthened,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3. Parties should enhance understanding, action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as appropriate, on a cooperative and facilitative basis with respect to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4. Accordingly, areas of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to enhance understanding, action and support may include:
 - (a) Early warning systems;
 - (b) Emergency preparedness;
 - (c) Slow onset events;
 - (d) Events that may involve irreversible and permanent loss and damage;
 - (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 (f) Risk insurance facilities, climate risk pooling and other insurance solutions;
 - (g) Non-economic losses;
 - (h) Resilience of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cosystems.
5.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shall collaborate with existing bodies and expert groups under the Agreement, as well as relevant organizations and expert bodies outside the Agreement.

Article 9

1.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th respect to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continuation of thei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2. Other Parties are encouraged to provide or continue to provide such support voluntarily.
3. As part of a global effort,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mobilizing climate finance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instruments and channels, noting the significant role of public funds,

through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supporting country-driven strateg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uch mobilization of climate finance should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previous efforts.

4. The provision of scaled-up financial resources should aim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taking into account country-driven strategies, and the prioritie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have significant capacity constraints, such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nsidering the need for public and grant-based resources for adaptation.
5.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biennially communicate indica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as applicable, including, as available, projected levels of public financial resources to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Other Parties providing resources are encouraged to communicate biennially such information on a voluntary basis.
6.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by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or Agreement bodies on efforts related to climate finance.
7.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transparent and consistent information on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provided and mobilized through public interventions biennially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3, paragraph 13. Other Parties are encouraged to do so.
8.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perating entities, shall serve as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is Agreement.
9. The institutions serving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operating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shall aim to ensure efficient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implified approval procedures and enhanced readiness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of their national climate strategies and plans.

Article 10

1. Parties share a long-term vision on the importance of fully realiz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improve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2. Parties, not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recognizing existing technology deployment and dissemination efforts, shall strengthen cooperative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3. The Technolog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shall serve this Agreement.
4. A technology framework is hereby established to provide overarching guidance to the work of the Technology Mechanism in promoting and facilitating enhanced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pursuit of the long-term v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Accelerating, encouraging and enabling innovation is critical for an effective, long-term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effort shall be, as appropriate, supported, including by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rough financial means, by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for collaborative approach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acilitating access to technology, in particular for early stages of the technology cycle,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6. Support, including financial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cluding for strengthening cooperative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t different stages of the technology cycle, with a view to achieving a balance between support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take into account available information on efforts related to support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ticle 11

1. Capacity-building under this Agreement should enhance the capacity and abil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countries with the least capacity, such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take

effective climate change action, including, inter alia, to implement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s, and should facilitate technology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deployment, access to climate finance, relevant aspects of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nd the transparent, timely and accurat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2. Capacity-building should be country-driven, based on and responsive to national needs, and foster country ownership of Partie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cluding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Capacity-building should be guided by lessons learned, including those from capacity-building activities under the Convention, and should be an effective, iterative process that is participatory, cross-cutting and gender-responsive.
3. All Parties should cooperate to enhance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enhance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actions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4. All Parti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reg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shall regularly communicate on these actions or measures on capacity-building.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regularly communicate progress made on implementing capacity-building plans, policies, actions or measur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5. Capacity-building activities shall be enhanced through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that serve th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at its first session, consider and adopt a decision on the initi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Article 12

Parties shall cooperate in taking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hance climate change education,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steps with respect to enhancing 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3

1. In order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and to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an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with built-in flexibility which takes into account Parties' different capacities and builds upon collective experience is hereby established.
2. The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provide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shall reflect such flexibility.
3. The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build 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be implemented in a facilitative, non-intrusive, non-punitive manner, respectful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void placing undue burden on Parties.
4. The transparency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national communications, biennial reports and biennial update reports,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shall form part of the experience drawn up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under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5.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i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ction in the ligh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including clarity and tracking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Parties' individua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Article 4, and Parties' adaptation actions under Article 7, including good practices, priorities, needs and gaps,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6.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support is to provide clarity on support provided and received by relevant individual Part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ctions under Articles 4, 7, 9, 10 and 11, and, to the extent possible, to provide a full overview of aggregate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7. Each Party shall regularly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a) A national inventory report of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prepared using good practice methodologies acce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agre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 (b) Information necessary to track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under Article 4.
8. Each Party should als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under Article 7, as appropriate.
 9.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and other Parties that provide support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under Article 9, 10 and 11.
 10.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needed and received under Articles 9, 10 and 11.
 11. Information submitted by each Party under paragraphs 7 and 9 of this Article shall undergo a technical expert review,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For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the review process shall include assistance in identifying capacity-building needs. In addition, each Party shall participate in a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 of progress with respect to efforts under Article 9, and its respectiv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12. The technical expert review under this paragraph shall consist of a consideration of the Party's support provided, as relevant, and its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he review shall also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for the Party, and include a review of the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with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flexibility accorded to the Part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view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spectiv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1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at its first session, building on experience from the arrangements related to transparency under the Convention, and elaborating on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 adopt common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as appropriate, for the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14.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15. Support shall also be provided for the building of transparency-related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on a continuous basis.

Article 14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o assess the collective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its long-term goals (referred to as the "global stocktake"). It shall do so in a comprehensive and facilitative manner, considering mitigation, adaptation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upport, and in the light of equity and the best available science.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undertake its first global stocktake in 2023 and every five years thereafter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3. The outcome of the global stocktake shall inform Parties in updating and enhancing, in a nationally determined manner, their actions and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in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action.

Article 15

1. A mechanism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s hereby established.
2.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sist of a committee that shall be expert-based and facilitative in nature and function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non-adversarial and non-punitive. The committee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spectiv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nd report annual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rticle 16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supreme body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decis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y member of the Bureau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n additional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s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keep under regula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sary to promot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Agreement and shall:
 - (a)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 (b)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5.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financial procedures applied under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may be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6.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iat in conjunction with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at is schedul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ubsequent 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7.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be held at such other tim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Party, provided that,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being communicated to the Parties by the secretariat,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8.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any State member thereof or observers thereto not party to the Convention, may be represented at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s observers. Any body or agency,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which is qualified in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which has informed the secretariat of its wish to be represented at a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s an observer, may be so admitted unless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present object. The admission and participation of observers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rticle 17

1. The secretariat established by Article 8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secretariat of this Agreement.
2.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on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and Article 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arrangements mad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The secretariat shall, in addition, exercise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an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rticle 18

1.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established by Articles 9 and 10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respectively, a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functioning of these two bod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Sessions of the meetings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meetings of, respectively,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When the subsidiary bodies serve as the subsidiary bodies of this Agreement, decis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When the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by Articles 9 and 10 of the Convention exercise their functions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this Agreement, any member of the bureaux of those subsidiary bod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n additional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s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19

1. Subsidiary bodies or oth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by or under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serve this Agreement upon a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specify the functions to be exercised by such subsidiary bodies or arrangements.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may provide further guidance to such subsidiary bod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ticle 20

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nd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I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22 April 2016 to 21 April 2017. Thereafter,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it is closed for signatur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2.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becomes a Party to this Agreement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ith one or more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under this Agreement concurrently.
3.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who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Article 21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at least 55 Parties to the Convention accounting in total for at least an estimated 55 percent of th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Solely for the limited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means the most up-to-date amount communicated on or before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3.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Agreement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22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Article 23

1.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on the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2.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thereof and,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a reference to this Agreement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any annexes thereto. Such annexes shall be restricted to lists, forms and any other material of a descriptive nature that is of a scientific, technical, procedural or administrative character.

Article 24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Article 25

1. Each Party shall have one vote, except as provided fo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 versa.

Article 2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rticle 27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Article 28

1. At any time afte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Party, that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2. Any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3. Any Party that withdraws from the Co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also having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Article 29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Paris this twelfth day of December two thousand and fifte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Agreement.

< 부록 2 > Paris Agreement



Paris Agreemen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eing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established by decision 1/CP.17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its seventeenth session,

In pursui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being guided by its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equity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Recognizing the need for an effective and progressive response to the urgent threat of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knowledge,

Also recognizing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Taking full account of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situation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ith regard to funding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cognizing that Parties may be affected not only by climate change, but also by the impacts of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it,

Emphasizing the intrinsic relationship that climate change actions, responses and impacts have with equitable acces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radication of poverty,

Recognizing the fundamental priority of safeguarding food security and ending hunger, and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food production systems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s of a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in accordance with nationally defined development priorities,

Acknowledging that climate change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Parties should,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migrant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s well as gender equality, empowerment of wome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as appropriate, of sinks and reservoirs of the greenhouse gases referred to in the Convention,

Not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integrity of all ecosystems, including oceans, and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recognized by some cultures as Mother Earth, and noting the importance for some of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Affirm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t all levels on the matters addressed in this Agree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engagement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various actors,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s of Partie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lso recognizing that sustainable lifestyles and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 developed country Parties taking the lead,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In addition:

- (a)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opted in New York on 9 May 1992;
- (b) “Conference of the Parties” mean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 (c) “Party” means a Party to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is Agreement, i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bjec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and
-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2. This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o reflect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Article 3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l Parties are to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defined in Articles 4, 7, 9, 10, 11 and 13 with the view to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 2. The efforts of all Parties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over time,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4

1. In order to achieve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set out in Article 2, Parties aim to reach global peak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peaking will take longe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o undertake rapid reductions thereafter in accordance with best available science, so a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3.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4.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enhancing their mitigation efforts, and are encouraged to move over time towards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5.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recognizing that enhance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actions.
6.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prepare and communicate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7. Mitigation co-benefits resulting from Parties' adaptation actions and/or economic diversification plans can contribute to mitigation outcomes under this Article.
8. In communicating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ll Parties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9.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very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be informed by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10.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consider common time frames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t its first session.
11. A Party may at any time adjust its existing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th a view to enhancing its level of ambition,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1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13. Parties shall account for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corresponding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arties shall promote environmental integrity,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sure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14. In the context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when recognizing and implementing mitigation actions with respect to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existing methods and guidance under the Convention,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15. Part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cerns of Parties with economies most affected by the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Parties.

16. Partie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 States, that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act jointl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ify the secretariat of the terms of that agreement, including the emission level allocated to each Party within the relevant time period, when they communicate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e secretariat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and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of the terms of that agreement.

17. Each party to such an agree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emission level as set out in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6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3 and 14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13 and 15.

18. If Parties acting jointly do so in the framework of, and together with,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is itself a Party to this Agreement, each member State of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dividually, and together with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emission level as set out in the agreement communicated under paragraph 16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3 and 14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13 and 15.

19. All Parties should strive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mindful of Article 2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Article 5

1. Parties should take action to conserve and enhance, as appropriate, sinks and reservoirs of greenhouse gas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d), of the Convention, including forests.

2.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action to implement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results-based payments, the existing framework as set out in related guidance and decisions already agreed under the Convention for: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for activities relating to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ternative policy approaches, such as 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approaches for the integral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whil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incentivizing, as appropriate, non-carbon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pproaches.

Article 6

1.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voluntary and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ies.

4.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for use by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It shall be supervised by a body designa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shall aim:

(a) To promote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b) To incentivize and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uthorized by a Party;

(c)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mission levels in the host Party, which will benefit from mitig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emission reductions that can also be used by another Party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d) To deliver an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5.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used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host Party'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f used by another Party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ensure that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ctivities unde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used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dopt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 its first session.

8.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holistic and balanced non-market approaches being available to Parti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 a coordinated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inter alia,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s appropriate. These approaches shall aim to:

(a) Promo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bition;

(b) Enhanc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c) Enable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across instru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9. A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defined to promote the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this Article.

Article 7

1.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of enhancing adaptive capacity, strengthening resilience and reduc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ing an adequate adaptation response in the context of the temperature goal referred to in Article 2.

2. Parties recognize that adaptation is a global challenge faced by all with local, sub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and that it is a key component of and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ong-term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protect people, livelihoods and ecosystems,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t and immediate needs of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3. The adaptation effort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all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4. Parties recognize that the current need for adaptation is significant and that greater levels of mitigation can reduce the need for additional adaptation efforts, and that greater adaptation needs can involve greater adaptation costs.

5. Parties acknowledge that adaptation action should follow a country-driven, gender-responsive, participatory and fully transparent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vulnerable groups, communities and ecosystems, and should be based on and guided by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as appropriate, traditional knowledg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knowledge systems, with a view to integrating adaptation into relevant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actions, where appropriate.

6.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pport fo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daptation efforts and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7. Parties shoul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n enhancing action on adap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ancun Adaptation Framework, including with regard to:

(a) Sharing information, good practice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cluding, as appropriate, as these relate to science, planning, policies and implementation in relation to adaptation actions;

(b)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those under the Convention that serve this Agreement, to support the synthesi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rovision of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 to Parties;

(c) Strengthening scientific knowledge on climate, including research, systematic observation of the climate system and early warning systems, in a manner that informs climate services and supports decision-making;

(d)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identifying effective adaptation practices, adaptation needs, priorities, support provided and received for adaptation actions and efforts, and challenges and gap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couraging good practices; and

(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durability of adaptation actions.

8. United Nations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are encouraged to support the efforts of Parties to implement the a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7 of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9.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engage in adaptation plann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c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r enhancement of relevant plans, policies and/or contributions, which may include:



- (a)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s, undertakings and/or efforts;
 - (b) The process to formulate and implement national adaptation plans;
 - (c) Th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y, with a view to formulating nationally determined prioritized actions, taking into account vulnerable people, places and ecosystems;
 - (d) Monitoring and evaluating and learning from adaptation plans,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s; and
 - (e) Building the resilience of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systems, including through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10. Each Party should, as appropriate, submit and update periodically an adaptation communication, which may include its priorities, implementation and support needs, plans and actions, without creating any additional burden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11.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as appropriate, submitted and updated periodically, as a compon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communications or documents, including a national adaptation plan,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2, and/or a national communication.
12. The adaptation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13. Continuous and enhanced international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7, 9, 10 and 11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9, 10 and 11.
14.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inter alia:
- (a) Recognize adaptation effort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 (b)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 (c) Review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adaptation and support provided for adaptation; and
 - (d) Review the overall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8

1.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verting, minimizing and addressing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and slow onset events, and the ro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ducing the risk of loss and damage.
2.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shall be subject to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may be enhanced and strengthened,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Parties should enhance understanding, action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as appropriate, on a cooperative and facilitative basis with respect to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4. Accordingly, areas of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to enhance understanding, action and support may include:
 - (a) Early warning systems;
 - (b) Emergency preparedness;
 - (c) Slow onset events;
 - (d) Events that may involve irreversible and permanent loss and damage;
 - (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 (f) Risk insurance facilities, climate risk pooling and other insurance solutions;
 - (g) Non-economic losses; and
 - (h) Resilience of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cosystems.
5.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shall collaborate with existing bodies and expert groups under the Agreement, as well as relevant organizations and expert bodies outside the Agreement.

Article 9

1.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th respect to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continuation of thei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2. Other Parties are encouraged to provide or continue to provide such support voluntarily.
3. As part of a global effort,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mobilizing climate finance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instruments and channels, noting the significant role of public funds, through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supporting country-driven strateg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uch mobilization of climate finance should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previous efforts.
4. The provision of scaled-up financial resources should aim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taking into account country-driven strategies, and the prioritie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have significant capacity constraints, such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nsidering the need for public and grant-based resources for adaptation.
5.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biennially communicate indica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as applicable, including, as available, projected levels of public financial resources to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Other Parties providing resources are encouraged to communicate biennially such information on a voluntary basis.
6.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by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or Agreement bodies on efforts related to climate finance.
7.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transparent and consistent information on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provided and mobilized through public interventions biennially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3, paragraph 13. Other Parties are encouraged to do so.

8.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perating entities, shall serve as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is Agreement.

9. The institutions serving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operating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shall aim to ensure efficient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implified approval procedures and enhanced readiness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of their national climate strategies and plans.

Article 10

1. Parties share a long-term vision on the importance of fully realiz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improve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2. Parties, not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recognizing existing technology deployment and dissemination efforts, shall strengthen cooperative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3. The Technolog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shall serve this Agreement.

4. A technology framework is hereby established to provide overarching guidance to the work of the Technology Mechanism in promoting and facilitating enhanced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pursuit of the long-term v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Accelerating, encouraging and enabling innovation is critical for an effective, long-term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effort shall be, as appropriate, supported, including by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rough financial means, by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for collaborative approach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acilitating access to technology, in particular for early stages of the technology cycle,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6. Support, including financial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cluding for strengthening cooperative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t different stages of the technology cycle, with a view to achieving a balance between support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shall take into account available information on efforts related to support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ticle 11

1. Capacity-building under this Agreement should enhance the capacity and abil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countries with the least capacity, such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take effective climate change action, including, inter alia, to implement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s, and should facilitate technology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deployment, access to climate finance, relevant aspects of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nd the transparent, timely and accurat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2. Capacity-building should be country-driven, based on and responsive to national needs, and foster country ownership of Partie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cluding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Capacity-building should be guided by lessons learned, including those from capacity-building activities under the Convention, and should be an effective, iterative process that is participatory, cross-cutting and gender-responsive.

3. All Parties should cooperate to enhance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enhance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actions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4. All Parti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reg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shall regularly communicate on these actions or measures on capacity-building.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regularly communicate progress made on implementing capacity-building plans, policies, actions or measur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5. Capacity-building activities shall be enhanced through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that serve th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t its first session, consider and adopt a decision on the initi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Article 12

Parties shall cooperate in taking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hance climate change education,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steps with respect to enhancing 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3

1. In order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and to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an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with built-in flexibility which takes into account Parties' different capacities and builds upon collective experience is hereby established.

2. The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provide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shall reflect such flexibility.

3. The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build 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be implemented in a facilitative, non-intrusive, non-punitive manner, respectful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void placing undue burden on Parties.

4. The transparency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national communications, biennial reports and biennial update reports,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shall form part of the experience drawn up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under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5.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i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ction in the ligh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including clarity and tracking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Parties' individua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Article 4, and Parties' adaptation



actions under Article 7, including good practices, priorities, needs and gaps,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6.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support is to provide clarity on support provided and received by relevant individual Part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ctions under Articles 4, 7, 9, 10 and 11, and, to the extent possible, to provide a full overview of aggregate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7. Each Party shall regularly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A national inventory report of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prepared using good practice methodologies acce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agre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b) Information necessary to track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under Article 4.

8. Each Party should als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under Article 7, as appropriate.

9.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and other Parties that provide support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under Articles 9, 10 and 11.

10.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needed and received under Articles 9, 10 and 11.

11. Information submitted by each Party under paragraphs 7 and 9 of this Article shall undergo a technical expert review,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For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the review process shall include assistance in identifying capacity-building needs. In addition, each Party shall participate in a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 of progress with respect to efforts under Article 9, and its respectiv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12. The technical expert review under this paragraph shall consist of a consideration of the Party's support provided, as relevant, and its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he review shall also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for the Party, and include a review of the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with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flexibility accorded to the Part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view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spectiv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1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t its first session, building on experience from the arrangements related to transparency under the Convention, and elaborating on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 adopt common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as appropriate, for the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14.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15. Support shall also be provided for the building of transparency-related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on a continuous basis.



Article 14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o assess the collective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its long-term goals (referred to as the “global stocktake”). It shall do so in a comprehensive and facilitative manner, considering mitigation, adaptation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upport, and in the light of equity and the best available science.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undertake its first global stocktake in 2023 and every five years thereafter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The outcome of the global stocktake shall inform Parties in updating and enhancing, in a nationally determined manner, their actions and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in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action.

Article 15

1. A mechanism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s hereby established.
2.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sist of a committee that shall be expert-based and facilitative in nature and function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non-adversarial and non-punitive. The committee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spectiv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nd report annual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16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supreme body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decis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y member of the Bureau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n additional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s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keep under regula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sary to promot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Agreement and shall:
 - (a)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 (b)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5.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financial procedures applied under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may be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6.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iat in conjunction with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at is schedul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ubsequent 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7.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be held at such other tim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Party, provided that,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being communicated to the Parties by the secretariat,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8.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any State member thereof or observers thereto not party to the Convention, may be represented at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s observers. Any body or agency,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which is qualified in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which has informed the secretariat of its wish to be represented at a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s an observer, may be so admitted unless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present object. The admission and participation of observers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rticle 17

1. The secretariat established by Article 8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secretariat of this Agreement.

2.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on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and Article 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arrangements mad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The secretariat shall, in addition, exercise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an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18

1.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established by Articles 9 and 10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respectively, a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functioning of these two bod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Sessions of the meetings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meetings of, respectively,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When the subsidiary



bodies serve as the subsidiary bodies of this Agreement, decis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When the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by Articles 9 and 10 of the Convention exercise their functions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this Agreement, any member of the bureaux of those subsidiary bod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n additional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s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19

1. Subsidiary bodies or oth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by or under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serve this Agreement upon a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specify the functions to be exercised by such subsidiary bodies or arrangements.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provide further guidance to such subsidiary bod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ticle 20

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nd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I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22 April 2016 to 21 April 2017. Thereafter,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it is closed for signatur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2.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becomes a Party to this Agreement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ith one or more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under this Agreement concurrently.

3.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who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Article 21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at least 55 Parties to the Convention accounting in total for at least an estimated 55 per cent of th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Solely for the limited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means the most up-to-date amount communicated on or before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3.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Agreement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22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Article 23

1.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on the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2.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thereof and,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a reference to this Agreement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any annexes thereto. Such annexes shall be restricted to lists, forms and any other material of a descriptive nature that is of a scientific, technical, procedural or administrative character.

Article 24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greement.

Article 25

1. Each Party shall have one vot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 versa.

Article 2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rticle 27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Article 28

1. At any time afte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Party, that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2. Any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3. Any Party that withdraws from the Co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also having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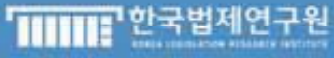
Article 29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Paris this twelfth day of December two thousand and fifte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Agreemen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2

국제투자법 분야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 부록 ▶ 1. TPP- Final- Text- Investment
2. TPP- Final- Text- Preamble

김 연 식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연식교수는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2012년 헌법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활동 분야는 헌법 및 국제투자법의 관계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 연 식

Abstract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약어로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협정이다. 2015년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것인지 성급하게 결정짓기 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득과 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자협정에 비해 TPP 투자장(Chapter 9)이 가진 규범적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TPP는 기존의 한미-FTA에 비해 좀 더 세밀하게 규범적 내용을 구체화한 흔적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재의 공정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미국이 맺은 다른 어떤 투자협정보다 TPP가 국가규제권한의 정당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TPP 가입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당한 정부 규제 권한 보장과 같이 한미-FTA에 비해 개선된 점을 강조하고 널리 알려져 맹목적 반미정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적 평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개별적 권한 유보를 기존의 TPP 가입국이 가지고 있는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TPP에서 개별국가에 어

떠한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당사국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I. 들어가며

1. 국제경제 패턴 변화에 따른 국제투자 활성화

220세기가 무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투자의 시대이다. 20세기에 국제경제는 주로 한 국가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형태였다. 무역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오래된 국제경제활동이고, 여전히 국제경제활동의 주류이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무역에 못지않게 국제투자 역시 국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투자는 한 국가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서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글로벌 사경제 주체들은 물건을 배에 실어서 외국에 판매하기보다 직접 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판매하려고 한다.

한편, 오늘날 많은 국가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자국에 투자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 국가가 얼마나 부자인가는 취업률이나 소비지수와 같이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로 드러난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에 해외투자는 자원 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 시설 투자 등에 한정되었다. 오늘날 해외투자는 금융, 부동산, 프랜차이즈 산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 국제투자 영역에서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

투자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국제투자 영역에서도 무역 영역처럼 보편적 법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약어로 **MAI**)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에 ‘경제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OECD**)는 국가 간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OECD**의 시도는 투자협정 초안의 사전공개 후 범세계적 반세계화 여론에 직면하였다.

당시에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가의 주권적 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투자하려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투자 유치국은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개별 국가는 고유한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다루지만, **MAI**는 국가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관련 법률을 단순화·획일화하게 된다.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에게는 국내법에 따른 해외투자 관련 조치가 투자협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협정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개별 주권국가에 가진 규제권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OECD**가 주도하였던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은 실패하였다.

MAI 실패 이후에, 개별 국가들은 **WTO**와 같은 단일하고 초국적인 국제규범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적 틀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맺어진다. 두 개의 국가 간에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약어로 **BIT**)이라 부르고, 특정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가 투자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지역투자협정(**Regional Investment Treaty[Agreement]**, 약어로 **RIT[RIA]**)이라고 한다. 초기의

투자협정과 달리 오늘날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약어로 NAFTA)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약어로 한미-FTA)처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어로 FTA)의 일부에 투자협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3. 국제투자규범에서 헤게모니 축의 변동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투자규범의 헤게모니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투자규범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유럽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였다. 식민지 시절 해외투자는 주로 투자 모국이 지배한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수탈을 위해 필요한 설비 투자(유전, 광산)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독립국들은 경제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국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하여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자국 영토 내의 해외 자본 또는 시설들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곤 하였다. 이 자본 또는 시설의 주인들은 주로 유럽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이들을 쫓아낸 신생독립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그만큼 상호불신도 여전히 컸다. 제국주의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처가 필요했다.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기존의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개발도상국들의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유럽 기업들은 국유화 소송돌이에 휩싸여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언제든지 공익이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신생독립국들은 해외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외세를 축출은 하였지만, 계속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및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유럽 선진

국들의 투자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초기 유럽이 주도한 국제투자협정체제는 제국주의 이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상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투자규범은 상호 불신을 상호 신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협정을 통한 국제법적 차원의 투자 보호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선진국과 그 기업은 국가의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는 국제투자규범 체계의 효력을 담보로 삼아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1959년에 독일과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맺은 후에 수많은 유럽 선진국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투자협정을 통해 제국주의 이후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식민지 시장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런데 유럽이 주도했던 국제투자협정체제의 헤게모니는 1990년 후반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체결한 NAFTA의 투자장이었다. 미국은 원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약어로 WTO)가 중심이 되는 다자간 경제 질서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WTO와 같은 다자간협정체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예전만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WTO 체제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자국의 입맛에 맞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투자 분야에서도 MAI가 실패하면서 다자간 규범 모델 구축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양자 간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 체제를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NAFTA 제11장으로 알려진 투자협정과 그에 따른 중재판정들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투자규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NAFTA가 발효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자-국가 중재라는 초국적 장치를 통해 국가 규제의 부당성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NAFTA 중재 선례를 보고,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모국이 맺은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 대상국이 취한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투자협정의 숫자

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중재판정의 수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투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투자협정문 성안 과정에서 **NAFTA** 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투자자-국가 중재판정부는 **NAFTA** 판정을 선례로 삼아 중재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투자규범 발전에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오늘날 국제투자 법체계가 발달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법적 구제장치를 통해 자신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무력화하는데 국제투자 법체계를 악용하기도 하였다. 환경정책이나 보건사업과 같은 다양한 공공정책이 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자, 미국은 투자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가 누리는 권리와 국가가 가지는 정당한 규제 권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이 투자협정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한 **90년대** 초기에는 미국은 해외에서 자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NAFTA** 중재판정을 겪으면서, 미국은 해외에 있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미국의 공공정책 역시 해외 투자자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미국은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2004년 「투자협정 표준문안」(2004 US Model BIT)**을 만들었다.¹

그 첫 성과는 한미-FTA 이었다. 물론 한미-FTA 를 체결할 때에도 한미-FTA 가 제 2의 **NAFTA** 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미국이 맺었던 다른 어떤 투자협정보다 한미-FTA 투자협정은 국가가 가진 정당한 규제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¹ 이 표준문안은 2012년에 개정되었다. 2012 U. 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CIEP%20Meeting.pdf> [2016년 7월 29일 방문]

이처럼 현재까지 미국은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규제행사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는 최근에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TPP 투자협정문을 분석할 필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시작하였다. 사실 창설 초기에 이 협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국제투자법 차원에서 TPP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약어로 EU) 사이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약어로 TTIP)에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TPP 투자 관련 규범은 가장 진보한 형태의 투자협정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TPP는 TTIP와 함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TPP 제9장(투자)의² 규범적 특징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TPP가 타결된 이후에 뒤늦게 참여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비준과

2 TPP 협정문,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 (2016년 7월 29일 방문)

관련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TPP 는 약 1년에서 2년이 지나야 실제로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TPP 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TPP 가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TPP 를 추진하고 있다. 복잡 미묘한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 전략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도 TPP 가입 여부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TPP 최종 가입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짓기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득과 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³ 이런 맥락에서 TPP 투자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TPP 에 대한 종합적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TPP 제9장(투자)이 기존의 투자협정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그 특징적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한미- FTA 와 비교하여 TPP 관련 규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실 TPP 는 기본적으로 US Model BIT 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와 동일한 부분을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 FTA 에서 한발 더 나아간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TPP 의 특징적인 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한다.⁴

3 김형주, “TPP 가입 서두를 필요 없다”, 시사저널, 1357호, 2015년 10월 14일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3935> (2016년 7월 29일 방문).

4 이러한 맥락에서 TPP 협정문을 번역할 때 한미- FTA와 동일한 부분은 한미- FTA 공식 번역문(<http://www.fta.go.kr/us/doc/1/> [2016년 7월 29일 방문])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II. TPP 투자 규범의 내용

1. 실체적 투자보호 규범

(1) 서문

TPP 서문은 투자자의 권리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AFTA 협정이 체결되었던 90년대 이후에 투자협정이 지나치게 투자자의 이익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미국은 「투자협정 표준문안」(Model BIT)을 개정하여 국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 표준문안이 가진 기본 방향은 한미-FTA 투자장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런데 TPP는 한미-FTA와 같은 기존의 투자협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존중을 서문에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TPP는 서문에서 동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TPP의 주된 목적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국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규정을 통해 투자와 무역에 관한 예측가능(predictable)한 법적·상업적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TPP 협정문 서문은 투자자의 보호 못지않게 국가의 규제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협정문 서문은 입법 및 규제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공복지(public welfare)를 보호하며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을 보호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s)를 인정한다. 여기서 정당한 공공복지에는 공중 보건(public health), 안전(safety), 환경(the environment), 멸종 또는 고갈될 위기의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의 보호(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금융시스템의 보전 및 안정성(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그리고 공중도덕(public morals)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 시스템의 도입, 유지 및 변경

할 권리를 서문 내 별도 조문에서 따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① 투자의 개념

투자의 개념 정의는 한미-FTA의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다. TPP는 제9.1조 정의 조항에서 투자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 제11.28조와 거의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존의 투자협정과 달리 TPP는 명문으로 투자의 개념에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과 명령을 제외 하였다. 사실 그동안 국제투자법에서는 사법판결이 투자자-국가 중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TPP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의 대상이 되는 ‘조치’(measure)에 사법부의 판결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 또는 명령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 투자의 개념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의 물적 범위를 한정 하였다.

그 외에 TPP는 투자의 형태에 관하여 한미-FTA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PP 제9.1조 각주 10)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의 결과로서 만기가 임박한 지급 청구 등은 투자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투자자의 범위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TPP는 한미-FTA와 유사하게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TPP는 투자자의 범위에서 국영 기업(state enterprise)을 배제함으로써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

영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당사국의 기업(enterprise of a Party)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TPP 는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FTA 의 경우에는 “ 이중 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한미- FTA 제11.28조) 고 하여 체결 당사국과의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중 국적자를 보호 범위에서 배제한다. 이에 반해 TPP 는 이중 국적자를 투자보호의 효력이 미치는 투자자의 범위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청구 적격을 제한할 뿐이다.(TPP 제9.1조) 이러한 규정 방식을 보면, TPP 는 이중국적자의 소송 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 이중 국적자인 투자자의 권리 남용을 통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TPP 는 명목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자자- 국가 중재에 투자자 자신의 모국을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TPP 는 제9.1조 정의 규정에서 한미- FTA 와 같이 청구인을 다른 쪽 국가와 분쟁에 놓인 당사국의 투자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투자자가 다른 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 대하여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한다. (TPP 제9.1조)

(3) 최혜국 대우 조항(Most Favoured-Nation Treatment)

소위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불리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두 계약국 중 한쪽이 제3국에 이미 부여한 이익 또는 권리를 다른 한쪽에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11.4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관한 법리 혼란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

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실제적 권리 규범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에까지 확대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실제로 여러 중재판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TPP 는 제9.7조 제3항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서 언급하는 대우는 동 협약 제2절(Section B)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또는 메커니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4)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그동안 국제투자법 학계와 실무에서는 대우의 최소기준 또는 최소기준대우와 관련하여 과연 최소기준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초기에 NAFTA 제1105조 제1항은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대우 및 완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소기준대우의 실제적 내용인 국제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었다. 이후 NAFTA 공동위원회는 NAFTA 제1105조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은 바로 국제 관습법 이상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나중에 한미- FTA 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되었고, 이것은 큰 변화 없이 TPP 제9.6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만, TPP 에서는 최소기준대우의 내용을 보충하는 몇 가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기대(investor's expectation)와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투자에 손해 또는 손실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당사국의 정부 보조금 및 무상 교부가 지급, 갱신, 유지되지 않았거나 수정 또는 삭감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5) 수용

① 수용에 관한 일반 규정(TPP 제9.8조)

수용에 관한 조항은 한국에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TPP의 수용 관련 조항은 한미-FTA를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의 관련 조항과 유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당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

우선, TPP 제9.8조(수용 및 보상)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수용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TPP는 “공공 목적”(public purpose)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TPP 제9.8조 각주 17)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 목적은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서 국내법은 이 개념 또는 유사한 개념을 “공익”(public interests) 또는 “공적 사용”(public use)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어 공공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브루나이의 경우에는 브루나이가 자국의 「토지법」(Land Code)과 「토지 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말레이시아가 1960년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 1960)과 사바(Sabah)주의 1950년 「토지수용명령」(Land Acquisition Ordinance 1950) 및 사라왁(Sarawak) 주의 1958년 「토지법」(Land Code 1958)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으로 수용할 때에는 TPP 제9.8조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PP 제9.8조는 지적재산권의 박탈 또는 변동에 대하여 수용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어로 TRIPS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의 발동이나 지적 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형성에는 수용에 관한 TPP 제 9.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조치가 TPP 협정 제18장의 지적 재산권과 TRIPS 협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TPP 는 동 조항에서 지적 재산권의 취소(revocation)와 제한(limitation)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의 취소는 그러한 권리를 폐지(cancellation) 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nullification)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재산권의 제한은 그러한 권리의 효력이 제외되는 부분을 두는 것(exception)을 의미한다. (TPP 제9.8조 각주 19))

또한 TPP 제9.8조 제6항은 당사국이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 갱신 또는 유지 하거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을 변경 또는 삭감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자체만으로 무조건 수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을 지급, 갱신 또는 유지하는 법 또는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commitment)이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의 발급, 갱신, 변경, 삭감 및 유지에 부가되는 어떠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따를 경우에는 그 자체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간접수용 (부속서 9- B)

TPP 간접수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부속서에서 간접수용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간접수용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TPP 는 한미- FTA 와 유사하게 “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 정부 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에 근거한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the extent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 backed expectation) 그리고 “ 정부 행위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요소 중에서 투자에 근거한 기대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당한 정도로(to the extent relevance)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달려 있다. TPP 부속서

9- B 각주 36)에 따르면, 투자에 근거한 기대의 합리성 판단에 투자자가 정부로부터 구속력 있는 서면 확인(binding written assurances)을 받았는지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 regulation) 또는 특정 영역에서 정부 규제의 잠재성(the potential for government regulation)등도 기대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한편, 한미- FTA 와 마찬가지로 TPP 역시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legitimate public welfare purpose)으로 비차별적으로 규제한다면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TPP 협정문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TPP 부속서 9- B 는 공공보건, 안전 및 환경 등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TPP 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보건 보호 및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 제품을 포함한 조제약, 진단 기구, 백신, 의료 도구, 유전자 요법과 기술, 건강관련 지원과 건강 용구 그리고 혈액 및 혈액 관련 제품 등의 생물학적 규제, 가격 책정 및 공급 및 상환 등은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TPP 부속서 9- B 각주 37))

③ 토지에 관한 수용의 특칙(부속서 9- C)

마지막으로 부속서 9- C 에는 각국의 토지 법제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싱가포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국내 입법(「토지수용법」 Land Acquisition Act)과 후속 개정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상의 액수가 정해지며 그에 따라 시가배상을 한다. 특히 보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은 TPP 투자협정이 효력을 발하게 될 당시에 적용되던 입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 방법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한편, 베트남이 토지를 직접 수용하려 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입법에 규정된 목적에 대해 (Land Law, Law No.45/ 2013/QH13 과 Decree 44/2014/ND- CP Regulating Land Prices), 국내입법의 보상 규정에 따라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송금

① 송금에 관한 규정 개요

TPP 제9.9조는 투자자가 투자자의 모국 내외로 적용 대상 투자에 관한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와 다르게 **TPP**는 적용 대상 투자에 관한 현물 수익(**returns in kind**)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 자신과 적용 대상 투자 또는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물수익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당사국은 그 합의에 따라 승인되거나 규정된 대로 현물수익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TPP 제9.9조 제3항**)

물론 한미-FTA와 유사하게 **TPP 제9.9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⁵와 관련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그리고, 현물수익이 **TPP 제9.9조 제4항**에 따른 법 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해 현물수익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수익 제한에 관한 특칙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현물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TPP 제9.9조 제4항**)

② 개별국가별 적용 예외조항

TPP는 송금에 대하여 개별 국가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TPP** 부속서 9-E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부속서 9-E를 바탕으로 칠레 중앙은행을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및 해외 지급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부속서 9-E 각주 40)) 칠레 중앙은행은 자국법에 따라⁶ 송금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⁷ 또한 여기서 언급한 제한 또는 한정 조치들은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에서

5 예를 들면, 형사범죄, 또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등. (**TPP 제9.9조 제4항 참조**)

6 「중앙은행 구성 조직법」(The Constitutional Organic Law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일반은행법」(General Banking Act) 및 「증권 시장법」(Securities Market Law).

오는 예금, 투자 또는 채권들이 유보조건(reserve requirement, encaje)에 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구성 조직법에 따라 적용하는 유보조건은 송금된 양의 총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그 기간은 넘을 수가 없다.

(7) 이행조건(Performance Requirements)

① 이행조건 조항의 의의

투자자가 투자를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과 같은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과 관련한 이익을 수령할 경우 당사국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의무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자가 제품생산 시에 일정 비율의 국내 원료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투자 시 투자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이행 부과가 남용된다면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의무이행 부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②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이행조건 부과 제한

TPP는 이전의 한미-FTA와 달리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행조건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TPP 제9.10조 제1항 (h)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의 구입, 사용 및 선호를 장려하는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꾸로 특정한 기술의 구매, 사용, 선호를 금지하는 조건 역시 부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같은 조항 (i)에서는, 당사국이 비사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7 이러한 조치는 칠레 내외로의 즉시 지급(current payment) 및 송금(자본 이동), 그와 관련한 통화 거래를 제한(restriction) 하거나 한정(limitation)하는 제도의 창설을 포함한다.

방식으로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⁸ 만약, 이행조건이 부과되거나 시행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투자자와 당사국 국민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된 미래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하여 당사국이 이행조건을 붙인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액수의 기술료(royalty)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 기간을 한정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③ 예외 조항을 통한 국가 규제권 보장

그리고 TPP 제9.10조 제3항은 TPP 제9.10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TPP 제9.10조 제1항 (i)은 라이선스 계약에 이행조건을 부과할 때 기술료의 액수와 요율 및 계약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TPP 제9.10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보수(remuneration)로서 관정부(tribunal)에 이행조건이 부과되거나 이행되는 경우에는 TPP 제9.10조 제1항(i)는 적용되지 않는다. (TPP 제9.10조 제3항 ©)

같은 항 (h)는 TPP 제9.10조 제1항 (h) 및 (i)에 따른 특허 및 기술 관련 이행조건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 및 기술 관련 이행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국이 자의적이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행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복지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위장된 형태의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을 가해서도 안 된다. (TPP 제9.10조 제3항 (h))

마지막으로 TPP 제9.10조 제4항은 당사국이 해외투자 허용 조건으로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노동자를 고용 또는 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또는 훈련 의무조항은 간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전수를 위해 활용하는 이행조건 부과 방식이다. TPP

8 이 규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이러한 형태의 이행조건 부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내용상 특정한 기술, 생산 과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자국 내의 사람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TPP 제9.10조 제4항)

(8) 비합치 조치의 의미(Non-Conforming Measures)

① 일반적 의미

비합치 조치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등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사국에 협정 준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다.

② 지방정부가 취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규정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TPP 제9.12조는 한미-FTA와 같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도 비합치 조치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와 달리 TPP는 이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국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를 만든다고 판단하면,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고려해야 하며, 조치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TPP 제9.12조 제3항)

③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과의 관계

TPP 투자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 대우 조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비합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TPP 제9.12조 제5항에 따르면 TPP 제9.4조(내국민 대우)는 TPP 제18.8조가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derogation)에 해당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TPP 제18장 지적 재산권 장이 아니라 TRIPS 협정 제3조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derogation)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TPP 투자장에 있는 내국민 대우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TPP 제9.5조인 최혜국대우 조항은 TRIPS 협정 제5조에 속하는 조치, 또는 TPP 18.8조(내국민 대우) 또는 TRIPS 협정 제4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제외 또는 이탈(derogation)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비합치 조치에 대한 국가별 특별 규정

TPP 제9.12조 제1항 (c)에 따르면 규범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은 현행 비합치 조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개정에도 미친다. 다만, 그러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TPP 제9장의 규정과 합치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역진방지(Ratchet Mechanism)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속서 9-I은 베트남에 관하여 3년 동안 역진방지 조항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있던 비합치 조치가 후속 개정에 의해서도 기존의 비합치 조치에 비해 합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TPP 제9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속서 9-I (b)는 베트남이 TPP 제9장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과 합치성이 떨어지는 개정을 추진할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베트남은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뢰의 근거가 되었던 투자자의 권리와 혜택을 철회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이 TPP 제9.12조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를 개정할 때 그 개정 내용이 개정 바로 직전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킨다면, 베트남 정부는 개정하기 전 최소한 90일 전에 구체적 내용을 타방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9) 투자와 환경, 보건 및 기타의 규제 목적들

TPP 제9.16조에 따르면 이 장(章)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 보건 등 기타의 규제 목적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 장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조치의 채택, 유지 또는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물론 한미-FTA의 경우에도 제11.10조에서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정당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TPP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건 문제까지 정당한 규제권 행사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 “기타의 규제 목적들” (**other regulatory objectives**)이란 용어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TPP는 정당한 국가 규제권의 개념적 범위를 미래를 향해 열어 놓고 있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존의 FTA와 달리 TPP 제9.17조는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고 지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TPP는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나 그 관할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며, 각 당사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2. 투자 분쟁에 관한 규범

(1) 협의 및 협상(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PP는 투자자-국가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인 협의 및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TPP는 기존의 FTA보다 이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TPP 제9.18조 제1항은 한미-FTA 제11.15조와 같이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때 협의 및 협상 절차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TPP에서는 한미-FTA 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TPP 제9.18조 제1항은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예로 알선(good office)과 조정(mediation)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TPP는 협의 및 협상의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은 협의 및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피청구국에게 협의에 대한 서면 청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서면 청구서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하여 간략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PP 제9.17조 제2항) 그리고 동조 제3항은 협의 및 협상의 개시가 관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청구의 제기(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① 협의 및 협상의 필요적 전치

기존의 한미-FTA에서는 협의 및 협상 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기 90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FTA 제11.6조 제2항) 한미-FTA에도 협의 및 협상 절차가 있지만,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만 있으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PP는 협의 및 협상을 필요적 전치 사항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서면으로 된 협상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서면 청구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비로소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면 협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이 청구가 없다면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반소(反訴, counterclaim)의 인정

TPP 는 투자자의 청구 제기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 또는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청구할 때, 피청구국은 소송의 사실적 및 법적 기초와 관련하여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상계 청구(set off)를 목적으로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TPP 제9.19조 제2항)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의 경우에, 인가일 이후 집행된 수단(instrument)으로 투자인가가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다. (TPP 제9.19조 제2항 각주 32))

③ 말레이시아에 대한 특별 규정

TPP 는 중재청구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3년 동안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TPP 부속서 9- K)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해외투자자는 3년 동안 특정 가액 이하의 정부 조달 계약 위반에 대하여 중재를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 대한 부속서

투자계약 자체에 TPP 부속서 9- L A 조 제1항 (a)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⁹가 포함되어 있고, 중재 회부에 대한 피청구국의 동의가 투자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⁹ 부속서 9- L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다.

- (i) 피청구국과 투자자의 모국 모두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 체결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ICSID Convention) 과 「국제투자분쟁센터 추가절차규칙」(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 (ii) 피청구국과 투자자의 모국 어느 쪽이든지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센터 추가절차규칙」(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 (iii)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 (iv) 「국제 상업 회의소 중재규칙」(ICC Arbitration Rules)
- (v) 「런던 국제중재 법원 중재규칙」(LCIA Arbitration Rules)

여기서 투자계약이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에 따른 중재 절차를 채택한 경우에, 중재지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의 당사국의 영토이면서 피청구국의 영토가 아닌 곳이 된다.

투자자는 투자자- 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TPP 제9.21조 제2항 (b)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자- 국가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재 통보와 함께 국내 절차 및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한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TPP 제9장(투자) A 절에 규정된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 또는 투자인가와 관련한 위반을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다른 중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쟁해결 포기 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도,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이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TPP 부속서 9- L A 조 제2항은 A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계약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청구인이 TPP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TPP 제9장(투자)의 A 절인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 또는 투자인가 위반 여부를 다투면서 동시에 투자계약의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만약 각각의 소송들이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정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분쟁 당사자는 TPP 제9.28조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병합 청구를 할 수 있다. (TPP 부속서 9- L A 조 제2항)

이와 동시에 TPP 부속서 9- L 은 국가별로 투자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페루는 자국법에 따라 안정성 협약(stability agreement)을 맺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한 혜택에는 특정한 기간 동안 현재의 세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페루가 투자자와 체결한 안전화 협약은 그 자체로는 협약의 위반 여부를 TPP 에서 투자자- 국가 중재로 다루기 힘들다. 하지만 안전화 협약이 투자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안전화 협약 위반은 그 안전화 계약이 포함된 투자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TPP 부속서 9- L B 조 제2항)

멕시코는 중재 제기가 TPP 부속서 9- L C 조 제1항 (a)에서 (j)사이에 언급된 법과 관련한 행정행위(act of authority)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투자계약에 관한 중재 제

기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무효로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국내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관련법이 중재 회부를 허용하도록 개정되면 중재 동의에 대한 유보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 (TPP 부속서 9- L C 조 제2항)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TPP의 투자계약의 정의에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공권력은 ‘캐나다 재정 운영법’ 별표 III(Schedule III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R.S.C. 1985, c. F- 11))에 나열된 행정 주체 및 항만 또는 교량 관할 당국을 포함한다. 이들 당국은 투자계약 정의와 관련한 조항 (c)에 따라 정부가 이 주체 또는 당국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운영과 활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을 체결한 정부당국으로서 투자계약에 따를 이행의무가 있다.

(3)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원래 중재는 법원과 달리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중재가 성립하려면 양쪽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 회부에 합의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해도 국가가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CSID 절차 또는 뉴욕협약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중재협정에 대한 당사국의 사전적 동의와 관련한 조항을 둔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에 피청구국은 ICISD 절차 또는 뉴욕협약의 중재 성립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통해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중재 청구를 할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는 자동적으로 중재에 응하게 된다.

TPP도 한미-FTA에서와 같이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TPP 제9.21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동의와 중재 청구의 제기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인 “서면 동의”와 뉴욕협약 제

2조의 “서면 합의” 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만 TPP 는 중재 제기 사전 동의가 대체하는 중재절차규칙의 요건에 한미- FTA 에 없는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미주협약」(Inter- 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 American Convention) 제1조의 합의를 가하였다.

(4) 중재인의 선정(Selection of Arbitrators)과 수행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를 비판하는 견해의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절차의 설계와 운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투자법 체계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중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TPP 는 한미- FTA 와 같은 기존의 중재 절차에 비해 선정 과정에서 수행에 이르는 과정에 몇 가지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중재인 선정에서 고려해야할 기준 제시

TPP 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 당사국 또는 ICSID 사무총장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TPP 제9.22조 제5항은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관해 제기된 중재 청구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관련된 준거법에 관해 특정 후보의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선정 해야 한다. 동 조항은 이때에도 사무총장이 준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인의 행동 강령 제시

TPP 제9.22조 제6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중재인에게 이 협정의 제28장에 있는 분쟁절차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원래 TPP 제28장이 규정하는 중재인 행동강령은 국가 대 국가 중재에 관해 중재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따라서 이 행동강령이 투자자- 국

가 중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사국은 투자자- 국가 중재의 맥락에 합치하도록 제28장의 행동강령을 수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국제중재에서 이해 충돌에 관한 관련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인은 이 가이드라인과 중재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중재를 하는 데 필요한 중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 제도

TPP 는 한미- FTA 를 비롯한 최근에 맺어진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외부 조언자 (*amicus curiae*)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한정하여 분쟁의 범위 안에서 외부조언자의 서면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 (TPP 제9.23조 제3항)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을 통해 판정부는 분쟁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 중재와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실체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TPP 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조언자 서면 입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서면입장 제출은 작성자, 분쟁 당사자의 직간접적 관계를 밝혀야 하며, 서면 입장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입장은 중재 언어로 쓰여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페이지 수와 마감 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장 책임의 전환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할 때 최소기준 대우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중재를 제기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국제중재에 적용가능 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중재 청구 원인의 모든 요소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5) 중재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한미-FTA를 비롯한 최근 투자협정은 투명성 조항을 통해 중재판정의 공개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할수록 판정부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판정을 내릴 것이고, 그만큼 중재판정의 내용은 공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통보, 중재통보를 비롯하여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변론서나 이유서 및 준비서면 등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대중들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TPP는 투명성 조항, 특히 정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기존의 FTA보다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TPP 제9.24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과정에서 피청구국에게 TPP 제29.2조(안보 예외) 및 제29.7조(정보공개)에 따라 피청구국이 보호되는 정보로 지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심리과정에서 피청구국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하더라도, 피청구국은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TPP 제9.24조 각주 33))

한편, 피청구국의 자국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판정부가 해당 정보를 중재과정에서 공개하지 말도록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청구국은 정보 공개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적용할 때,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보호하는데 민감한 방식으로 자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TPP 제9.25조 제5항)

(6) 준거법(Governing Law)

중재판정에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적용에 관하여, TPP는 한미 FTA보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TPP 제9장(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 (TPP 제9.25조 제1항) 그러나, 사실의 문제로서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국

내법을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TPP 제9.25조 제1항 각주 34))

한편, 청구인이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의 위법성에 근거하여 중재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투자인가에 적용되는 법규칙, 또는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판정을 내린다. 그런데 관련 투자계약에서 법규칙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중재 판단을 내린다.(TPP 제9.25조 제2항) 이때 피청구국의 법은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계약의 준거가 되는 피청구국의 법은 손해배상, 경감의무(mitigation), 이자와 금반언(estoppel)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TPP 제9.25조 제2항 각주 35))

(7) 판정(Awards)

피청구국이 패소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청구인이 TPP 제9.19조 제1항 (a)에 따라 자신을 위해 중재판정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중재판정은 투자자로서의 능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회복에만 적용된다. (TPP 제9.29조 제2항)

또한 TPP 제9.29조 제3항은 한미-FTA 에서와 같이 중재판정에서 분쟁 당사자에 의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보수에 대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와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판정하도록 하여서, 판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TPP 제9.29조 제4항은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하려고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판정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에 대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TPP 는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정은 - 청구인이 그 위반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에서 - 청구인이 투자를 시도할 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 것에 관해서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때 청구인의 청구 제기가 터무니없는 남용 (**frivolous**)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직권으로 중재판정부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8) 공채(Public Debt)

TPP는 부속서 9- G는 국가 채무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자가 국채를 구매할 때, 투자자는 국채를 통해 수익을 얻을 기회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채권 발행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손해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PP**는 당사국 채권 구매가 상업적 차원에서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투자자는 당사국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TPP** 제9장 A 절의 의무불이행(예를 들면, 보상 없는 수용)을 근거로 중재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TPP** 부속서 9- G 제1조)

또한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of debt**)이 투자자- 국가 중재 제기 당시 또는 이후에 협상되었다면, 투자자는 그러한 채무재조정이 **TPP** 제9장(투자) A 절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자- 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중재가 성립되어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중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채무재조정이 내국민 대우 조항이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PP** 부속서 9- G 제2조) 그리고 또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는 청구 이유가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위반이 아닌 이상, 피청구국이 서면 협의 요청을 받은 지 270일이 지난 후에야 채무재조정에 대한 투자자- 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서 9- G 제3조)

III. TPP의 투자장의 규범적 특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TPP 투자장의 규범적 특징

TPP 투자장의 기본적 구조와 주요 내용을 보면 TPP 제9장(투자)은 미국의 대외투자정책 기조가 반영된 미국 「투자협정 표준문안」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TPP 투자장은 한미-FTA 투자장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TPP 투자장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뜯어보면 한미-FTA와 다른 여러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미국 투자협정 추진 정책이 취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TPP 투자장은 중재판정에서 논란이 되어 투자자와 당사국에 혼란을 주었던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해석에서 판정부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용어를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최혜국 대우 조항의 적용 범위를 실체적 권리 보장에 한정하였고, 투자자의 기대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규범 구체화 작업을 통해 투자자와 당사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재의 수행과 관련해서도 한미-FTA보다 중재의 공정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서 TPP 투자장은 대우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중재자의 윤리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을 도입함으로써 중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TPP 투자장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특징은 TPP가 이전에 미국이 맺은 투자협정들에 비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PP 투자장은 환경, 보건 및 기타의 규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TPP 서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협정문

서문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하지만 협정문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에서 보충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가 규제를 투자자의 권리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협정문 서문은 투자장을 해석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TPP** 투자장은 각 개별국가의 특수한 규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규제 대한 권리를 개별 국가에게 유보하는 조항이 많다. 기존 투자협정을 보면, 투자보호라는 이유로 개별 국가의 규제 맥락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결국에는 공익을 보호하는 국가 공공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PP** 는 유보조항 또는 적용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개별 국가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TPP** 는 투자규범이 당사국 국가가 채택하고 유지하는 공공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정당한 국가의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2. TPP 가입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한국의 **TPP** 가입을 선부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과거 한미-**FTA** 와 유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TPP** 가입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한미-FTA와의 차이점 부각

한미-**FTA** 를 반대했던 국민정서의 한 축은 소위 ‘반미감정’ 이다. **TPP** 가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한미-**FTA** 처럼 **TPP** 가입은 반미주의를 다시 자극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PP** 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특히 TPP 에서 한미- FTA 에 비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사태를 돌이켜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한미- FTA 의 간접 수용과 같은 투자보호 규범과 투자자- 국가 중재 시스템이 국가 공공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반해 TPP 는 한미- FTA 보다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 규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TPP 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TPP 가 한미- FTA 보다 더 개선된 투자협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국가별 유보사항 관철 전략 수립

국익을 고려하여 TPP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필요한 개별적 유보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TPP 는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유보 조항과 적용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현실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미 TPP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후발 주자로 가입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리한 유보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협상 전에 TPP 협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정당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유보 조항이 무엇이며 양보해서는 안 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가입한 국가들의 유보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TPP 가입국들이 각각 어떠한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국내법적 맥락에서 제기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TPP 협정문 자체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국가별로 어떠한 권한이 유보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투자법적 분석뿐만 아니라 당사국 및 우리 국내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국의 어떠한 규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유보되었는지 파악하고, 그것과 유사한 국내법이 있다면 우리도 관련 조항에

관하여 권한유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외 국내법과 국제법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 부록 1 > TPP-Final-Text-Investment

CHAPTER 9
INVESTMENT

Section A

Article 9.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entre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established by the ICSID Convention;

claimant means an investor of a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with another Party. If that investo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permanent resident of a Party and a national of another Party, that natural person may not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against that latter Party;

covered investment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in existence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ose Parties or established, acquired, or expanded thereafter;

disputing parties means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disputing party means either the claimant or the respondent;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law of a Party, or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¹

freely usable currency means “freely usable currency” a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er its *Articles of Agreement*;

ICC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¹ For greater certainty, the inclusion of a “branch” in the definitions of “enterprise” and “enterprise of a Party” is without prejudice to a Party’s ability to treat a branch under its laws as an entity that has no independent legal existence and is not separately organised.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means the *Rules Governing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March 18, 1965;

Inter-American Convention means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done at Panama, January 30, 1975;

investment means every asset that an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cluding such characteristics 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the assumption of risk. Forms that an investment may take include:

- (a) an enterprise;
-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2, 3}
-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and other similar contracts;
-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g) licences, authorisations, permits and similar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the Party's law;⁴ and

² Some forms of debt, such as bonds, debentures, and long-term notes, are more likely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while other forms of debt, such as claims to payment that are immediately due and result from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are less likely to have such characteristics.

³ A loan issued by one Party to another Party is not an investment.

⁴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licence, authoris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including a concession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nature of such an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depends on such factors a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under the Party's law. Among such instruments that do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are those that do not create any rights protected under the Party's law. For greater certainty, the foregoing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any asset associated with such instrument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 (h)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s,

but investment does not mean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investment agreement means a written agreement⁵ that is concluded and takes effect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⁶ between an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⁷ of a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and that creates an exchange of rights and obligations, binding on both parties under the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9.25.2 (Governing Law), on which the covered investment or the investor relies in establishing or acquiring a covered investment other than the written agreement itself, and that grants rights to the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 (a) with respect to natural resources that a national authority controls, such as oil, natural gas, rare earth minerals, timber, gold, iron ore and other similar resources,⁸ including for their exploration, extraction, refining,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sale;

⁵ “Written agreement” refers to an agreement in writing, negotiated and executed by both parties, whether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 For greater certainty:

- (a) a unilateral act of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such as a permit, licence, authorisation, certificate, approval, or similar instrument issued by a Party in its regulatory capacity, or a subsidy or grant, or a decree, order or judgment, standing alone; and
- (b)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consent decree or order,

shall not be considered a written agreement.

⁶ For greater certainty, a written agreement that is concluded and takes effec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oes not include the renewal or extension of a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iginal agreement, and on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original agreement, which has been concluded and entered in force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⁷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means, for unitary states, an authority at the ministerial level of government. Ministerial level of government means government departments, ministries or other similar authorities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but does not include: (a) a governmental agency or organ established by a Party’s constitution or a particular legislation that has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from government departments, ministries or other similar authorities under a Party’s law, unless the day to day operations of that agency or organ are directed or controlled by government departments, ministries or other similar authorities; or (b) a governmental agency or organ that acts exclusively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region or province.

⁸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subparagraph does not include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respect to land, water or radio spectrum.

- (b) to supply services on behalf of the Party for consumption by the general public for: power generation or distribution, water treatment or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s, or other similar services supplied on behalf of the Party for consumption by the general public;⁹ or
- (c) to undertake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roads, bridges, canals, dams or pipelines or other similar projects; provided, however, that the infrastructure is not for the exclusive or predominant use and benefit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authorisation¹⁰ means an authorisation that the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of a Party¹¹ grants to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investor of a non-Party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or that attempts to make,¹²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at is not an investor of a Party;

investor of a Party means a Party, or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that 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LCIA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⁹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subparagraph does not cover correctional services, healthcare services, education services, childcare services, welfare services or other similar social services.

¹⁰ For greater certainty, the following are not encompassed within this definition: (i) actions taken by a Party to enforce laws of general application, such as competition,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regulatory laws; (ii) non-discriminatory licensing regimes; and (iii) a Party's decision to grant to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a particular investment incentive or other benefit, that is not provided by a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in an investment authorisation.

¹¹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means,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for Australia, the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under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including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b) for Canada, the Minister of Industry, but only when issuing a notice under Section 21 or 22 of the *Investment Canada Act*; (c) for Mexico, the National Commission of Foreign Investments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 and (d) for New Zealand, the Minister of Finance, the Minister of Fisheries or the Minister for Land Inform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make a decision to grant consent under the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¹²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s of "investor of a non-Party" and "investor of a Party", an investor "attempts to make" an investment when that investor has taken concrete action or actions to make an investment, such as channelling resources or capital in order to set up a business, or applying for a permit or licence.

negotiated restructuring means the restructuring or rescheduling of a debt instrument that has been effected through (a) a modification or amendment of that debt instrument, as provided for under its terms, or (b) a comprehensive debt exchange or other similar process in which the holders of no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the outstanding debt under that debt instrument have consented to the debt exchange or other process;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June 10, 1958;

non-disputing Party means a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protected information mean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otherwise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a Party's law, including classified government information;

respondent means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ICSID;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rticle 9.2: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 (a) investors of another Party;
- (b) covered investments; and
- (c) with respect to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Article 9.16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ther Regulatory Objectives), all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 (a) the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that Party; and

- (b) any person, including a state enterprise or any other body, when it exercises any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that Party.¹³

3.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shall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Article 9.3: Relation to Other Chapters

1.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of this Agreement, the other Chap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2. A requirement of a Party that a service supplier of another Party post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does not of itself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such cross-border supply of the service.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the posted bond or financial security, to the extent that the bond or financial security is a covered investment.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vered by Chapter 11 (Financial Services).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¹⁴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¹³ For greater certainty, governmental authority is delegated under the Party's law, including through a legislative grant or a government order, directive or other action transferring or authorising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¹⁴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treatment is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or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whether the relevant treatment distinguishes between investors or investments on the basis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3.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means, with respect to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or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or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3.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ncompass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r mechanisms, such as those included in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ticle 9.6: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¹⁵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1 to provide:

-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¹⁵ Article 9.6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9-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4. For greater certainty, the mere fact that a Party takes or fails to take an action that may be inconsistent with an investor’s expectations does not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rticle, even if there is loss or damage to the covered investment as a result.

5. For greater certainty,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or grant has not been issued, renewed or maintained, or has been modified or reduced, by a Party, does not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rticle, even if there is loss or damage to the covered investment as a result.

Article 9.7: Treatment in Case of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1. Notwithstanding Article 9.12.6(b) (Non-Conforming Measures),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o covered investment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n investor of a Party, in a situ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ffers a los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resulting from:

- (a) requisitioning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or
- (b) destruction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the latter Party shall provide the investor restitution, compensation or both, as appropriate, for that loss.

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existing measures relating to subsidies or grant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but for Article 9.12.6(b) (Non-Conforming Measures).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¹⁶

1. No Party shall expropriate or nationalise a covered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sation (expropriation), except:

- (a) for a public purpose;^{17, 18}
-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3 and 4; and
-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2. Compensation shall:

- (a) be paid without delay;
-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 (d) be fully realisable and freely transferable.

3.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he compensation paid shall be no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plus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¹⁶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9-B (Expropriation) and is subject to Annex 9-C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¹⁷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public purpose” refers to a concept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may express this or a similar concept by using different terms, such as “public necessity”, “public interest” or “public use”.

¹⁸ For the avoidance of doubt: (i) if Brunei Darussalam is the expropriating Party, any measure of direct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shall be for the purposes as set out in the *Land Code* (Cap. 40) and the *Land Acquisition Act* (Cap. 41),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it; and (ii) if Malaysia is the expropriating Party, any measure of direct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shall be for the purposes as set out in the *Land Acquisitions Act 1960*, *Land Acquisition Ordinance 1950* of the State of Sabah and the *Land Code 1958* of the State of Sarawak,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it.

4.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currency that is not freely usable, the compensation paid, converted into the currency of payment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te of payment, shall be no less than:

- (a)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converted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at date; plus
- (b)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freely usable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5.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ces grant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or to th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extent that the issuanc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is consistent with Chapter 18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TRIPS Agreement.¹⁹

6.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s decision not to issue, renew or maintain a subsidy or grant, or decision to modify or reduce a subsidy or grant,

- (a) in the absence of any specific commitment under law or contract to issue, renew or maintain that subsidy or grant; or
- (b) in accordance with any terms or conditions attached to the issuance, renewal, modification, reduction and maintenance of that subsidy or grant,

standing alone,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rticle 9.9: Transfers²⁰

1. Each Party shall permit all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Such transfers include:

- (a) contributions to capital;²¹
- (b) profits, dividends, interest, capital gains, royalty payments, management fees, technical assistance fees and other fees;

¹⁹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recognise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rev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the cancellation or nullification of those rights, and the term "lim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exceptions to those rights.

²⁰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is subject to Annex 9-E (Transfers).

²¹ For greater certainty, contributions to capital include the initial contribution.

- (c)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any part of the covered investment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covered investment;
 - (d)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including a loan agreement;
 - (e) payments made pursuant to Article 9.7 (Treatment in Case of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and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nd
 - (f) payments arising out of a dispute.
2. Each Party shall permit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transfer.
3. Each Party shall permit returns in kind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as authorised or specified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2 and 3, a Party may prevent or delay a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s²² relating to:
-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 (c) criminal or penal offences;
 - (d)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r
 -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5.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arty may restrict transfers of returns in kind in circumstances where it could otherwise restrict such transfer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s set out in paragraph 4.

²²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a Party's laws relating to its social security, public retirement or compulsory savings programmes.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1. No Party shall,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impose or enforce any requirement, or enforce any commitment or undertaking:²³

- (a) to export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goods or services;
-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 (c)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 (d)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the investment;
-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those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 (f) to transfer a particular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in its territory;
- (g) to supply exclusively from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goods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the services that it supplies to a specific regional market or to the world market;
- (h) (i)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in its territory, technology of the Party or of a person of the Party;²⁴ or
(ii) that prevents the purchase or use of, or the according of a preference to, in its territory, a particular technology; or
- (i) to adopt:

²³ For greater certainty, a condition for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ferred to in paragraph 2 does not constitute a “requirement” or a “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²⁴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technology of the Party or of a person of the Party” includes technology that is owned by the Party or a person of the Party, and technology for which the Party or a person of the Party holds an exclusive licence.

- (i) a given rate or amount of royalty under a licence contract;
or
- (ii) a given duration of the term of a licence contract,

in regard to any licence contract in existence at the time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enforced, or any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or any future licence contract²⁵ freely entered into between the investor and a person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in a manner that constitutes direct interference with that licence contract by an exercise of non-judicial governmental authority of a Party.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i) does not apply when the licenc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investor and a Party.

2. No Party shall condition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on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 (a)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 (b)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 (c)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the investment; or
- (d)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the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those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3. (a)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on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 (b) Paragraphs 1(f), 1(h) and 1(i) shall not apply:

²⁵ A "licence contract"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means any contract concerning the licensing of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 (i) if a Party authorises us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²⁶ of the TRIPS Agreement, or to measures requiring the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and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9 of the TRIPS Agreement; or
 - (ii) if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by a court,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mpetition authority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under the Party's competition laws.^{27, 28}
- (c) Paragraph 1(i) shall not apply if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by a tribunal as equitable remuneration under the Party's copyright laws.
- (d)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 or do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paragraphs 1(b), 1(c), 1(f), 2(a) and 2(b)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measures:
- (i)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ii)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 (iii)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 (e) Paragraphs 1(a), 1(b), 1(c),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goods or services with respect to export promotion and foreign aid programs.
- (f) Paragraphs 1(b), 1(c), 1(f), 1(g), 1(h), 1(i),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government procurement.

²⁶ The reference to "Article 31" includes any waiver or amendment to the TRIPS Agreement implementing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 (01)/DEC/2).

²⁷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patent does not necessarily confer market power.

²⁸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for a period of 10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it or until it establishes a competition authority or authorities, whichever occurs earlier, the reference to the Party's competition laws includes competition regulations.

- (g) Paragraphs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requirements imposed by an importing Party relating to the content of goods necessary to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s or preferential quotas.
- (h) Paragraphs (1)(h) and (1)(i)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 or in a manner that constitute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4.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from imposing or enforcing a requirement, or enforcing a commitment or undertaking, to employ or train workers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the employment or training does not require the transfer of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in its territory.

5.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any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other than those set out in those paragraphs.

6.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enforcement of any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if a Party did not impose or require the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 No Party shall require that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appoint to a senior management position a natural person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

2. A Party may require that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committee thereof, of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be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 does not materially impair the ability of the investor to exercise control over its investment.

Article 9.12: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hall not apply to:

-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or
 -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
-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or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²⁹

2.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I.

3. If a Party considers that a non-conforming measure applied by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of another Pa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a)(ii), creates a material impediment to investment in relation to the former Party,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regard to that measure. Thes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exchanging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measure and to considering whether further step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³⁰

²⁹ With respect to Viet Nam, Annex 9-I (Non-Conforming Measures Ratchet Mechanism) applies.

³⁰ For greater certainty, any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another Party regarding a non-conforming measure applied by a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a)(i).

4. No Party shall, under any measure adop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and covered by its Schedule to Annex II, require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by reason of its nationality,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 investment existing at the time the measure becomes effective.

5. (a)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falls within an exception to, or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which are imposed by:

(i) Article 18.8 (National Treatment); or

(ii) Article 3 of the TRIPS Agreement, if the exception or derogation relates to matters not addressed by Chapter 18 (Intellectual Property).

(b)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falls within Article 5 of the TRIPS Agreement, or an exception to, or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which are imposed by:

(i) Article 18.8 (National Treatment); or

(ii) Article 4 of the TRIPS Agreement.

6.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nd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7. For greater certainty, any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a Party's Schedules to Annex I or Annex II,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2 (Amendments).

Article 9.13: Subrogation

If a Party, or any agency, institution, statutory body or corporation designated by the Party, makes a payment to an investor of the Party under a guarantee, a contract of insurance or other form of indemnity that it h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a covered investment, the other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covered investment was made shall recognise the subrogation or transfer of any rights the investor would have possessed under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the

covered investment but for the subrogation, and the investor shall be precluded from pursuing these rights to the extent of the subrogation.

Article 9.14: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1. Nothing in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that prescribes special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a covered investment, such as a residency requirement for registration or a requirement that a covered investment be legall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Party, provided that these formalities do not materially impair the protections afforded by the Party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covered investments pursuant to this Chapter.

2. Notwithstanding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 Party may require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or its covered investm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at investment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The Party shall protect such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from any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investor or the covered investmen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otherwise obtaining or disclosing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quitable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

Article 9.15: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that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e enterprise:

- (a) is owned or controlled by a person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and
- (b)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other than the denying Party.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that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or to its investments.

Article 9.16: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ther Regulatory Objectiv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regulatory objectives.

Article 9.1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Parties reaffirm the importance of each Party encouraging enterprises operating within its territory or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o voluntarily incorporate into their internal policies those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guidelines and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have been endorsed or are supported by that Party.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ticle 9.18: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1.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should initially seek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which may include the use of non-binding, third party procedures, such as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2. The claimant shall deliver to the respondent a written request for consultations setting out a brief description of facts regarding the measure or measures at issue.
3. For greater certainty, the initiation of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If an investment dispute has not been resolved within six months of the receipt by the respondent of a written request for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 9.18.2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 (a) the claimant, on its own behalf,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 (B) an investment authorisation;³¹ or
-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 (ii)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and
- (b) the claimant,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respondent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claiman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 (B) an investment authorisation; or
 -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 (ii)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a claimant may submit pursuant to subparagraph (a)(i)(C) or (b)(i)(C) a claim for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only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nd the claimed damages directly relate to the covered investment that was established or acquired, or sought to be established or acquired, in reliance o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2. When the claimant submits a claim pursuant to paragraph 1(a)(i)(B), 1(a)(i)(C), 1(b)(i)(B) or 1(b)(i)(C), the respondent may make a counterclaim in connection with the factual and legal basis of the claim or rely on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 off against the claimant.³²

3. At least 90 days before submitting any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the claimant shall deliver to the respondent a written notice of its

³¹ Without prejudice to a claimant's right to submit to arbitration other claims under this Article, a claimant shall not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under subparagraph (a)(i)(B) or subparagraph (b)(i)(B) that a Party covered by Annex 9-H has breached an investment authorisation by enforcing conditions or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investment authorisation was granted.

³² In the case of investment authorisations, this paragraph shall appl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vestment authorisation, including instruments executed after the date the authorisation was granted, creates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disputing parties.

intention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notice of intent). The notice shall specify:

-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and, if a claim is submitted on behalf of an enterprise, the name, address and place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 (b) for each claim,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vestment authoris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any other relevant provisions;
- (c) the legal and factual basis for each claim; and
- (d) the relief sought and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4. The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in paragraph 1 under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 (a)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respondent and the Party of the claimant are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 (b)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provided that either the respondent or the Party of the claimant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 (c)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 (d) if the claimant and respondent agree, any other arbitral institution o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5. A claim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when the claimant's notice of or request for arbitration (notice of arbitration):

- (a) referred to in the ICSID Conven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 (b) referred to in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 (c) referred to i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gether with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therein, are received by the respondent; or
- (d) referred to under any arbitral institution or arbitration rules selected under paragraph 4(d) is received by the respondent.

A claim asserted by the claimant for the first time after such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n the date of its receipt under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6. The arbitration rul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4 that are in effect on the date the claim or claims wer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govern the arbitration except to the extent modified by this Agreement.

7. The claimant shall provide with the notice of arbitration:

- (a) the name of the arbitrator that the claimant appoints; or
- (b) the claimant's written consent for the Secretary-General to appoint that arbitrator.

Article 9.20: 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1. Each Part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 (a) Chapter II of the ICSID Convention (Jurisdiction of the Centre) and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f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 (b) Article II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an "agreement in writing"; and
- (c) Article I of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for an "agreement".

Article 9.21: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Consent of Each Party

1. No claim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f more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ant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breach alleged under Article 9.19.1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knowledge that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9.19.1(a))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9.19.1(b)) has incurred loss or damage.

2. No claim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unless:

- (a) the claimant consents in writing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 (b)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accompanied:
 - (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by the claimant's written waiver; and
 - (i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by the claimant's and the enterprise's written waivers,of any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under the law of a Party, or any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 with respect to any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b),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9.19.1(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the claimant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9.19.1(b)) may initiate or continue an action that seeks interim injunctive relief and does not involve the payment of monetary damag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respondent, provided that the action is brought for the sole purpose of preserving the claimant's or the enterprise's rights and interests during the pendency of the arbitration.

Article 9.22: Selection of Arbitrators

1.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tribunal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one arbitrator appointed by each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third, who shall be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appointing authority for an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3. If a tribunal has not been constituted within a period of 75 days after the date that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he Secretary-General shall not appoint a national of either the respondent or the Party of the claimant as the presiding arbitrat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4.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9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7 of Schedule C to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nd without prejudice to an objection to an arbitrator on a ground other than nationality:

- (a) the respondent agrees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 (b)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9.19.1(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grees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nd
- (c)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9.19.1(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nd the enterprise agree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5.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to a tribunal for claims submitted under Article 9.19.1(a)(i)(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rticle 9.19.1(b)(i)(B), Article 9.19.1(a)(i)(C) or Article 9.19.1(b)(i)(C), each dispu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xpertise or relevant experience of particular candidates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governing law under Article 9.25.2 (Governing Law). If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ing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the expertise or relevant experience of particular candidates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governing law under Article 9.25.2.

6. The Parties shall,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provid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ode of Conduct fo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 to arbitrators selected to serve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ibunals pursuant to this Article, including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Code of Conduct to conform to the context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Parties shall also provid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relevant rules or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ors shall comply with that guidance in addition to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regarding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Article 9.23: Conduct of the Arbitration

1.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on the legal place of an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applicable under Article 9.19.4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If the disputing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provided

that the place shall b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2. A non-disputing Party may make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o the tribunal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3.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accept and consider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s regarding a matter of fact or law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that may assist the tribunal in evaluating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disputing parties from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but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l proceedings. Each submission shall identify the author; disclose any affiliation, direct or indirect, with any disputing party; and identify any person, government or other entity that has provided, or will provide,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preparing the submission. Each submission shall be in a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comply with any page limits and deadlines set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such submissions.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submissions do not disrupt or unduly burden the arbitral proceedings, or unfairly prejudice any disputing party.

4. Without prejudice to a tribunal's authority to address other objections as a preliminary question, such as an objection that a dispute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tribunal, including an objection to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tribunal shall address and decide as a preliminary question any objection by the respondent that, as a matter of law, a claim submitted is not a claim for which an award in favour of the claimant may be made under Article 9.29 (Awards) or that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 (a)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and in no event later tha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counter-memorial or,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response to the amendment.
- (b) On receipt of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establish a schedule for considering the objection consistent with any schedule it has established for considering any other preliminary question,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 (c) In deciding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at a claim submitted is not a claim for which an award in favour of the claimant may be made under Article 9.29 (Awards), the tribunal shall assume to be true the claimant's factual allegations in support of any claim in the notice of arbitration (or any amendment

thereof) and, in disputes brought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in the relevant article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tribunal may also consider any relevant facts not in dispute.

- (d) The respondent does not waive any objection as to competence, including an objection to jurisdiction, or any argument on the merits merely because the respondent did or did not raise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or make use of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5.

5. In the event that the respondent so requests within 45 days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the tribunal shall decide on an expedited basi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4 or any objection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tribunal's competence, including an objection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tribunal's jurisdiction.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no later than 15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However, if a disputing party requests a hearing, the tribunal may take an additional 30 days to issue the decision or award. Regardless of whether a hearing is requested, a tribunal may, on a showing of extraordinary cause, delay issuing its decision or award by an additional brief period, which may not exceed 30 days.

6. When the tribunal decides a respondent's objection under paragraph 4 or 5, it may, if warranted, award to the prevailing disputing party reasonable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in submitting or opposing the objectio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ward is warrante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whether either the claimant's claim or the respondent's objection was frivolous, and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7. For greater certainty, if an investor of a Party submits a claim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a claim alleging that a Party breached Article 9.6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he investor has the burden of proving all elements of its claims, 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8. A respondent may not assert as a defence, counterclaim, right of set-off or for any other reason, that the claimant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the alleged damages pursuant to an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

9. A tribunal may orde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to preserve the rights of a disputing party, or to ensur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is made fully effective, including an order to preserve evidence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disputing party or to protect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tribunal may not order attachment or enjoin the application of a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order includes a recommendation.

10.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shall, before issuing a decision or award on liability, transmit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o the disputing parties. Within 60 days after the tribunal transmits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disputing parties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tribunal concerning any aspect of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ny comments and issue its decision or award no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 day comment period.

11. In the event that an appellate mechanism for reviewing awards rendered b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ibunals is developed in the future under oth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Parties shall consider whether awards rendered under Article 9.29 (Awards) should be subject to that appellate mechanism. The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any such appellate mechanism they consider adopting provides for transparency of proceedings similar to the transparency provisions established in Article 9.24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rticle 9.24: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1. Subject to paragraphs 2 and 4, the respondent shall, after receiving the following documents, promptly transmit them to the non-disputing Parties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 (a) the notice of intent;
- (b) the notice of arbitration;
- (c) pleadings, memorials and briefs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a disputing party and any written submission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9.23.2 (Conduct of the Arbitration) and Article 9.23.3 and Article 9.28 (Consolidation);
- (d) minutes or transcripts of hearings of the tribunal, if available; and
- (e) orders, awards and decisions of the tribunal.

2. The tribunal shall conduct hearings open to the public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ppropriate logistical arrangements. If a disputing party intends to use information in a hearing that is designated as protected information or otherwise subject to paragraph 3 it shall so advise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tect such

information from disclosure which may include closing the hearing for the duration of the discussion of that information.

3. Nothing in this Section, including paragraph 4(d), requires a respondent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or otherwise disclose during or after the arbitral proceedings, including the hearing, protected information, or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at it may withho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 (Security Exceptions) or Article 29.7 (Disclosure of Information).³³

4. Any protected information tha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shall be protected from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 (a) subject to subparagraph (d), neither the disputing parties nor the tribunal shall disclose to any non-disputing Party or to the public any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disputing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clearly designates i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 (b) any disputing party claiming that certain information constitutes protected information shall clearly designate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any schedule set by the tribunal;
- (c) a disputing party shall, according to any schedule set by the tribunal, submit a redacted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does not contain the protected information. Only the redacted version shall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 (d) the tribunal, subject to paragraph 3, shall decide any objection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signated, the disputing party that submitted the information may:
 - (i) withdraw all or part of its submission containing that information; or
 - (ii) agree to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ith corrected desig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and subparagraph (c).

In either case, the other disputing party shall, whenever necessary,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hich either remove the information withdrawn under subparagraph (d)(i) by the

³³ For greater certainty, when a respondent chooses to disclose to the tribunal information that may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 (Security Exceptions) or Article 29.7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respondent may still withhold tha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or redesignate the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designation under subparagraph (d)(ii) of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5.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a respondent to withhold from the public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by its laws. The respondent should endeavour to apply those laws in a manner sensitive to protecting from disclosure information that has been designated as protected information.

Article 9.25: Governing Law

1. Subject to paragraph 3,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9.19.1(a)(i)(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A),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s in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³⁴

2. Subject to paragraph 3 and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Section,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9.19.1(a)(i)(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rticle 9.19.1(a)(i)(C), Article 9.19.1(b)(i)(B) or Article 9.19.1(b)(i)(C), the tribunal shall apply:

- (a) th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pertinent investment authorisation or specified in the pertinent investment authoris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or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otherwise; or
- (b) if, in the pertinent investment agreement the rules of law have not been specified or otherwise agreed:
 - (i) the law of the respondent, 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³⁵ and
 - (ii)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3. A deci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27.2.2(f) (Fun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inding on a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a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³⁴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law of the respondent when it is relevant to the claim as a matter of fact.

³⁵ The “law of the respondent” means the law that a domestic court or tribunal of proper jurisdiction would apply in the same case. For greater certainty, the law of the respondent includes the relevant law governing the investment agreement, including law on damages, mitigation, interest and estoppel.

Article 9.26: Interpretation of Annexes

1. If a respondent asserts as a defence that the measure alleged to be a breach is within the scope of a non-conforming measure set out in Annex I or Annex II, the tribunal shall, on request of the respondent, reques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ission on the issue. The Commission shall submit in writing any decision on its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27.2.2(f)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o the tribunal within 90 days of delivery of the request.

2. A decision issued by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Commission fails to issue such a decision within 90 day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Article 9.27: Expert Report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ointment of other kinds of experts when authorised by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a tribunal,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disapprove, on its own initiative,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to report to it in writing on any factual issue concerning scientific matters raised by a disputing party in a proceeding,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Article 9.28: Consolidation

1. If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submitted separately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the claims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any disputing party may seek a consolidation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r the terms of paragraphs 2 through 10.

2. A disputing party that seeks a consolidation order under this Article shall deliver, in writing, a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o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 (a)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3. Unless the Secretary-General finds within a period of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at the request is manifestly unfounded, a tribunal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4. Unless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agree otherwis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 (a) one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claimants;
- (b) one arbitrator appointed by the respondent; and
- (c)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provided that the presiding arbitrator is not a national of the respondent or of a Party of any claimant.

5. If, within a period of 60 days after the date when the Secretary-General receives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the respondent fails or the claimant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he Secretary-General, on request of any disputing party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shall appoint,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6. I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s satisfied that two or more claim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the tribunal may, in the interest of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laims, and after hearing the disputing parties, by order:

- (a)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 (b)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one or more of the claims, the determination of which it believes would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others; or
- (c) instruct a tribunal previously established under Article 9.22 (Selection of Arbitrators) to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provided that:
 - (i) that tribunal, on request of a claimant that was not previously a disputing party before that tribunal, shall be reconstituted with its original members, except that the arbitrator for the claimants shall be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s 4(a) and 5; and
 - (ii) that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a prior hearing shall be repeated.

7. If a tribunal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a claimant that has submitted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that has not been named in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tribunal that it be included in any order made under paragraph 6. The request shall specify:

-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The claimant shall deliver a copy of its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8.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nduct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except as modified by this Section.

9.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9.22 (Selection of Arbitrators) shall not have jurisdiction to decide a claim, or a part of a claim, over which a tribunal established or instructed under this Article has assumed jurisdiction.

10. On the application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pending its decision under paragraph 6, may order that the proceedings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9.22 (Selection of Arbitrators) be stayed, unless the latter tribunal has already adjourned its proceedings.

Article 9.29: Awards

1. When a tribunal makes a final award, the tribunal may awar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only:

- (a)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and
- (b) restitution of property, in which case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the respondent may pay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in lieu of restitution.

2. For greater certainty, if an investor of a Party submits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it may recover only for loss or damage that it has incurred in its capacity as an investor of a Party.

3. A tribunal may also award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by the disputing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arbitral proceeding, and shall determine

how and by whom those costs and attorney's fees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4. For greater certainty, for claims alleging the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with respect to an attempt to make an investment, when an award is made in favour of the claimant, the only damages that may be awarded are those that the claimant has proven were sustained in the attempt to make the investment, provided that the claimant also proves that the breach was the proximate cause of those damages. If the tribunal determines such claims to be frivolous, the tribunal may award to the respondent reasonable costs and attorney's fees.

5. Subject to paragraph 1, if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an award is made in favour of the enterprise:

- (a) an award of restitution of property shall provide that restitution be made to the enterprise;
- (b) an award of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shall provide that the sum be paid to the enterprise; and
- (c)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it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that any person may have under applicable domestic law with respect to the relief provided in the award.

6. A tribunal shall not award punitive damages.

7. An award made by a tribunal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and in respect of the particular case.

8. Subject to paragraph 9 and the applicable review procedure for an interim award, a disputing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an award without delay.

9. A disputing party shall not seek enforcement of a final award until:

- (a)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made under the ICSID Convention:
 - (i) 12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requested revision or annulment of the award; or
 - (ii) revision or annulment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and
- (b)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the rules selected

pursuant to Article 9.19.4(d)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i) 9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commenced a proceeding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or
- (ii) a court has dismissed or allowed an application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and there is no further appeal.

10.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in its territory.

11. If the respondent fails to abide by or comply with a final award, on delivery of a request by the Party of the claimant, a panel shall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7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requesting Party may seek in those proceedings:

- (a) a determination that the failure to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17 (Initial Report), a recommendation that the respondent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12. A disputing party may seek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or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proceedings have been taken under paragraph 11.

13. A claim that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to arise out of a commercial relationship or transac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ticle I of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rticle 9.30: Service of Documents

Delivery of notice and other documents to a Party shall be made to the place named for that Party in Annex 9-D (Service of Documents on a Party Under Section B). A Party shall promptly make publicly available and notify the other Parties of any change to the place referred to in that Annex.

ANNEX 9-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nd as specifically referenced in Article 9.6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results from a general and consistent practice of States that they follow from a sense of legal obligatio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refers to al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at protect the investments of aliens.

ANNEX 9-B

EXPROPRIATION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1.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or property interest in an investment.
2. Article 9.8.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ddresses two situations. The first is direct expropriation, in which an investment is nationalised or otherwise directly expropriated through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9.8.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s indirect expropriation, in which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mong other factors:
 -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³⁶ and
 -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 (b)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³⁶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re reasonable depends, to the extent relevant, on factors such as whether the government provided the investor with binding written assurances and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or the potential for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public health,³⁷ safety and the environment,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³⁷ For greater certainty and without limiting the scope of this subparagraph, regulatory actions to protect public health include, among others, such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regulation, pricing and supply of, and reimbursement for,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 products), diagnostics, vaccines, medical devices, gene therapies and technologies, health-related aids and appliances and blood and blood-related products.

ANNEX 9-C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1.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where Singapore is the expropriating Party, any measure of direct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shall be for a purpose and upon payment of compensation at market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³⁸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relating to the amount of compensation where such amendments provide for the method of determination of the compensation which is no less favourable to the investor for its expropriated investment than such method of determination in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 as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Singapore.

2.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where Viet Nam is the expropriating Party, any measure of direct expropriation relating to land shall be: (i) for a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³⁹ and (ii) upon payment of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market value, while recognising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

³⁸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 is the *Land Acquisition Act* (Cap. 152) as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Singapore.

³⁹ The applicable domestic legislation is Viet Nam's *Land Law*, Law No. 45/2013/QH13 and *Decree 44/2014/ND-CP Regulating Land Prices*, as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Viet Nam.

ANNEX 9-D

SERVICE OF DOCUMENTS ON A PARTY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ustrali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Australia by delivery t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Australia

Brunei Darussalam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Brunei Darussalam by delivery to:

The Permanent Secretary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Jalan Subok
Bandar Seri Begawan, BD 2710
Brunei Darussalam

Canad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Canada by delivery to:

Office of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nada
Justice Building
239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8
Canada

Chile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Chile by delivery to:

Dirección de Asuntos Jurídicos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la República de Chile
Teatinos 180
Santiago
Chile

Japan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Japan by delivery to:

Economic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Japan

Malaysi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Malaysia by delivery to:

Attorney General's Chambers
Level 16, No. 45 Persiaran Perdana
Precin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Mexico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Mexico by delivery to:

Dirección General de Consultoría Jurídica de Comercio Internacional
Secretaría de Economía
Alfonso Reyes #30, piso 17
Col. Hipódromo Condesa
Del. Cuauhtémoc
México D.F.
C.P. 06140

New Zealand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New Zealand by delivery to:

The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5 Lambton Quay
Wellington 6011
New Zealand

Peru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Peru by delivery to:

Dirección General de Asuntos de Economía Internacional,
Competencia y Productividad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Jirón Lampa 277, piso 5
Lima, Perú

Singapore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Singapore by delivery to: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Trade & Industry
100 High Street #09-01
Singapore 179434
Singapore

United States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the United States by delivery to:

Executive Director (L/EX)
Office of the Legal Adviser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20520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served on Viet Nam by delivery to:

General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w
Ministry of Justice
60 Tra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 Noi
Viet Nam

ANNEX 9-E⁴⁰

TRANSFERS

Chile

1. Notwithstanding Article 9.9 (Transfers), Chile reserves the right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Banco Central de Chile*) to maintain or adopt measures in conformity with Law 18.840, Constitutional Organic Law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Ley 18.840, 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l Banco Central de Chile*), and *Decreto con Fuerza de Ley N°3 de 1997, Ley General de Bancos* (General Banking Act) and *Ley 18.045, Ley de Mercado de Valores* (Securities Market Law), in order to ensure currency stability and the normal op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ayments. Such measures include, *inter alia*, the establishment of restrictions or limitations on current payments and transfers (capital movements) to or from Chile, as well as transactions related to them, such as requiring that deposits, investments or credits from or to a foreign country, be subject to a reserve requirement (*encaj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reserve requirements that the Central Bank of Chile can apply pursuant to Article 49 No. 2 of Law 18.840, shall not exceed 30 per cent of the amount transferred and shall not be imposed for a period which exceeds two years.

⁴⁰ For greater certainty, this Annex shall apply to transfers covered by Article 9.9 (Transfers) and payments and transfers covered by Article 10.12 (Payments and Transfers).

ANNEX 9-F

DL 600

Chile

1. Th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contained in this Chapter do not apply to Decree Law 600, Foreign Investment Statute (*Decreto Ley 600, Estatuto de la Inversión Extranjera*)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nnex as “DL 600”), or its successors, and to Law 18.657, Foreign Capital Investment Fund Law (*Ley 18.657, Ley de Fondos de Inversión de Capital Extranjero*), with respect to:

- (a) The right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of Chile (*Comité de Inversiones Extranjeras*) or its successor to accept or reject applications to invest through an investment contract under DL 600⁴¹ and the right to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oreign investment under DL 600 and Law 18.657.
- (b) The right to maintain existing requirements that transfers from Chile of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any part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investment which may not take place until a period not to exceed:
 - (i) in the case of an investment made pursuant to DL 600, one year from the date of transfer to Chile; or
 - (ii) in the case of an investment made pursuant to Law 18.657,⁴²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ransfer to Chile.
- (c) The right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nnex, establishing future special voluntary investment programmes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gime for foreign investment in Chile, except that any such measures may restrict transfers from Chile of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any part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⁴¹ The authorisation and execution of an investment contract under DL 600 by an investor of a Party or a covered investment does not create any right on the part of the investor or the covered investment to engage in particular activities in Chile.

⁴² Law 18.657 was derogated on May 1, 2014 by law 20.712. The transfer requirement established under subparagraph (b)(ii) will only be applicable to investments made pursuant to Law 18.657 prior to May 1, 2014 and not to investments made pursuant to Law 20.712.

of the investment for a period not to exceed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ransfer to Chile.

2. For greater certainty, except to the extent that paragraph 1(b) or (c) provides an exception to Article 9.9 (Transfers), the investment entered through an investment contract under DL 600, through Law 18.657 or through any future special voluntary investment programme, will be subject to th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of this Chapter, to the extent that the investment is a covered investment under Chapter 9 (Investment).

ANNEX 9-G

PUBLIC DEBT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purchase of debt issued by a Party entails commercial risk. For greater certainty, no award shall be made in favour of a claimant for a claim under Article 9.19.1(a)(i)(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A) with respect to default or non-payment of debt issued by a Party unless the claimant meets its burden of proving that such default or non-payment constitutes a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including an uncompensated expropriation pursuant to Article 9.8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2. No claim that a restructuring of debt issued by a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shall be submitted to, or if already submitted continue in,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f the restructuring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at the time of submission, or becomes a negotiated restructuring after that submission, except for a claim that the restructuring violates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or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3. Notwithstanding Article 9.19.4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nd subject to paragraph 2,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shall not submit a claim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at a restructuring of debt issued by a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ther than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or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unless 27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respondent of the written request for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 9.18.2 (Consultation and Negotiation).⁴³

⁴³ Paragraphs 2 and 3 of this Annex do not apply to any claim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gainst Singapore or the United States.

ANNEX 9-H

1. A decision under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consists of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and associated Ministerial Statements by the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or a minister acting on his or her behalf, on whether or not to approve a foreign investment proposal,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
2. A decision by Canada following a review under the *Investment Canada Act* (R.S.C. 1985, c.28 (1st Supp.)),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to permit an investment that is subject to review,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
3. A decision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Foreign Investment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 following a review pursuant to the entry at Annex I – Mexico – 6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to permit an acquisition that is subject to review,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
4. A decision under New Zealand's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to grant consent, or to decline to grant consent, to an overseas investment transaction that requires prior consent under that Ac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

ANNEX 9-I

NON-CONFORMING MEASURES RATCHET MECHANISM

Notwithstanding Article 9.12.1(c) (Non-Conforming Measures), for Viet Nam for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it:

- (a)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hall not apply to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Article 9.12.1(a) (Non-Conforming Measures)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Viet Nam, with Article 9.4 (National Treatment), Article 9.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9.10 (Performance Requirements) or Article 9.11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b) Viet Nam shall not withdraw a right or benefit from an investor or covered investment of another Party, in reliance on which the investor or covered investment has taken any concrete action,⁴⁴ through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Article 9.12.1(a) (Non-Conforming Measures) that decreases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and
- (c) Viet Nam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ies the details of any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Article 9.12.1(a) (Non-Conforming Measures) that would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at least 90 days before making the amendment.

⁴⁴ Concrete action includes the channelling of resources or capital in order to establish or expand a business and applying for permits and licences.

ANNEX 9-J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An investor of a Party may not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claim that Chile, Mexico, Peru or Viet Nam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either:

- (a) on its own behalf under Article 9.19.1(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 (b)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Chile, Mexico, Peru, or Viet Nam,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9.19.1(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if the investor or the enterprise, respectively, has alleged that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Chile, Mexico, Peru or Viet Nam.

2. For greater certainty, if an investor of a Party elects to submit a claim of the type described in paragraph 1 to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Chile, Mexico, Peru or Viet Nam, that election shall be definitive and exclusive, and the investor may not thereafter submit the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NEX 9-K

SUBMISSION OF CERTAIN CLAIMS FOR THRE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Malaysia

Without prejudice to a claimant's right to submit other claims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Malaysia does not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hat Malaysia has breached a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with a covered investment, below the specified contract valu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Malaysia. The specified contract values are: (a) for goods, SDR 1,500,000; (b) for services, SDR 2,000,000; and (c) for construction, SDR 63,000,000.

ANNEX 9-L

INVESTMENT AGREEMENTS

A. Agreements with selec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uses

1. An investor of a Party may not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for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under Article 9.19.1(a)(i)(C)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C) if the investment agreement provides the respondent's consent for the investor to arbitrate the alleged breach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nd further provides that:

- (a) a claim may be submitted for breach of the investment agreement under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 (i)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respondent and the Party of the investor are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 (ii)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provided that either the respondent or the Party of the investor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 (iii)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iv) the ICC Arbitration Rules; or
 - (v) the LCIA Arbitration Rules; and
- (b) in the case of arbitration not under the ICSID Convention, the legal plac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 (i) in the territory of a State that is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and
 - (ii)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spondent.

2. Notwithstanding Article 9.21.2(b)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Consent of Each Party), if a claimant submits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9.19.1(a)(i)(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A); or
- (b) an investment authorisation pursuant to Article 9.19.1(a)(i)(B)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B),

the claimant's submission of a written waiver shall not preclude its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an arbitration under an investment agreement, if that investment agreement meets the criteria in paragraph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3. If a claimant:

- (a) submits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9.19.1(a)(i)(A)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or Article 9.19.1(b)(i)(A) or an investment authorisation pursuant to Article 9.19.1(a)(i)(B) or Article 9.19.1(b)(i)(B); and
- (b) submits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meets the criteria in paragraph 1, and the claims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any disputing party may seek a consolidation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r the terms of paragraphs 2 through 10 of Article 9.28 (Consolidation).

B. Certain agreements between Peru and covered investments or investors⁴⁵

1. Pursuant to Legislative Decrees 662 and 757, Peru may enter into agreements known as “stability agreements” with covered investments or investors of another Party.

2. As part of a stabilit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Peru accords certain benefits to the covered investment or the investor that is a party to the agreement. These benefits typically include a commitment to maintain the

⁴⁵ The fact that this Annex addresses only agreements entered into by Peru shall not prejudice the determination by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garding whether an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another Party meets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greement” in Article 9.1 (Definitions).

existing income tax regime applicable to such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during a specified period of time.

3. A stabilit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constitute one of multiple written instruments that make up an “investment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9.1 (Definitions).⁴⁶ If that is the case, a breach of such a stability agreement by Peru may constitute a breach of the investment agreement of which it is a part.

4. If a stability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one of multiple instruments that make up an “investment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9.1 (Definitions), a breach of such a stability agreement by Peru shall not constitute a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C. Limitation of Mexico’s consent to arbitration

1. Without prejudice to a claimant’s right to submit other claims pursuant to Article 9.19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Mexico does not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ny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9.19.1(a)(i)(C) or 9.19.1(b)(i)(C) i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f that claim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laws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acts of authority⁴⁷:

- (a) *Hydrocarbons Law*, Articles 20 and 21;
- (b) *Law on Public Works and Related Services*, Article 98, paragraph 2;
- (c) *Public Private Partnerships Law*, Article 139, paragraph 3;
- (d) *Law on Roads, Bridges, and Federal Motor Carriers*, Article 80;
- (e) *Ports Law*, Article 3, paragraph 2;
- (f) *Airports Law*, Article 3, paragraph 2;
- (g) *Regulatory Law of the Railway Service*, Article 4, paragraph 2;

⁴⁶ For greater certainty, for multiple written instruments to make up an “investment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9.1 (Definitions), one or more of those instruments must grant rights to the covered investment or the investor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b) or (c) of that definition. A stability agreement may constitute one of multiple written instruments that make up an “investment agreement” even if the stability agreement is not itself the instrument in which such rights are granted.

⁴⁷ For greater certainty, the term “act of authority” includes omissions.

- (h) *Commercial and Navigation Maritimes Law*, Article 264, paragraph 2;
- (i) *Civil Aviation Law*, Article 3, paragraph 2; and
- (j)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rticle 28, paragraph 20, subparagraph VII, and *Federal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 Article 312,

provided, however,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i) shall not be used as a disguised means to repudiate or breach the investment agreement.

2. If any law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amended to permit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f such a claim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Mexico, the limitation of Mexico's consent specified in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hat law.⁴⁸

D. Specific Canadian entities under subpart (c) of definition

For Canada,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includes entities listed under Schedule III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R.S.C. 1985, c. F-11), and port or bridge authorities, that have concluded an investment agreement under subpart (c) of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greement" only if the government directs or controls the day to day operations or activities of the entity or authority in carrying out its obligations under the investment agreement.

⁴⁸ For greater certainty, when any law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amended consistent with paragraph 2, any subsequent amendment of that law may not re-establish the applicability of paragraph 1.

< 부록 2 > TPP-Final-Text-Preamble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solving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gional agreement that promotes economic integration to liberalise trade and investment, br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benefits,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workers and businesses, contribute to raising living standards, benefit consumers, reduce poverty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heir peoples;

BUILD on their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COGNISE the differences in their levels of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economies;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businesses in global market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conomies by promoting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including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supply chains;

SUPPOR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enhancing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opportunities created by this Agreement;

ESTABLISH a predictable legal and commercial framework for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mutually advantageous rules;

FACILITATE regional trade by promoting efficient and transparent customs procedures that reduce costs and ensure predictability for their importers and exporters;

RECOGNISE their inherent right to regulate and resolve to preserve the flexibility of the Parties to set legislative and regulatory priorities, safeguard public welfare, and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public morals;

RECOGNISE further their inherent right to adopt, maintain or modify health care systems;

AFFIRM that state-owned enterprises can play a legitimate role in the diverse economies of the Parties, while recognising that the provision of unfair advantages to state-owned enterprises undermines fair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resolve to establish rul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that promote a level playing field with privately owned businesses, transparency and sound business practices;

PROMOT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effec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further the ai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mutually supportive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actices;

PROTECT and enforce labour rights,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s, strengthen cooperation and the Parties' capacity on labour issues;

PROMOTE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and eliminate bribery and corruption in trade and investment;

RECOGNISE the important work that their relevant authorities are doing to strengthen macro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on exchange rate issues, in appropriate fora;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mong and within the Parties, and that trade and investment can expand opportunities to enrich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t home and abroad;

CONTRIBUT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and provide a catalyst to broad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STABLISH an Agreement to address future trade and invest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advancing their respective priorities over time; and

EXPAND their partnership by encouraging the accession of other States or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in order to further enhanc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create the foundation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HAVE AGREED as follow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3

농업식량법 분야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 부록 ▶ 1. UN 총회 결의문(세계 토양의 날 및 세계 토양의 해)
2.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선언문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송재일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2010년 민사법(농업법)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민사법과 농림수산물식품의약품분야이다.

03

농업식량법 분야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인정보보호 문제의 글로벌 동향

송재일

Abstract

이 글에서는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 논의의 동향을 국제기구의 발간자료, 홈페이지와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국제기구별로는 UNFAO, OECD, WTO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쟁점별로는 ‘세계 토양의 해’ 및 Post 2015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새로운 농촌정책, 식량안보, 국제거래/통상이슈, 국제적 재난 대응(동식물질병), 기후변화와 농업, 농업과 미래,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농촌으로,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까지 포괄하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역이 농업생산성, 식량안보에서부터 최근에는 농촌개발, 위생검역 등의 논의로 넓혀가고 있다.

먼저, 식량과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UN 차원에서 2015년은 세계 토양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 2015)이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화두이다. UN/FAO 의 경우, 이러한 UN 의 식량, 농업부문의 방향성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통상 관련하여서는 1995년 설립된 WTO 가 가장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OECD 와 많은 부분을 논의하는데 자유 시장(Free Market)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OECD 와 WTO 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2013년 발리 WTO 각료회의 합의안의 이행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MC10)”가 열렸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하여서는 OECD 가 두드러지는데, 다양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국의 농업정책과 보조금, 수출경쟁에 대한 지표 조사하여 WTO 나 FAO 등에 논의자료로 제공하였다. OECD 는 2015년의 경우 농업농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는데, 먼저 기존 농업정책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한 뒤, 2006년에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하여 (i) 농업에서 농촌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가치화하는 것, (ii) 1차 산업인 농업부문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관광,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의 2차, 3차 산업까지 포괄하는 것, (iii)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부문의 정책에 대한 유기적,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촌 정책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화, 지역자원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웰빙을 위한 통합적 정책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동향의 소개는 국제규범 속에서 우리나라 입법이 조화를 이루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법과 발전(Law and Development)이라는 법철학적 기초에 입각하여,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식량안보,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FAO, IFAD, WFP 등 국제기구, WTO, OECD 등 정부간 기구의 연구 자료나 세계 여러 나라의 최신 법제를 검토 분석하며, 선진국, 개도국 및 민간원조단체 등과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협력사업의 기초자료 제 공함과 아울러 컨설팅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정성과를 확산시켜 개도국의 농업·

농촌개발 역량강화 및 식량안보를 위한 컨설팅사업이 추진 될 것이다. 물론, 국제적 재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과제에 대한 농업분야의 광범위한 Global Legal 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통해 향후 국제규범과 조화된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법제로 입법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향유, 아름다운 농어촌이 어우러진 국토 공간의 차원 높은 디자인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2015년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국제기구 동향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이나 농업협상에 관한 기본적 논의부터 최근에는 농촌개발, 농업과 환경, 식품이나 위생검역 등의 논의로 넓혀가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UN) 관련기구

국제연합(UN, The United Nations)¹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 국제기관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6개의 주요기구와 보조기구·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연합(UN)에서 식량, 농업 관련 기구로는 첫째, 식량 농업분야 상설전문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²가 있다.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세계의 식량 및 농업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둘째,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1 <http://www.un.org/>

2 <http://www.fao.org/>

Agricultural Development)³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융자·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고 역시 로마에 있다.

이밖에 관련 기구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원들 제공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식량이사회(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속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등이 있다.

(2) 정부간 기구 : OECD, WTO 등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⁴가 있다. 1961년에 회원국과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 및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OECD는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참가하며 국방을 제외한 공공정책과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의 수립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이다.

다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OMC,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OMC,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⁵가 있다.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3 <http://www.ifad.org/>

4 <http://www.oecd.org/>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는 세계 무역에서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 설립 목적이다. 관련된 주요 협정으로는 ①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⁶ ②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 ④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⁷ 등이 있다.

이밖에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간 공통된 문제에 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농민의 빈곤을 타개하며, 농민 후생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아프리카 농촌개발기구(AARDO, 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⁸,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식량증산과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비(施肥) 기술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협력기구인 식량비료기술센터(ASPAC/FFTC, Asia and Pacific Council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⁹ 등이 있다.

5 <http://www.wto.org/>

6 1995년 초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과 함께 효력을 발휘 -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분야로 구성됨.

7 199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 - 기술적인 무역 장벽

8 <http://www.aardo.org/>

9 <http://www.ffmpeg.org.tw/>

II. 식량, 농업 분야

1. UN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2015)”

(1) 개요

2015년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 2015)’ 이었다. 1970년부터 유엔은 세계가 함께 공감해야 할 주제를 정하여 기념해 왔는데, 2014년 “세계 가족농의 해”에 이어 2015년은 “세계 토양의 해”로 결정하였다.¹⁰

세계토양학회(IUSS)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복지와 직결될 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조절해 주는 핵심역할을 하는 토양의 중요성을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세계토양의 날’과 ‘세계 토양의 해’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¹¹ 2013년 6월 태국정부가 제1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서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38차 FAO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1일부터 개최된 제68차 UN 총회 경제·재무분과위원회(The Second Committee)에서 세계토양의 날, 세계 토양의 해 지정 안건을 의결하면서 UN 모든 회원국에서 매년 12월 5일은 세계 토양의 날(World Soil Day), 그리고 2015년은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되었다.¹² 따라서 UN

¹⁰ 참고로 UN은 2016년을 ‘세계 두(豆)류의 해(IYP, International Year of Pulses)’로 선포하며 FAO를 IYP 이행기관으로 지명함에 따라, FAO는 올 한해 정부, 국제기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IYP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¹¹ 특히 2014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20차 세계토양학술대회(20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전 세계 87개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학자들은 “생명과 생태계를 품은 토양”이라는 제목으로 “토양선언문(이른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

¹² 결의안 68/232.

회원국들은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이를 기념하고, UN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였다.

(2) UN FAO의 활동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2013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국제개발기구, 농업단체를 비롯한 NGO 들이 대륙별, 지역별, 국가별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IYS 운영위원회 의장국은 태국이며, 위원국 및 기관으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EU, 독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 민간 부문, 학계 및 기타 UN 기구이다. 사무국은 FAO에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주요 활동으로 IYS 공식선포 행사 개최(2014.12.5, 뉴욕), IYS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작, 웹페이지 개설(<http://www.fao.org/soils-2015/en/>), 향후 5년간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를 위한 지역계획 개발을 위한 지역별 토양파트너십 워크숍 개최 등이 있다.

세계 토양의 날 주제는 2014년 : ‘토양, 가족농의 기반, 2015년 : ‘토양,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다. IYS 특별 대사를 선정하였고,¹³ 세계 토양 상 제정, 토양에 대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캠페인 발족, 토양 관리에 대한 성공사례, 교훈, 정책 등의 지식 공유, 세계 토양 헌장(World Soil Charter) 개정, 세계 토양자원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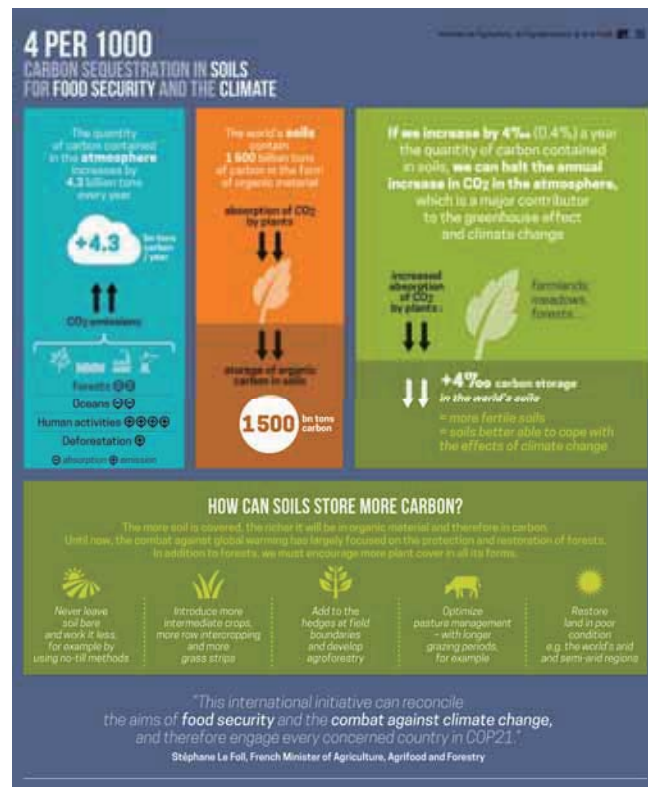
(3) OECD의 활동

OECD에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¹⁴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식량안

13 Claire Chenu 교수(프랑스), Tekalign Mamo 교수(에티오피아)

보 도전에 직면한 농업과 농업용 토양에 대한 OECD-프랑스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프랑스 대표단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토양이 매우 중요하며, '4 per 1000' 접근방법¹⁵을 주장하였다. '4 per 1000'은 4%(0.4%)이란 뜻으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가 매년 0.4%씩 농지, 목초지, 산림에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를 추진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후변화 완화, 식량안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이를 위해 농업생산방식 등의 변화를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그림> 4 per 1000



1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중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말한다.

15 <http://4p1000.org/understand>

회원국들은 4 per 1000 이니셔티브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근거자료로 활용한 데이터의 제시, 변화를 위한 동기 부여의 강화, 토양의 안정적 탄소 보유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시사점

UN의 세계 토양의 해 지정은 건강한 토양이 지속적 발전의 중심에서 있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물과 에너지 안보 유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늦추거나 낮추는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다. 도시의 확대, 숲의 황폐화, 무분별한 토양의 사용과 관리, 환경오염, 과도한 목축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현 시점의 토양 악화 수준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흙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식품 안전, 생태계 보호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지속 가능한 토양과 땅의 관리에 대한 홍보는 식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된 지역 사회,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작년의 국제적인 논의에서 흙의 건강성, 즉 ‘건강한 흙’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건강한 흙은 건강한 먹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 섬유, 약, 심지어 연료로도 쓰이는 식물의 근간이 된다. 또한 건강한 흙은 우리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며,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흙은 물을 여과하여 홍수나 가뭄 피해에서 자생력을 높여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흙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므로, 건강한 흙의 보전은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¹⁶ (i) 현대 사회와 정책 결정자에게 흙의 중요성을 알린다. (ii) 흙의 중요성을 공공기관에서 교

¹⁶ <http://unep.or.kr/main/main.php>

육한다. (iii)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토양자원을 보호한다. (iv)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v)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post-2015의 연계를 강화한다.¹⁷ (vi) 토양에 관한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지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합하여 2015년 3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토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토양이 우리의 식량의 근본 토대임을 널리 알리려는 입법목적이었다.¹⁸

2.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개요

2015년 9월 25~27일 뉴욕 UN 본부에서 전 세계 160여 개국 정상급 수석대표와 UN 등의 국제기구 수장,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유엔개발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이행결과 점검과 더불어, 향후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하는 공동의 과제와 목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그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2000년 시작하여 2015년 종결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표를 말한다. 즉, post-2015 아젠다로서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

17 이 중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바로 아래(2.)에서 따로 설명한다.

18 제5조의2(흙의 날)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 한편 세계 토양의 날과 달리 흙의 날이 3월 11일이 된 것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 + —)을 합해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르는 향후 15년간의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목표로서, 이것도 빈곤 종식이 주요 개발목표가 될 것이다. MDGs 에서 빈곤 해결이 양적으로 해소되었다면, SDGs 에서는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를 원칙으로 내세워 모든 지역이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통해 지역 간 빈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질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SDGs 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를 통합하는 다양한 범주에서 세분화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주체와 개발재원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들까지 넓혀져 있다. MDGs 에 기초한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SDGs 의 4대 아젠다는 (1) 빈곤종식, (2) 불평등 격차 해소, (3) 질적 성장, (4) 환경문제 극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던 MDGs 에 비해 SDGs 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경제,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체화시켰다.

이렇듯 SDGs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수립, SDGs 의 상호연관성과 통합성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립을 통해 다면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포용적 파트너십, 다양한 재원을 이용한 실천수단의 강조, 포용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SDGs 에 대하여는 기존의 MDGs 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더욱 더 넓은 범주의 보편적이고 통합된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¹⁹

선행 목표인 MDGs 와 마찬가지로 SDGs 는 다양한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상호연대를 강조하며, 이를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개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및 목표달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행과정 및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19 자세한 이효정,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세계농업 제17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6. 참조.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이라는 SDGs의 큰 기조 아래, 대부분의 목표가 농림수산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²⁰ 농림수산관련 핵심 개발목표들은 상호연계성을 보인다. 제14목표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과 제15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달성은 제2목표인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세부목표 및 지표 달성의 토대가 되어, 제1목표이자 SDGs의 기본전제가 되는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각 목표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이거나 층위적인 관계로 해석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계 혹은 선순환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이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목표 이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본다.

(2) 국제기구별 대응전략 및 동향²¹

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UN)은 이와 관련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왔다. MDGs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Post 2015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UN은 2014년에 UN 지속가능발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나갈 개발의제를 천명하였다. 다양한 UN 산하기구 및 자문기구들은 각 목적 및 전문분야별로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²⁰ 자세한 최민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 농업농촌부문 의제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기구 동향 2, 2015. 10. 참조.
²¹ 이에 관하여는 UN, OECD, 세계은행 홈페이지 및 원지은,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세계농업 제18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4. 참조.

Post-2015 체제에 대비하여 2012년 리우 지속가능발전총회에서 SDGs 도입에 합의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치적 선언 및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공개작업반은 본격적으로 SDGs 수립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목표 설정 과정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40여개의 UN 산하기구들은 SDGs 의제 개발 및 전문 분석자료 제공을 위해 UN 내부 기술 지원팀(UN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TST)을 결성하였다. 기술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총 29개의 분야에 대해 이슈 브리프(Issue Brief)의 발간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농림수산분야와 연관된 이슈는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식량안보와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사막화, 토지 황폐화 및 가뭄(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감소(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대양과 바다(Oceans and Seas), 숲(Forest),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등을 들 수 있다.

UN 산하기구 중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구들은 농림수산분야 관련 목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를 제시하고 SDGs의 목표 및 지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등은 위의 TST의 일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이슈브리프를 공저하고, SDGs의 목표치 및 측정 지표가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UN 내 기구들의 기술적 지원 외에도 더 많은 개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UN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부터의 조언도 수렴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프리 삭스(Jeffrey David Sachs)²²가 이끄는 “UN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이다. SDSN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2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경제학자

2012년 8월 발족한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조직이다. SDSN은 위의 설립 목적에 따라 Post-2015 관련 논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왔으며, 리더십 회의(Leadership Council) 아래 국가별 SDSN 지부(Chapter) 조직을 통해 좀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DSN은 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12개의 테마 그룹(Thematic Group)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액션 아젠다(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SDGs의 주요 개발목표 및 세부목표를 확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이 아젠다에서 제시된 10개의 우선목표 중, 제1목표인 ‘기아 등 극심빈곤의 퇴치(End extreme poverty including hunger),’ 제6목표인 ‘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Improve agricultural systems and rural productivity)’은 농림수산분야와 관련된 내용이다.

SDGs 관련 세부 목표 및 측정 지표들은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s, UNSD)에 의해서도 검토된 바 있으며, 현재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에서 2015년 5월 발족한 기관 간 전문가 그룹(Inter-agency Expert Group, IAEG-SDGs)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이행계획 수립을 담당하였다. SDSN은 SDGs와 관련한 보고서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IAEG 측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지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SDSN은 정부 및 학계를 비롯한 SDGs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핵심목표에 대해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2015년 12월에 발간된 “SDGs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가이드(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Stakeholders)”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지난 MDGs의 교훈 및 시사점을 비롯하여, SDGs의 기본이념 및 핵심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해당사자의 역할 및 제도 정비,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 및 로드맵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컨대 UN은 SDGs의 성공적인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DGs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여, 포용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더 많은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하고 있다.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선진국들을 회원국으로 삼아 개발도상국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OECD는 주요 국제기구이자 공여기구 중 하나로서, UN의 Post-2015 아젠다와 SDGs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국가별 정보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의 대응전략과 태도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관련 분석, 도구 및 접근에 대한 통찰(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보고서에서 OECD는 7가지 방안을 통해 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그 중 세 번째 방안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개발 지원’에서는 OECD가 농촌개발 및 도시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기반의 농촌개발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국가가 좀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식량 안보 및 역량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네 번째 방안 ‘지구의 지속가능성 보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해 OECD에서 연구 및 시행하고 있는 세금 징수 프로그램과 관련 협의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16년 2월에 발간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에서는 UN에서 제시한 SDGs 핵심목표에 기반을 두어 향후 OECD가

SDGs 달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 및 지원을 수행할지와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OECD는 축적된 국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 정도 측정과 정책적 자문 및 전문 지식 제공, 특정 섹터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나 파트너십 지원 등을 조직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일련의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OECD가 SDGs 달성을 위해 제시한 전략과 액션 플랜은 2016년부터 실천에 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2016년 3월 OECD가 개최한 제8회 글로벌 개발포럼은 ‘SDGs의 합의부터 실제 이행까지: 정책, 자료 및 재원조달(From Commitment to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Policies, data and financ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어떻게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과 지역 이니셔티브 기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농업농촌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 개발도상국을 위한 툴킷(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보고서가 공개되어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SDGs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개발 전략의 구성 및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참고할 만한 농촌개발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농촌개발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다. 세계은행/다자간개발은행

(World Bank/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MDB)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경제개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개발목표와 비교하여 SDGs가 더 많은 분야의 개발목표를 포함하게 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재원의 조달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다자금융기구들은 개발재원의 패러다임 전환 및 규모 확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가 주를 이루는 개발재

원의 한계를 자금원 및 투자방식의 다양화, 특히 민간자본의 유인으로 극복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SDGs의 달성을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은 2015년 10월에 열린 제91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본 선언문에서는 주로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협력과 SDGs 핵심목표와 관련된 분야(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재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효율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개발재원의 확충을 위해 3년간 양허성, 비양허성 자금을 포함한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SDGs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은행은 각 국가별로 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재정적 요인을 밝히고 이를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한 재원 증가방안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국가 진단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를 발표하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다자금융기구들은 SDGs 달성을 위한 향후 재원확충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i) 첫 번째 방식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원흐름을 형성하여 세금, 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선례로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생산성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인 G20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20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을 들 수 있다. (ii) 두 번째 재원조달 방안은 장기적인 재원 흐름 및 유동성, 특정 개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채권 및 부채 관련 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청정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채권(Carbon Bonds)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지급되는 조건부 차관(Contingent Loans)을 들 수 있다. (iii) 세 번째 방안은 국가차원의 위협이나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의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 위기관리 방안인데, 다양한

국가 상황에 기반을 둔 보증제도, 파생상품, 혼합재원(blended finance)이 그 예에 해당한다. (iv) 마지막 방안은 성과에 기반을 둔 용자(Result-based Financing, RBF)방식인데, 정해진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cash transfer)이나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풀 메커니즘(Pull Mechanism)을 예로 들 수 있다. 선례로, 소규모 농가의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 분야의 R&D 연구를 결합한 AgResults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3) 농업부문 SDGs 내용

SDGs 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및 100개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s 의 17개 목표 중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목표1과 2로 빈곤종식과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가. 목표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MDGs 를 통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 인구의 감소는 달성되었으나, 빈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역과 계층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SDGs 에서는 일차원적인 빈곤 해소보다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빈곤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UN 에서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은 영양, 교육, 보건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표현의 자유까지 다면적인 빈곤의 해소를 의미하며 이는 SDGs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SDG 목표1로 설정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의 아젠다 21로 설정된 이후 1995년 코펜하겐 선언, 2000년 MDGs 목표1 설정 등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발표된 이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빈곤 퇴치는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하

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며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행동강령의 우선순위로 7가지를 명시하였다.

1. 생계 및 기업 활동과 생산적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개선
2.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3.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4.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5. 소외계층의 빈곤 여성 문제 해결
6. ODA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영역 개발재원 확대
7.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200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채택한 다년간의 프로그램에서 빈곤 퇴치는 매년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되어 왔다. 또한 리우+20 회의의 참여국은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UN 개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빈곤퇴치가 최우선시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 조직적, 일관된 전략을 통해 빈곤의 근본원인과 당면 과제를 다루어야함을 역설하였다.

나. 목표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식량과 농업은 기아와 빈곤 해소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식량생산 및 소비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은 모든 세대에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도 가능하게 하며 기후변화 문제 또한 연관되어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3%인 85억 명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식량 및 농업자원 및 기술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5년 처음으로 식량과 농업 이슈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농업을 토지자원 이용 등과 관련한 경제의 한 분야로서 초점을 맞추자 식량생산 증대 및 지속가능 농업환경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2009년 농업은 전문분야별 영역 중 하나로 농촌 발전, 토지, 가뭄, 사막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 이행전략에 포함되었다. UN 사무총장은 ‘2015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서 도농 간 격차를 언급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농촌개발을 강조하였다.²³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둔다.

-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공급 보장
-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모,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 2.3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23 2015년 기준 전 세계 28억 인구가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생산성과 교육 수준,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어 빈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전체 도시인구의 4%인데 반해 농촌 지역의 경우 16%에 달하고, 농촌지역 인구 중 50%는 위생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반면 도시 거주민의 경우 18%의 수치를 보이는 등 도농 간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4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목표2는 기아, 식량안보 및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관련된 것으로 세부목표 2.1과 2.2에서 직접적으로 기아와 영양결핍을 언급하고 있으나 달성시점 및 명확한 지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세부 목표 2.1은 빈곤과 기아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세부목표 2.2번은 주로 보건 분야에 중점을, 세부목표 2.3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목표 2.4는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생태계 및 환경과 관련이 깊다. 기아 및 식량안보의 측정지표로는 현재 영양결핍 유병률, 식량불안정 경험치, 식량소비지수, 아동 발달 저신장 비율 등이 있으나 추후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불평등 감소 등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KOICA 2015). 특히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다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환경, 인프라, 교육, 물, 보건, 일자리, 사회적 보호, 여성권리 신장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식량이 의미하는 총체적인 개념은 식량 및 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생산, 저장, 가공, 유통, 수확 후 관리, 시장 접근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어 빈곤 및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기아 및 빈곤해소와 가장 직결되는 의제이며 이에 농업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는

- (i)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 (ii)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 (iii)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²⁴

(4) 시사점 및 함의

SDGs는 개별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아젠다를 국제사회가 공통의 행동규범으로 선언한 전례 없는 이행 목표이다. SDGs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며 ‘윈-윈(win-win)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번영 및 세대를 초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MDGs 체제에서의 개도국 중심의 개발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농업, 농촌 분야와 관련된 SDGs의 목표1(빈곤퇴치)과 목표2(기아, 식량안보 및 농업)를 살펴보면 SDGs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빈곤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소와 사회·환경적 빈곤취약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MDGs가 절대빈곤 해결을 강조했다면 금번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해 국가별 차이에 기반을 둔 보편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목표2에서 강조된 농업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기아해소, 빈곤 종식,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다면적인 산업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교육, 위생, 보건, 여성의 권리 등과 같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²⁴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2015).

식량안정화 시스템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일차원적으로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한 토지 및 수자원 개발, 기계 보급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식문화 개선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농촌지역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공유 및 기술 활용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시장이나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농과 여성농민 대상의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빈곤 및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강조되는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슈이며 빈곤퇴치, 기아, 식량안보, 영양, 환경, 빈부격차, 평등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이며 기존보다 세분화된 목표와 100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농업, 농촌분야의 협력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에서 SDGs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한국의 농촌개발 사례와 같은 국가 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은행과 다자은행도 SDGs 관련 분야를 우선 투자한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농업농촌정책과 은행들의 우선순위 및 자금 운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3. 식량안보를 둘러싼 FAO의 활동

(1) 개요

1983년 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적당한 식량에 항상 접근 가능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식량안보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① 식품 생산의 적절성, ② 식품 공급의 안정성, ③ 취약 집단의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 농업부(USDA, 1996)는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항상 가질 때 식량안보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세계 식량안보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영양 부족률이 아닌 절대인구로 판단하면 지금의 식량안보 상황은 1990년대 초반보다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편차에서 보듯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목표중심의 국가정책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식량안보는 식량수급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 정치적인 약속과 추진노력, 농촌정책이나 환경, 교육 등 농업과 관련된 조치, 농가의 생산유인책으로 제공되는 비료나 가격보조, 예산 재원과 행정능력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가격보조 중심의 개도국의 식량안보 조치들은 국제무역법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식량안보 불안정 국가들은 농업생산성이 낮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는 농업 R&D의 잠재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5년에는 네팔 지진, 에볼라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한 식량안보 이슈가 문제되었다.

(2) FAO, 네팔 지진 피해농가 긴급지원

2015년 4월 25일, 강도 7.8 규모의 지진이 네팔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진도 4.5~6.7 규모의 여진이 수십 차례 발생했다. 네팔 지진으로 5천여 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부상 또는 실종되었다. 피해지역은 카트만두(Kathmandu)와 포카라(Pokhara) 등 네팔 최대 도시를 비롯한 취약성이 높은 산간, 농촌 지역을 포함하며,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병원, 학교, 도로, 다리 등 인프라시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많은 수의 산간, 농촌 지역 취약계층이 고립되었고, 피해인구의 식량안보 상황은 식량에 대한 접근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다. FAO는 네팔 정부 및 식량안보를

러스터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인구를 긴급 지원하였다. FAO와 파트너들은 벼 식부를 위한 작물생산 패키지 배급뿐만 아니라, 가축사료 및 동물건강을 위한 수의용품 제공 등을 지원하였으며, UN 기구와 파트너들도 긴급농업지원 외에 필요가구에 대한 5만 톤의 식량배급, 금전 지원, 지역사회 재건을 도왔다.

(3) FAO, 에볼라의 식량안보 위협 대응 프로그램 발족²⁵

FAO는 2015년 10월 8일, 에볼라의 급속한 확산으로 농촌경제, 영농활동, 시장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식량공급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9만여 취약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서아프리카지역 대응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FAO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각국 정부, UN 기관, 농업·수의·산림 관련 국내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에볼라 확산 방지, 즉각적·장기적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달성, 복원력 강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UN의 인명구조 및 생계보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을 통해 UN 파트너들의 인명피해 감축 노력을 돕는 동시에 소득, 영양수준 및 식량안보를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FAO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한 감염위험 감축
2. 식량 및 환금작물, 축산물, 수산물 생산량 증대
3. 농촌소득보호를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도입
4. 동물-사람 간 에볼라 바이러스 전이 위험 감소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대응시스템 구축

²⁵ FAO 홈페이지 “Ebola : FAO launches new initiative to tackle growing food security threat”
2015년 10월 8일자

4.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도심과 도심지 주변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 활동을 의미하며, 식량작물, 가축 및 수산물에서부터 허브, 관상용 및 치료용 작물 등 거의 모든 농업 생산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인적 자원, 자연 자원(토지, 물), 서비스 산업 등의 전후방 산업이 모두 연관되며, 도시 주민의 지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공원, 옥상정원, 공유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도시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FAO의 로컬 푸드 공급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하여 빈곤 완화, 식량안보, 영양개선, 도시환경 개선, 시민공동체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4월 UN-HABITAT이 콜롬비아에서 제7차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을 개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각국에서 국내 법률의 제정이나 정책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 등이 잇달았다. 일본에서는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미국에서도 각 주나 주요도시마다 구체적인 법률이나 프로그램이 가시화되었다.²⁶

5. OECD의 농업정책 논의

(1) 개요

OECD에서 농업정책은 농촌정책으로 논의된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여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26 세이 영, 도시농업 및 유기농업 동향, 세계농업 제178호, 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6월 참조.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농촌지역정책작업반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 도시지역정책작업반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으로 구성된다. 이 중 농촌지역정책작업반이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촌 정책의 변화와 방향, 각국의 사례 등을 논의하며 공유하는 자리이다.

농촌지역작업반 회의는 2015년 11월 2일~4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차 회의였다. 이에 앞서 2015년 5월에는 미국 멤피스에서 제10차 **OECD** 농촌 발전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농촌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OECD 농촌정책의 변화와 각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OECD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가.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²⁷

OECD 각국이 과거 유지해 왔던 전통적인 농촌 정책은 농업 등 특정부문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으며, 특히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수행자는 중앙정부가 되며,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농업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해 보조금 투입을 주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OECD 각국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업 중점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농촌의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농업부문 종사자는 전체 농촌 고용의 10% 이하이고, EU에서도 농림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²⁷ 이에 관하여는 OECD, The new rural paradigm, OECD Publishing, Paris, 2006; 엄진영 OECD 농촌개발정책, 세계농업 제186호, 2016, 2. 참조.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OECD 각국은 농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느꼈고, 각국이 모여 논의한 결과 2006년에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는 농촌정책의 목표를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가치화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는 정책의 주 영역을 농업부문에만 두는 것에서 벗어나 관광,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의 2차, 3차 산업까지 포괄하여 정책의 주요영역으로 삼았다. 따라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는 농업만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부문의 정책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나. 2015년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²⁸

OECD는 2006년에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제안한 후, 2015년에는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을 제시하였다. 2006년부터 OECD 각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공유과정 속에서 OECD 각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 정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촌 정책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화, 지역자원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웰빙을 위한 통합적 정책에 목표를 둔다.

둘을 비교하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이 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에 주목했다면, 새로운 농촌 정책은 구체적으로 “낮은 밀도를 지닌 경제(low density economy)”에 주안점을 둔다. 보조금을 주던 기존의 정책수단이 새로운 농

28 이에 관하여는 OECD, New Rural Policy: Linking up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2015. ; 엄진영 OECD 농촌개발정책, 세계농업 제186호, 2016. 2. 참조.

촌 패러다임에서는 투자로 이어졌다면, 새로운 농촌 정책에서는 농촌지역의 도시와의 보완성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농촌 정책에서는 농촌지역의 웰빙을 위한 통합적 정책에 목표를 둔만큼 농촌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었다.²⁹

OECD 에서 장기적으로 농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새로운 농촌 정책을 실제적인 정책으로써 투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개념을 사전에 재검토해야 했다.

첫째, 재정지원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과거 농촌 정책은 농업과 같은 특정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 평등을 꾀하였으나, 1980~90년대 농업 부문의 고용감소는 각국 농촌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는 기존의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개념에서 지역별로 다른 투자 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 구조적 변화를 겪은 농촌을 규정할 수 있는 좀 더 적합한 개념이 필요하다. 과거 농촌은 도시가 아닌 지역, 즉 “비도시지역(non-urban)”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나,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하에서는 ‘장소에 기반을 둔(placed-based)’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했던 기존의 정의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OECD 는 1990년 이래로 국제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OECD 는 기존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이분법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2012년에 지역 유형분류를 TL2, TL3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TL2는 전체 국가 단위 바로 아래의 첫 단계 지역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행정단위로 간주된다. TL3은 지역 단위로 다시 3가지 지역 유형, predominantly urban, intermediate rural, predominantly rural 로 나뉜다. predominantly urban 은 농촌지역 인구비중이 15%이하인 지역이고, intermediate rural 은 농촌지역 인구비중이 15%~50%인 지역을 의미한다. predominantly rural

29 OECD, *New Rural Policy: Linking up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2015.

은 농촌 지역 인구비중이 50%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 분류에 인구밀집도, 주요도시 중심지, 출퇴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한, 확장된 지역 분류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도시와 가까운 지역(close to cities)”, “먼 지역(remote)”으로 구분한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이 분류기준으로 농촌지역 거주민의 약 80%가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20%가 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분류는 정책의 대상지 선정 등의 문제에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³⁰ 현재까지 합의된 개념은 농촌과 도시는 행정적 분류가 아닌 기능적 분류로 정의되는 것이 현대 경제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보완적 관계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복합지역(mixed areas)을 반영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농촌 정책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 중심의 관점에서 농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 농촌은 쇠퇴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 자본 1단위당 GDP 성장률은 1.7%로 도시지역 평균 성장률 1.5%보다 높았다. 이러한 농촌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넷째, 농촌의 웰빙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측정할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웰빙은 정책 이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웰빙은 소득부터 일자리까지 삶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웰빙을 결정짓는 지역적 요소는 고용, 서비스 접근성, 오염, 안전과 함께 건강, 교육, 소득, 시민참여, 주거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즉, 웰빙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웰빙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느 한 측면

30 이와 관련한 사례로 2014년 칠레는 농촌 정의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OECD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농촌 정의에 따르면 칠레 인구의 12%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나머지 88%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분명한 농촌 정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제적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

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표에 대한 논의를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단계를 거쳐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 이행을 위한 단계에서는 4가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도시- 농촌 간 교류이다. 농촌 중에서 도시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평균적으로 인구성장률과 1인당 GDP 성장률이 빠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연결고리들로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행정 구역, 정책 틀에서의 연결, 인구이동,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환경 등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연결고리는 동일하지 않다. 각각의 연결 고리는 서로 다른 “기능적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서로 다른 “기능적 지역”들의 복잡한 상호관계관리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파트너십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국이 새로운 농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이다. 농촌지역 기업은 로컬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자연자원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촌 지역 기업은 제한된 지역 경제 활동의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경제는 농촌 기업의 투입물(input) 공급 제한과 상품 판로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지역 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정부가 농촌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은 일방적인 농촌 지역 기업 보호가 아닌, 농촌 지역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산성이 저조한 농촌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소득 및 취업이 감소할 수 있지만, 농촌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장

기적 관점에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적용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 적용에 앞서 필요한 논의는 “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지역별, 국가별로 달라진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the best) 서비스 전달이 아닌, 충분히 좋은(good-enough) 서비스 전달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을 통합하여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넓혀 유효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 농촌의 경우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적은 수혜자로 인해 잘 공급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좋은 선택은 필요한 지역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지역통합으로 유효수요를 넓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식료품점을 함께 입점하도록 하여 간접비(overhead costs)를 감소시켜, 경제적 규모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Telemedicine, 또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도서관 등 모바일 서비스 전달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각국의 농촌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소통의 향상이다. 현재까지 OECD 각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적용해 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즉,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상향식 거버넌스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도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험, 지식 공유, 네트워크 증진 등을 통해 각국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지지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3) 각국 사례

2015년 5월 미국 멤피스에서 개최된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와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농촌작업반 회의에서 각국 사례 및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 사회, 환경 3개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경제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창출을 통한 농촌의 성장은 도시의 수요, 도시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유입 등 도시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농촌의 기업 모델은 소규모 비즈니스,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 통상적인 도시형 기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농촌이 처해있는 환경도 도시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을 포함한 농촌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환경, 도로 교통 환경, 포장, 유통체계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령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리더십 육성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 평가되려면 농촌지역은 도시형 평가 모델과는 다른 정책 효과 측정 변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형 평가 모델에서는 일반적인 고용인구수 증가 등을 그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농촌지역을 평가할 때 이러한 지표는 농촌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 기업 발생, 고용인구당 GDP 등의 측정변수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어떤 지역을 정책 대상지로 할 것 인가를 논의할 때 사전에 필요한 것은 농촌의 특성에 따른 지역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산업 구조 및 특성 분석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분석이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도시 인접 지역, 농업지역, 관광레저지역, 광업지역, 도시근교, 그리고 원거리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해 1985년부터 중간조직인 Community Futures 를 조직하여 기업육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집행(대여)하도록 하며, 각 기업이 지역사회 경제에 잘 적응하도록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응전략을 함께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준다. 2015년 기준으로 약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기업을 돕고 있다. 1985년 이후로 현재까지 495,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농촌지역에 \$420억의 직접 투자 효과를 가져왔

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ommunity Futures 지원을 받은 기업의 평균 고용성장률은 9.5%(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4.2%), 5년 후 기업 생존율은 76%(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60%), 기업 수익 성장률은 13.8%(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6.1%)이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리더십 프로그램(Scottish leadership program)이라는 정책을 2007년부터 운영하여 2015년까지 2천여 명의 농촌리더를 육성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리더 양성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리더 양성에 1파운드를 투자할 때 약 17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연계 사례로는 폴란드의 통합적 지역 투자(Integrated Territorial Investment, ITI)와 유럽연합의 지역사회 주도 지역발전(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CLLD)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폴란드의 통합적 지역 투자는 농촌지역의 기능적 측면 고려와 함께, 농촌은 도시 지역과 함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통합적 지역 투자 정책의 목적은 농촌과 도시간의 협력 유도, 특정 지역 수요에 대한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기능적 지역의 지방정부 권한과 정책에 대한 영향 증대에 있다. 이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시스템 개선, 환경 관련 사업,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연구 및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사회 주도 지역발전은 통합된 지역개발 정책이며, 지역의 필요와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농촌지역의 각 주체들이 지역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주도 지역발전의 기본원칙은 파트너십이며, 파트너십에는 기업부문, NGO 부문까지 포함한다.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사항 및 실행 전략을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정책은 파트너십 간 또는 참여주체들 간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나. 사회부문

첫째, 시민의 참여와 신뢰도가 높은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의 혜택과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시민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들을 조정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관여할 우선순위와 중점 부문을 함께 디자인하고, 둘째, 소농·학생·교사, 은퇴자, 소규모 지자체장 등과 같은 주변부 주체들 (marginal actors)의 참여 독려, 셋째,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들 간에 지역의 관심과 새로운 연합 증진, 넷째, 공공기관 및 민간의 주체들을 포함하여, 좋은 지역리더에 투자하는 것 등의 정책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을 적극 실천한 사례로 미국 켄터키 동부의 SOAR(Shaping Our Appalachian Region(Inc.))가 있다. 이는 2013년에 지역 의원과 주지사가 당적을 넘어 켄터키 동부지역이 맞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위기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정책 투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론적 접근이 아닌 특정 지역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정책 활동의 초점 역시 추상적인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요구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정책 활동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이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농촌 정책 방안이 되려면, 구체적 방법의 고민과 실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농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구유출, 고령화 등 농촌지역이 가지는 여건은 농촌지역의 서비스 전달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주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지,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지방자치단체 존립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핀란드의 경우, 과거부터 강력한 지방자치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해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주민 서비스 약화로 인해 지자체 재구성 (reorganizing)을 진행 중에 있다. 재구성된 지자체들은 지자체 간, 커뮤니티 간 또는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모바일 헬스 케어 서비스, (인터넷 기반) 효율적 ICT 활용과 e 서비스 개발, (지역거점) 'One Stop Shop'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Inner Area'의 발전을 통한 국가성장 전략 수립하고 있다.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으로부터의 도달시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전략적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심지역으로부터 20분 이내 지역('Belt Area'), 20분~40분 이내 지역('Intermediate Area'), 40분~75분 이내 지역('Remote Area'), 75분 이상 지역('Ultra-Remote Area')으로 분류하며, 20분 이내 지역('Belt Area')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Inner Area'로 분류한다. 'Inner Area'로 분류되면 교육, 건강, 이동성(교통)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 관련 부문을 집중해서 투자한다.

다. 환경부문

첫째, 기후변화와 농촌지역의 적응력 향상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업활동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기 위한 정부, 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 각국은 동의하였다.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과 비농업인간의 연계 강화와 농업정책시스템과 농촌정책시스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7개의 기후변화대응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농촌은 자연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0.2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고, 현재도 기온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재배 작물의 종류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가 19% 증가하여 허리케인·가뭄·홍수·4계절 서리 발생 등 기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14~'18) 및 국가발전계획('13~'18) 하의 농어업 식품

부문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바이오 경제와 농촌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 바이오 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농촌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농촌경제에서 다각화 전략의 채택이 바이오 경제 밸류 체인(value-chain) 내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바이오 경제는 지역 및 농촌의 균형개발은 물론,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의 순효과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바이오경제와 농촌정책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인 실행계획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U와 북유럽 국가의 경우, 바이오경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2조 유로 매출, 2,200만 개의 일자리, EU 노동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의 경우 1,840억 유로 매출과 경제의 10%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농촌지역인 Ornskoldsvik의 경우 전체고용의 25%를 바이오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유럽국가들은 바이오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편익도 있지만 인해, 관련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높은 원재료비용, 엄격한 관련규제, 대체자원과의 경쟁 등의 저해 요인이 있어,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바이오경제의 절반정도가 산림기반의 바이오경제기반으로, 관련 사례지역으로 North Karelia를 꼽는다. North Karelia는 인구 16만 5,000명(인구밀도 8명/km²)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핀란드 북쪽의 농촌지역이다. North Karelia는 1990년부터 바이오경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왔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2020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계획인 ‘기후와 에너지 프로그램(Climate And Energy Programme)’을 수립하였고,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선두주자로 지역 전체 에너지 소비의 67%를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경제와 농촌정책을 연계하고 있는데 대표

적인 지역으로 델타(Delta)지역을 들 수 있다. 델타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 다양한 작물과 가축, 혁신적 농부들, 로컬 푸드 네트워크, 운송체계, 관련 연구소, 대학의 연구 개발 등을 갖춘 우수한 지역으로 바이오 경제 접근에 있어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현재 바이오 경제와 연계한 대표적인 농촌정책으로 Regional Strategy 1.03)과 Regional Strategy 2.04)을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정책에서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과 2015년 제시된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농촌 정책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 OECD의 농촌 발전 컨퍼런스와 지역개발위원회의 농촌작업반 회의를 통해 각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각 나라의 비전과 여건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각 나라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진행되는 모습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었다. 각국은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농촌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를 모았다.

현재 OECD 각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포용하고 새로운 농촌 정책 방안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OECD의 새로운 농촌 정책이 현재 우리 농촌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치하는지, 만약 일치한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의 농촌 정책은 어느 지점에서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국이 농촌 정책을 이행할 때 직면했던 도전과 한계, 성과 등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서로간의 지식과 경

힘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지지해 나가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6. WTO 농업협상

(1) 개요

농산물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WTO 규범 및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WTO 농업협정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의 수준 및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기구로 넘어가 해결한다. 1995년 설립된 WTO가 가장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있고 OECD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자유 시장을 존중하는 논지에 중심이 있다. OECD와 WTO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WTO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한 2년에 한 번 개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1년 11월 WTO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 협상 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 의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대 축(3 pillars)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장접근은, 구간대를 정하여 현행 양허관세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감축률을 부과하는 구간별 감축방식이 기초이다. 다만, 민감 품목 및 특별품목 등 관세감축의 예외를 인정한다. 시장접근 분야 관련 이슈로는 ① 관세감축률, ② 관세 상한, ③ 민감 품목, ④ 특별품목, ⑤ 개도국긴급수입관세(SSM), ⑥ 긴급수입관세(SSG), ⑦ 쿼터 내 관세, ⑧ TRQ 관리방안, ⑨ 관세단순화, ⑩ 경사관세, ⑪ 열대작물, ⑫ 특혜잠식 등이 있다.

다음 국내보조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감축하는데,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큰 폭으로 감축하고, 보조금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보조 분야 관련 이슈로는,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② 감축대상보조(AMS), ③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④ 블루박스(Blue box), ⑤ 허용보조(Green box) 등이다.

끝으로 수출경쟁에서는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되,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분간 허용한다. 수출경쟁 분야 관련 이슈로는 ① 수출보조, ② 수출신용, ③ 수출국영 무역기업, ④ 식량원조 등이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등을 거쳐 2008년 의장초안 4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합의 실패하고 2009년 12월 제네바 각료회의 시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실패하였다.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일괄타결에 앞서 진전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3년 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라도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2013년 9월 1일 신임 WTO 사무총장(Mr. Azevêdo)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으며,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개발문제를 다루었는데,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관한 보조의 한시적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하면서, 일부 이슈³¹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하였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각료회의 합의(발리 패키지-무역원활화, 농업, 면화, 개발 등 4개 분야 10개 합의문)의 이행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2014. 11. 27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 개최하여 발리 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 3건을 채택하였다. 즉, ①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②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③ 포스트 발리 워크 프로그램 등이다. 임시 평화조항(Peace clause)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식량 확보나 공공부문 재고에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보장한다.

31 즉,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농업 분야 일부 및 개발 이슈이다. 일부 농업이슈란, ① TRQ 관리, ②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일반서비스, ④ 수출경쟁, ⑤ 면화 등이다.

2014년 7월 무역원활화 협정 의정서 기탁을 앞두고 인도가 협정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발리 이후 워크프로그램 및 DDA 협상 전반이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 인도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해법모색 시까지 이의제기를 자제하기로 한 발리 결정이 개도국 입장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하였다. 9월 이후 인도 대사의 제네바 방문 및 대사급 회담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11월에는 미국과 인도가 식량안보 공공비축과 무역원활화 협정 관련 합의를 달성하였다.

(2) 2015년 논의동향

가. 제10차 WTO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³²

2015년 12월 15~19일에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가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되었다. MC10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란 점에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MC10은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MC10이 거둔 성과는 DDA 협상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MC10은 농업부분에서 ①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ublic stock holding), ③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asure, SSM)와, 다른 분야에서 ④ 면화, 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관한 특혜 원산지 조치, ⑥ LDC에 관한 서비스 면책(waiver) 조치 등 총 6개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비록 그 합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확인되었지만, 농업분야에 관

³² WTO,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및 임송수,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세계농업 제185호, 2016. 1. 참조; 윤동진, “제10차 나이로비 WTO각료회의를 돌아보며”,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 참조.

한 MC10의 결과는 지금까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회원국의 견해와 협상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i) 각료선언문(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³³

이전의 각료선언문과 마찬가지로 MC10 각료선언문은 개도국의 개발이 협상의 핵심이며, 무역을 통해 최빈개도국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 개도국 특별우대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개도국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전과 다르면서도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남은 도하 문제(Doha issues)에 관한 협상을 진척시키되, 많은 회원국들이 DDA 를 다시 확약(reaffirm)한 반면에 도하 위임 사항을 다시 확약하지 않은 일부 회원국들이 있으며, 이들은 의미 있는 협상 성과를 위해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점 등 회원국 간 이견이 명시된 사실이다. 이는 마치 회원국 간 이견이 있다는 점에 서로 합의한 형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접근” 또는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새로운 문제들이란 투자(investment), 경쟁(competition),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등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의제들이다. 반대로, 인도와 중국 등 주로 개도국들은 기존 DDA 틀(architecture)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며, 새로운 문제들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프로만(Froman) 장관은 MC10 개최 전 신문 기고를 통해 “지금 이 도하의 제약으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질 때”라고 밝히고, “새로운 형태의 실제적인(pragmatic) 다자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표방하였다(Financial Times 2015). 곧 이번 MC10에서 미국의 입장이 도하 라운드의 종료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MC10 각료선언문이 도하 라운드의 사망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혼수상태

33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mindecision_e.htm

의 환자(=도하 라운드)에 생명유지 장치(=수출경쟁 등 일부 협상 타결)를 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Agra Europe 2015c). 특히, 각료선언문에 사용된 용어가, “도하 라운드가 수명을 다한 것(Doha round is done)” 임을 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EU의 말름 스트롬(Malmstrom) 무역 집행위원장은 “아무런 경향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didn't predispose anything)” 라고 답하였다(Inside U. S. Trade 2015a). 앞으로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DDA 의제들 가운데 어떤 것을 유지, 첨가, 삭제, 갱신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제의 고려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이다. 단, 새로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DDA 출범 이후인 2004년에 새롭게 도입된 의제인 무역 촉진(trade facilitation)이 도하 라운드의 첫 번째 협정이 된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ii) 수출경쟁

MC10의 종료 회의에서 아제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은 수출경쟁에 관한 합의가 “아주 역사적(truly historic)”이며 “농업 분야에서 WTO가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the WTO's most significant outcome on agriculture)” 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실패가 습관(habit)처럼 되어 있던 WTO가 성공의 습관을 기록한 사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실 MC10 전에는 회원국 간의 간극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국내보조와 시장접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경쟁 분야의 협상만 타결한 것은, 통상 회원국들이 농업 또는 DDA 모든 분야에 걸쳐 자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거나 그 득실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외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경쟁에 관한 합의는 일부 회원국 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과 함께 수출경쟁 협상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던 EU는 수출경쟁에 관한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Agra Europe 2015b). 특히 EU는 지금까지 미국이 주로

사용해온 수출신용에 관한 규제를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낸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반면 인도는 개도국이 수출보조를 2018년까지 철폐해야 한다는 사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조의 즉시 철폐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닐지 모르나 실제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의 보조 규모도 양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출보조가 지금까지 줄 곳 국제무역을 가장 왜곡하는 보조로 지적되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어 온 사실과, 최근의 국제시장 상황을 대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제시장의 변동에 따라 수출보조의 활용도가 변할 수 있을 터인데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둘째, 2005년 홍콩 각료회의는 이미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2013년 말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C10의 이번 합의는 미뤄왔던 지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2014년 11월 26일에 WTO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수출자금 조달보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한 회원국은 호주, 미국, EU 등 13개국이고, 국제 식량원조의 사용국은 호주, 중국, 미국, EU, 일본, 대만 등 16개국으로 나타났다. MC10의 합의로 수출자금 조달보조와 식량원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비로소 명확히 설정한 것은 큰 성과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회원국들이 이 두 조치를 직간접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새로운 규정이 해당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34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수출보조가 허용된 국가와 품목 수는 호주(5개 품목), 브라질(6개), 캐나다(11개), 콜롬비아(18개), EU(20개), 아이슬란드(2개), 인도네시아(1개), 이스라엘(6개), 멕시코(5개), 노르웨이(11개), 남아프리카공화국(62개), 스위스(5개), 터키(44개), 미국(13개), 우루과이(3개), 베네수엘라(72개) 등 총 16개국에 294개 품목이다 (WTO 2015a). 그러나 WTO(2015b)는 위 회원국 외에도 불가리아(44개), 키프로스(9개), 체코(16개), 헝가리(16개), 뉴질랜드(1개), 파나마(1개), 폴란드(17개), 루마니아(13개), 슬로바키아(17개) 등 모두 25개국이 수출보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가운데 최근 통보에서 수출보조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고, 그 보조 규모도 양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조 권한이 없는 한국의 관점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규정은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혜택이 2023년에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은 수출 농산물의 유통비용, 곧 취급(handling), 등급 향상(upgrading), 기타 가공비용(processing costs)과 일반 국내 운송보다 나은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한 수출물량 대상의 국내 운송과 화물비용을 절감시키는 보조를 감축의무 없이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기대어 한국은 2001년부터 가장 최근 통보연도인 2008년까지 연간 평균 278억 원의 수출보조를 지급해 왔다. 이러한 수출보조 규모는 정부의 예산 집행 항목인 농축산물 판매 촉진사업의 실적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 사업은 다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 인프라 강화” 항목으로 세분된다. 농축산물 판매 촉진사업의 규모가 2009~12년에 연간 평균 408억 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은 이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철폐는 한국의 수출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iii) 공공비축제

자료결정문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농업위원회의 특별회의가 협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관한 협상은 도하 라운드의 농업협상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설상 DDA가 중단되더라도 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공공비축제를 주창하고 있는 인도의 처지에서 이번에 다시 확약된 평화조항의 지속은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도국그룹인 G33이 제안했듯이, 과연 공공비축제와 연계된 보조를 허용보조(Green Box)로서 간주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 허용보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특별긴급관세(SSM)

자료결정문은 개도국이 SSM의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확약했다. 그러나 문제

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SSM 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관점에 보면, SSM 의 필요성을 앞서서 밀고 있는 인도나 케냐의 경우 농산물의 양허관세가 100% 이상인 상황에서 과연 SSM 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SSM 을 발동하지 않고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이처럼 높은 양허수준까지 실행관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한국의 처지에서 SSM 은 농가 보호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SSM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도국 그룹인 G33과 공조를 통해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다른 개도국 그룹과 연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각료결정문을 통해 SSM 이 시장접근 분야와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위 문서가 홍콩 각료선언문 문단 7(시장접근 관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접근의 틀 안에서 SSM 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³⁵

(3) WTO 공공포럼(WTO Public Forum)³⁶

2001년부터 WTO 는 해마다 이른바 공공포럼(Public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2001년에 “공공 심포지엄(Public Symposium)”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연중행사가 2006년부터 지금의 공공포럼으로 바뀌어 이어지고 있다. 공공포럼의 전체 주제는 다양하나, 무역 체제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 개최된 공공포럼의 주제는 “무역이 작동한다(Trade Works)”이다. 특히, 올해는 WTO 가 창립된 지 20주년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주제와 활동 사항들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는 12월에 케냐 나이로비

35 Inside U. S. Trade 2015b; Agra Europe 2015c

36 임송수,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세계농업』 제175호, 국제 기구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Nairobi)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온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소규모 패키지라도 일단락 짓기 위한 사전준비와 공감대의 형성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공공포럼에는 총 88개의 세션이 마련되었는데, 각 세션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WTO 출범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15년 공공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무역과 관련된 여러 당면과제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WTO의 미래를 논의한 행사였다. 농업 의제들에 국한하여 본다면, 특히 많은 아프리카 농민단체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들(NGO)이 참여하여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국가와 지역 및 농가 수준의 식량안보, 식량에 대한 권리, 농촌의 빈곤,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농촌 여성의 권한 등 폭넓은 이슈들을 다룬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WTO 협상 또는 기존의 국제규범이라는 틀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는 점도 공공포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션의 또 다른 특징은 개도국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가 WTO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세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의 농업보조 철폐가 선행되어야 도하개발의제(DDA)가 진정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아제베도(Azevêdo) WTO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가 성공해야, 곧 무역이 작동해야(“Trade Works”) 개도국이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포럼의 분위기는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보다는 선진국의 농정개혁을 부르짖는 개도국 및 국제 NGO들의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회원국 정부나 WTO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랬겠지만, 이를 통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내 정책이나 WTO 협상 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가치사슬(GVC)에 개도국의 농업부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능력이 형성 내지 향상되어야 하며,

세계 무역 체제에 개도국이 통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조화나 단순화가 필요하고, 선진국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을 허용하고 서로 소통해야 함도 제기되었다. 디지털 경제와 모바일 기술의 혁신이 개도국의 과제인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일 수 있음도 패널리 지적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되어온 개도국의 하부구조 구축, 제도의 개선, 부패 척결, 능력형성, 금융지원 등의 조치와 달라 신선하였고, 실제로 이런 분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하였다.³⁷

(4) 소결

MC10은 농산물 수출경쟁에 관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꺼져가는 DDA의 불씨를 살렸다. 비록 이번 합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만 골라 합의한 결과("cherry picking")이었으나,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노력한 성과라 볼 수 있다.³⁸

그러나 MC10이 남긴 과제, 특히 회원국 간 이견이 명시된 상황은 앞으로 협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시한다. 농업협상 분야에서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참여한 대립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특히 미국과 EU는 농업보조 수준을 과감히 감축하는 개혁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많은 개도국들과 국제 NGO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이다. 선진국의 과감한 개혁 수용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도국의 신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모두가 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의제의 단순화와 협상 목표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복잡한 감축 공식과 수많

3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임송수, 위 논문 및 다음 WTO 웹사이트를 참조(<https://goo.gl/3lBSnC>).

38 윤동진, "제10차 나이로비 WTO각료회의를 돌아보며",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 참조.

39 임송수, 위 논문 참조.

은 의제들 사이에서 회원국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찾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에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tiered formula)에서 평균 방식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는 것과, 정말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품목(예: 인도가 언급한 유제품과 사과)에 대해서만 SSM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것은 협상 가능영역(ZOPA)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DDA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복수협정(plurilateral agreement)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개혁안에 동의하는 복수의 회원국들로만 협정이 설정되어 이행되는 방식이다.

끝으로, 협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MC10에서도 주요국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료선언문과 결정문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른바 G5(미국, EU, 브라질, 인도, 중국)가 문서 초안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이들이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나, 전체 회원국들 앞에 던져진 초안을 한 두 시간에 안에 검토해 그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협상의 신뢰를 위협하는 것이다.

III. 식품규범 및 위생검역

WTO 협정문에 따르면 동식물 및 식품의 위생검역이나 규격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OIE(국제동물보건기구)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Codex 식품규격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1962년 FAO 와 WHO 의 합동식품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⁴⁰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간 (intergovernmental) 협의기구이다.



40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CODEX 규격은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나 1995년 WTO 체제 하의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되어 CODEX 규격 등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됨에 따라 CODEX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HACCP 방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극대화하는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식품안전 리스크관리 접근방식으로 미국,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Codex가 특별히 식품 분야를 위해 설계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만들었다. CODEX는 FAO, WHO에도 사무국을 내고 있으며, 일반과제분과위원회(10개), 식품별분과위원회(11개), 지역조정위원회(6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참조).

총회는 170개국과 1개 회원기구(EU)가 참석한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CODEX 규격활용연구)이다.⁴¹ 매년 총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2) 최근 쟁점 정리

2014년 제37차 총회의 쟁점이 2015년에도 이어졌다. 주요 의제로는 규정집의 개정, 8단계(5/8단계) 채택, 5단계 채택, 2014-2019 CODEX 전략계획, 재정 및 예산, CODEX 신탁기금, 관찰 및 평가 등의 내용이다.

먼저 규정집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⁴¹ <http://www.foodnara.go.kr/codex/index.do> 여기에는 Codex 관련 우리 정부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분 과	내 용
CCRVDF (잔류 동물용의약품)	추가 축종(Additional species)에 동물용의약품 MRLs의 외삽 • 규정집“CCRVDF 위해분석원칙”에 포함시킴 <hr/> CCRVDF에서의 concern form 사용 • 규정집“CCRVDF 위해분석원칙”에 포함시킴
CCGP (일반원칙)	위해성 분석 용어의 정의 수정 • 위해요소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및 위해성 산출(risk estimate)
CCPR (농약잔류)	CCPR의 위해분석원칙 수정
CCFFV (신선과채류)	CCFFV의 업무분장 수정

다음 2014-2019 CODEX 전략계획으로는 4가지가 논의되었다.

- (i) 식품문제를 다루는 국제식품 규격의 마련 : 우선순위에 근거한 현 규격 검토 및 신규 규격 마련, 신규 문제, 회원국의 요구를 사전 파악해 규격 개발, 관련 국제 규격 설정 기구와 협력 및 조화 등
- (ii) 규격 개발 시 위해분석원칙 적용의 보장 : 과학적 근거, 위해분석원칙 적용 보장, 지속적인 과학적 자문, 개도국의 과학적 자문도 더 많이 받는 것 등
- (iii)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 참여 촉진 : CODEX 내 개도국의 참여 증진, 국가 내 CODEX 조직 마련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
- (iv)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관리 시스템 및 규범의 시행 : 규격 설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역량 강화,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위한 노력 등

끝으로 CODEX 신탁기금이란 개도국의 CODEX 참여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03년부터 15개 회원국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금의 수명 종료에 따라, CODEX 사무국은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차기 신탁기금의 계승계획을 마련

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2015년 Codex 총회

2015년 7월 6일 ~ 11일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8차 CODEX 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먼저 8단계(5/8단계 포함)로 상정된 37개 안전 중 소성장축진호르몬(rBST)의 잔류 허용기준(안) 및 비정제 사탕수수주스 규격(안)을 제외한 35건을 최종 채택하였다.

농약잔류 분과(CCPR)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인삼, 건삼(홍삼 포함)에 대한 만코제브(디티오카바메이트, 살균제)의 MRLs 이 원안대로 각각 0.3, 1.5 mg/kg 으로 최종 채택하였고, 가공과채류 분과(CCPFV)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역규격 설정 때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인삼제품에 대한 지역규격이 세계규격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5단계로 제안된 5개 안전이 모두 채택되었다. 오염물질 분과(CCCF)에서 현미 중 무기비소 최대기준이 0.35 mg/kg(총 비소는 스크리닝 방법 사용)으로 채택되었는데, CCCF 는 차기 분과회의(제10차)에서 쌀 생산국 및 현미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추가 제출자료 검토 후, 0.35 mg/kg 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제안된 19개 신규작업이 모두 채택되었다. JECFA 에서 (재)평가될 동물용의약품의 우선순위, JMPR 의 평가를 위한 농약의 우선순위 목록 및 평가 일정 등 제안된 19개 신규작업이 모두 승인되었다.

넷째, 차기 아시아지역조정관 및 아시아지역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현 임시 지역조정관인 태국과 아시아지역 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중국의 뒤를 이을 회원국으로서 각 인도와 말레이시아를 선출하였다.

다섯째, 제1기 CODEX 신탁기금의 평가 및 차기 계승계획과 관련하여, WHO 와 FAO 는 개도국의 CODEX 참여를 지원해온 현 기금이 '1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현 기금의 사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신탁기금의 계승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CODEX 에 대한 지속가능한 과학적 지원 제공 방안과 관련하여, 총회는

FAO/WHO 전문가 위원회가 제공하는 과학적 자문을 위한 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현재 CODEX 에 기금을 대는 방식과 같이 정기예산 기금을 통하여 FAO, WHO 에서 전체 과학적 자문 프로그램에 기금을 대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4) 시사점

Codex 는 식품 관련 모든 의제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의제가 방대하고 포괄적이므로 담당자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의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처가 미흡할 경우 통상마찰, 국내산업 침체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도 공유하여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시키는 과정이 절실하다.

2015년 총회와 관련한 시사점으로는,⁴² 먼저 일부 사안에 대해 지역별(유럽, 남미 등)로 공동 대응하는 양상이 두드러져, CODEX 본 회의 전 또는 회의기간 중 지역별로 사전 협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총회뿐만 아니라 분과 회의에서도 아시아지역 사전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 우리 측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아시아 지역 내 이해도를 높여 지역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의 기준이 JECFA 및 JMPR 의 평가 목록에 포함되어 신규작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최종 채택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미 중 무기비소 최대기준(원안)이 5단계로 승인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분과에서의 논의 및 관련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 CODEX 내 규격 설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내부적으로도 과학적 자료 마련 등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2015년 제38회 총회 결과보고서(<http://foodnara.go.kr/codex/index.do?nMenuCode=31>)

2. 식물검역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1) 개요

1951년 UN 산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을 제정하였으며, 1952년 실행기구로서 FAO/IPPC가 설립되어,⁴³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이 협약에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8일에 가입하였으며, IPPC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1961년 12월 30일 식물방역법을 제정하여 식물방역조직을 두었고, 1977년 12월에는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감시 역할을 하는 WTO/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WTO 협정,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발효되었는데, 검역을 농산물 무역의 불공정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협정은 전세계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식물검역 체계도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수입식물에서 발견되는 병해충 중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은 모두 방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것이 보호무역의 구실이 된다고 하여 비록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라도 국가별로 병해충의 위험분석(PRA)을 실시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방제대상병해충과 방제대상이 아닌 병해충으로 구별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오늘날 이에 관한 국제규범을 만

43 2016년 현재 회원국은 182개국이다. <https://www.ippc.int/en/>

드는 국제기구가 IPPC 인 것이다.

IPCC 는 매년 총회 성격의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IPPC 협정 이행, 식물 검역국제기준의 채택, 사무국과 산하 보조기구의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을 한다. 의장단은 회원국을 대표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 등을 하는 각 FAO 지역별 대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기준 제정·개정 작업을 총괄하는 보조기구로서 각 FAO 지역별 대표 25인으로 구성되는 기준위원회,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위하여 기준위원회에서 선정한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각종 전문가작업단, IPPC 회원국들 간 식물검역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보조기구로서 각 FAO 지역별 대표 7인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보조기구가 있다.⁴⁴

(2) 2015~6년 IPPC 동향

2016년 4월 8일 로마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총회에서 ‘2017년 제12차 총회 개최’ 국가로 우리나라가 최종 확정되었다. 2017년도 IPPC 총회 한국 개최 결정은 FAO 본부(로마)가 아닌 회원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초의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식물검역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IPPC 기여금 공여 확대,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아시아지역 식물검역국제기준 워크숍, 개도국 능력개발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해왔다.

식물검역 국제기준 검토를 위한 지역별 국제워크숍은 IPPC 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개도국 참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 10월 19일부터 23 일에는 제주에서 아태지역 18개국이 모여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 식물검역 국제기준 검토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6년부터 개최

44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우리나라가 의장 및 재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PPC 의장은 농림축산 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임기: '14.4월~'16.3월)이다.

하고 있는 이 워크숍은 올해로 국내 개최 10회 째를 맞이하는 국제농림 협력사업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지역 개도국 전문가들과 FAO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신규로 제정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아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식물검역의 일부를 수출국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인증 절차에 대한 기준과 수출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 방법 및 요건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의견을 모았고, 아시아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병해충 예찰 및 식물위생 전자증명에 관한 개도국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2015년~2016년 채택될 식물검역 국제기준안을 논의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동물검역 - 국제동물보건기구(OIE)

(1) 개요

OIE⁴⁵는 오늘날 국제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라고 하지만, 설립할 당시 사용하였던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라는 프랑스어에서 비롯한 것이다. 2003년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 개칭한 바 있으나 역사성을 감안 영문 약칭은 OIE로 사용하고 있다. OIE는 전 세계적인 가축 위생의 향상과 동물 복지(anim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1924년 28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토대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되었다.⁴⁶ 1995년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국제적 동물 및 축산물 교역 표준 규범인 '동물위생규약'과 '가축전염병 진단 및 백신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수의조직의 법적 구조 및 자원 향상을

45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홈페이지(<http://www.oie.int/>)

46 1920년 인도에서 브라질로 수출된 소가 벨기에에서 환적하는 도중 예기치 않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牛疫(Rinderpest)이 발생하여 유럽 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1924년 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28개 국가가 모여 OIE를 창설하고 프랑스가 의장국이 되었다고 한다.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전 세계적인 동물보건(animal health)의 증진을 위해 전 세계 180개의 회원국(2016년 5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는 동물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조직으로는 대표단 의회, 매년 5월 열리는 총회,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 5개의 지역위원회(아프리카, 미주, 유럽, 아태극동, 중동), 4개의 특별위원회(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동물 질병 과학위원회, 수생동물 위생규약위원회, 생물학적 기준위원회-실험실 위원회)가 있다.⁴⁷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하였고 북한은 2001년 가입하였다.

(2) 2015년 동향

2015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84차 OIE 총회가 개최되어 180개 회원국이 동물보건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번 OIE 총회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동물 질병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동물보건과 복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함께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광견병, 우역 등 동물 질병의 예방, 근절을 위한 전략 회의가 이루어졌다. OIE는 2016년~2020년 이행할 6가지 주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2016년은 OIE에게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OIE 총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OIE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로 인증 받았다. 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9년 브루셀라 표준실험실을 필두로 뉴캐슬병('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광견병('12), 일본뇌염('13)에 이어 총 6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OIE 국제표준실험실은 연구실적과 기술역량이 국제수준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인데, OIE를 대표하여 해당질병 분야에서 기술자문, 교육·훈련제공 등 다양하고

⁴⁷ 대표단 의회에 한국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이 참여한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김용주 박사가 2012~2015년까지 과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구제역 OIE 표준실험실 인증을 계기로 회원국의 구제역 검사의뢰 시료에 대한 확진검사 수행이 가능해지며, 주변 상재국의 바이러스 유전정보 분석을 통한 변이동향 추적 및 신종 바이러스 국내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이 구축되어 구제역 방역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⁴⁸

(3) 시사점

축산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의 국제적 관리이다. 육류 단백질 수요증가로 가축 사육 증가와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이 더욱 악화되고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발생 우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가축사육, 식품, 환경, 국제이동 등 항생제 사용 및 내성과 관련된 분야를 종합하여 대응하자는 One Health 접근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⁴⁹ 항생제 사용에 대한 통계(특히, 개도국) 및 분석, 새로운 항생제 개발, 집행 등에서 미흡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2016년 OECD 농업장관회의, 2017년 OECD 보건장관회의에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ne Health 접근에 동의하여 WHO, FAO 등과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OIE 총회(5월)에서 회원국들이 WHO의 글로벌 이행 계획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냈다. OIE는 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글로벌 통계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회원국 중 성장

48 농식품부 공식블로그(새농이) <http://m.blog.daum.net/mifaff/13438824>

49 항생제는 한때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인류를 세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항생제 도입과 동시에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균이 출현함에 따라 사람에게 대한 치료제 부재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1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항생제 내성으로 정하여 내성균과의 싸움을 선포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2012년 수의사의 날 주제를 항생제 내성으로 정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에 있어 수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은 사람 및 수의 분야 모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국가는 51%로 조사되었다. 개도국들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큰 도전과제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수준의 사용량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국가별로 축종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IV. 농업과 미래

1. 농업과 유전자원

FAO는 2016년 1월 제2차 세계 식량농업 동물유전자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동물유전자원 다양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⁵⁰

가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계, 식량안보, 농촌개발, 문화생활 및 환경관리에 기여하며, 작물이 재배될 수 없는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생산 환경에서 길러질 수 있다. 다양한 역할과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종과 품종은 물론, 동일한 품종 내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한데, 다양성은 충격에 대한 가축생산시스템의 복원력 강화에 기여하며, 가축 개체군이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FAO가 2016년 1월 발표한 제2차 세계 식량농업 동물유전자원 현황 보고서(The Second Report on the State of World's Animal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는 가축 생명다양성과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며, 가축다양성 현황, 축산업 동향, 동물유전자원 관리 역량, 최첨단 동물유전자원관리법, 동물유전자원관리 관련 향후 도전과제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129개 국가보고서, 15개 국제기구 보고서, 지역별 담당관 및 연락망이 제출한 4개 보고서 등의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2007년 제1차 세계 식량농업 동물유전자원 현황 보고서 이후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메시지로 제시하였다.

1. 가축다양성은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생산시스템의 적응을 촉진하며 기후 변

⁵⁰ FAO, 'The Second Report on the State of World's Animal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16. 1.

- 동성에 대한 복원력의 원천이다.
2. 동물유전자원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는 특히 빈곤인구 생계에 여전히 중요하다.
 3. 특정 환경 문제에 대한 특정 종과 품종의 적응에 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가축다양성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5. 동물유전자원 위협요소 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동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7. 개도국에서는 효율적인 가축 육종 프로그램을 수립·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8. 동물유전자원 보존 프로그램은 확산되었으나, 보존 범위는 여전히 산발적(patchy)이다.
 9. 동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신기술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10. 다양한 가축부문 트렌드가 동물유전자원과 동물유전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11. 가축다양성과 지속가능한 AnGR 관리는 정책의제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였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AnGR 을 포함한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다수 주요 이니셔티브와 협정들(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 계획 2011-2020, 아이치목표, post-2015 개발의제 초안 등)에서 강조되었다.

2. 농업과 환경 -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1) 개요

농업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영농형태나 규모에 따라 환경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 자체 생태계에 기여하기도 한다. 물, 토지, 병해충, 생물다양성은 대표적인 이슈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정보화로 인해 각국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라는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

(2) 제38차 OECD 농업과 환경 공동작업반(JWP AE) 회의 결과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은 농업과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러 설치된 기구다.⁵¹

2015년 11월 9일~10일에 제40차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2015-16년에 진행하는 농업과 관련된 녹색성장, 물관리 방안, 생태계서비스 등 과제의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분석결과가 논의되었다. OECD가 2016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물관리 권고 초안에 대해서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2013-14 작업과제인 ‘다양한 농장관리방식의 자원효율성과 생산성 영향’ 보고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회원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환경분야와 관련한 OECD 내 작업동향, 국제기구(UNEP, FAO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51 현재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장은 우리나라의 김창길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다. 지난 2000년부터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2007~2013년 부의장, 2014~2015년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주도했다. 2016년 열린 제41차 작업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연임이 결정됐다.

성장을 위한 농업인 교육·컨설팅, 통합병해충 관리(IPM), 농업용수관리, 기후스마트 농업, 농업분야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째, 회원국의 정책 및 사례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농업관련 생물다양성 점검·평가 프로그램인 ALL-EMA 를 소개하였다. 층화(stratified)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농업과 관련한 서식지의 상황과 종(species)의 풍부함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유럽의 농업환경점검지표(agro-environmental monitoring indicator)이다. 칠레는 1975년 정책목표를 수출농업으로 전환한 후 새로운 기업가들이 출현하여 성장했고, 이원성(dualism, 가족농이 80%를 차지하나 대기업이 생산량의 78%를 생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 등 칠레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발전 상황을 설명하였다. 호주는 최근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 부처명칭이 변경(Agriculture →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되었고, 온실가스배출 축소노력(Carbon Credits, Emission Reduction Fund, 토양탄소격리)을 소개하였다. 네덜란드는 환경, 동물복지, 공공보건의 강화 요구로 인한 경제적 이슈를 닭고기 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아일랜드는 물관리, 경관, 기후변화 완화, 생물(종)다양성 등을 포함하여 3단계로 나누어 운용하는 신 농업환경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둘째, 녹색성장과 관련하여서는 (i) 다양한 농장관리방식이 자원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것은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5가지 농업방식(보전농업, 유기농업, 종합방제관리, 생명공학, 정밀농업)의 경제적(생산성, 비용, 일자리 등)·환경적(온실가스 배출 등) 영향 등을 평가한 보고서로서, 회원국에서는 대체로 동 보고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를 지지(일부 사실관계 수정 요청)하였으며,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ii)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측정과 관련하여 농업총요소생산성(TFP)과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EATAP)의 측정을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하고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12월 14~15일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iii) 농식품체인의 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관련하여, 농업생산 및 관련 전

후방산업을 포함하여 각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을 측정하고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원국들은 민간 포함 범위의 명확화(민간기업 중심, 전체 식품분야 등), 에너지 효율성 개념의 불명확(비용축소 또는 에너지 자원 이용 축소 등) 개선, 연구 제목을 연구 내용에 맞추어 에너지 분야에 초점, 주요 품목별 또는 섹터별 사례 연구,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와 효율성간 관계 측정, 식품낭비의 포함 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셋째, 물과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농업 분야의 물 이용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위협성을 가진 지역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하였는데, 현재까지 분석 모델을 마련 후 예측한 결과 미국, 중국, 인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들이 이사회가 마련한 물 권고안의 내용 중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생산성, 기후변화 적응·완화간의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먼저 논의하였다. 기존의 정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완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잘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는지를 분석(상충관계와 시너지효과 분석)하는 작업으로 정책입안과정부터 실제 집행단계까지 사례분석(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추진하면서, 회원국은 농업 분야의 긍정적 측면 제시, EU 공동농업정책과의 관련성 및 분석 정책범위의 확대(산림 등), 농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화(상황, 위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 생산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간의 시너지와 상충관계에서는 미국의 콘벨트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생산비연계 소득보조, 투입재 세금 및 보조, 투자보조, 바이오작물 보조, 탄소거래시장(carbon offset market) 정책들이 총 생산, 농가이윤, 온실가스배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위험중립적인 농가와 위험회피적인 농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작업 보완을 위해서 회원국의 추가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계량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적과 함께, 분석범위의 확대(축산분야 및 다양한 작물 포함, 시나리오 확장 등), 생산성과 생산량의 혼용 부분 개선, 정책패키지

형식 검토(현재는 개별정책 중심), 위험중립과 회피의 판단 기준, 장단기 영향을 고려한 우수정책 사례 확보 방법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환경위원회 Circle 프로젝트 진행 상황 설명이 이어졌는데, 동 프로젝트는 토지, 물, 에너지간의 결합관계(nexus)를 조명하여 부족한 자원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2060년까지 지하수 이용, 토지 공급 및 수력 전기에서의 병목현상의 경제적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 지하수의 이용을 제한하면, 식품가격이 증가(인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식품안보에 문제가 발생하기에, 회원국들은 해수담수화(네덜란드)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 보완, 지역(local)단위에서 병목현상 분석(migration 현상 포함), IPCC(국제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리포트 반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무국에서는 2015년 6월 한국(제주도)에서 개최한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을 위한 정책일관성 워크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들이 의도하는 영향과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갖고 있으며, 정책의 평가를 위한 지표와 측정도구가 농가수준의 생산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목적의 명료성이 결여된 경우에 적절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이 제한되었다. 이에 한국대표단이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총회의 부대행사로 OECD와 한국이 공동 개최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세미나 결과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에서 농지이용과 생태계(ecosystem) 서비스라는 프로젝트가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유전적 다양성, 수분작용, 농촌경관 등) 제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 수단을 분석하고 정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정책분석들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등 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회원국들은 생태계서비스 범위의 확대(레저, 식품제공 등), 생태계서비스 사례 및 관련 연구 추가(프랑스, 스위스 등), 보고서 1장과 2장의 연결성 강화 및 의사결정나무 보완,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명확화(다원적 기능, 농업환경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을 제기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개발(development)에 대하여는 생물다양성이 빈곤감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개발이 국가, 지역, 분야(농업) 단위에서 주류화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회원국에서 정책일관성 측면과의 관련성, 브라질 소농지원 사례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농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농업환경분야의 작업이 환경이나 농업환경정책에 집중되고 단편적이어서 전체적인 농업정책(특히, 대규모 정책지원 분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책의 영향을 토양보호 및 토양의 질, 물 보전(수질포함), 생물다양성, 풍광,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이용 등으로 분류하여 인과관계 경로를 확인하였다. 회원국에서는 동 작업이 쉽지 않으나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회원국의 참여 확대(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위스 등), 선형(linear)분석의 보완(질적 분석 추가, 인과관계의 명확성 제시 등), 최종 결과(목표)에 대한 설명, 농업위 산하 타 작업반의 과제(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등)와의 관련성 검토 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로 제시한 농업환경지표(AEI) 보완과 관련하여 진도보고 및 일정이 있었다.

이밖에 ‘무인비행기 : 빅데이터와 농업’ 사례 소개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농업생산과정의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등에 무인비행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과 장점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앞으로 농업이 무인비행기 비즈니스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무인비행기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낮은 영향(토양, 소음), 다양한 활용, 유연성, 작동의 편리함 등 장점이 많아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데이터와 여타 데이터가 모이고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되면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시장이 빠르게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법이 물 사용, 비료 사용, 탄소 보전, 온실가스 배출,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나 새로운 독점, 가족농의 미래, 사생활 이슈, 데이터 소유권, 사이버보안 등의 도전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회원국들은 농업인들의 수용성의 정도, OECD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데이터의 소유권 이슈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영국은 농업분야 빅

데이터에 대해서 농업정보학(Agro Informatics)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3) 시사점

현재, OECD 농업환경작업반에서 논의(2015-16)하고 있는 내용들이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전체적(영향분석 및 지표개발)으로 보면서 농업의 다양한 분야(생산성,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에너지효율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 분석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정책 등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준비중인 제4차 친환경농업대책(2016-20)에 기존의 농약·비료 등의 저투입 중심의 정책에서 OECD 논의를 반영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환경지표에 포함되는 양분수지, 온실가스, 에너지, 토양관련 지표는 국내 농업환경자원관리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농업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분석은 관련 정책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농장관리방식의 자원효율성과 생산성 영향’ 보고서에서 제시한 5가지 농장관리방식(보전농업, 유기농업, 통합농약관리, 생명공학, 정밀농업)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 등의 분석결과를 국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강조하는 스마트팜은 정밀농업에 해당되며, 네덜란드 등에서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밀농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52 OECD 한국대표부 보고서(송남근 농무관 집필부분) 인용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 논의 동향을 국제기구의 발간자료, 홈페이지와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기구별로는 UN/FAO, OECD, WTO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쟁점별로는 ‘세계 토양의 해’ 및 Post 2015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새로운 농촌정책, 식량안보, 국제거래/통상이슈, 국제적 재난 대응(동식물질병), 기후변화와 농업, 농업과 미래,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농촌으로,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까지 포괄하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역이 농업생산성, 식량안보에서부터 최근에는 농촌개발, 위생검역 등의 논의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식량, 농업 분야에서 UN 차원에서 2015년은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 2015**)이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화두이다. UN/FAO 의 경우 이러한 UN 의 식량, 농업부문의 방향성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통상 관련하여서는 1995년 설립된 **WTO** 가 가장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OECD 와 많은 부분을 논의하는데 자유 시장(Free Market)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OECD 와 WTO 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2013년 발리 WTO 각료회의 합의안의 이행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MC10)”가 열렸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하여서는 **OECD** 가 두드러지는데, 다양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국의 농업정책과 보조금, 수출경쟁에 대한 지표 조사하여 WTO 나 FAO 등에 논의자료로 제공하였다. OECD 는 2015년의 경우 농업농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는데, 먼저 기존 농업정책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한 뒤, 2006년에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하여 (i) 농업에서 농촌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가치화하는 것, (ii) 1차 산업인 농업부문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관광,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의 2차, 3차 산업까지 포괄하는 것,⁵³ (iii)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부문의 정책에 대한 유기적,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촌 정책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화, 지역자원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웰빙을 위한 통합적 정책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동향의 소개는 국제규범 속에서 우리나라 입법이 조화를 이루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법과 발전(Law and Development)이라는 법철학적 기초에 입각하여,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식량안보,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FAO, IFAD, WFP 등 국제기구, WTO, OECD 등 정부 간 기구의 연구 자료나 세계 여러 나라의 최신 법제를 검토 분석하며, 선진국, 개도국 및 민간원조단체 등과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협력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과 아울러 컨설팅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정성과를 확산시켜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역량강화 및 식량안보를 위한 컨설팅사업 추진이 될 것이다. 물론, 국제적 재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과제에 대한 농업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Global Legal 체계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통해 향후 국제규범과 조화된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법제로 입법 개선을 도모할

53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슈가 되어 입법까지 한 농산업의 6차산업화와 맥이 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향유, 아름다운 농어촌이 어우러진 국토 공간의 차원 높은 디자인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송주호, “WTO/DDA 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제211호, 2015.
- 엄진영, “OECD 농촌개발정책”, 세계농업 제1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
- 원지은,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4.
- 윤동진, “ 제10차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를 돌아보며”,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
- 이효정,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세계농업 제17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6.
- 임송수,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세계농업 제18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1.
- 임송수, “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세계농업 제1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
- 최민정,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 농업·농촌부문 의제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기구 동향 2, 2015. 10.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KOICA,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2015.

OECD 대표부 홈페이지

(<http://oecd.mofat.go.kr/>)

OECD, The new rural paradigm, OECD Publishing, Paris, 2006.

<http://www.oecd.org/gov/regional-policy/thenewruralparadigmpoliciesandgovernance.htm>

OECD, New Rural Policy: Linking up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2015.

<https://www.oecd.org/rural/rural-development-conference/documents/New-Rural-Policy.pdf>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5-2024 : The twenty-first OECD edition of the Agricultural Outlook, and the eleventh prepared jointly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provides projections to 2024 for major agricultural commodities, biofuels and fish.

OECD 10th Rural Development Conference

(<http://www.oecd.org/rural/rural-development-conference/presentations>)

OECD Regional Well Being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OECD Rural Development

(<http://www.oecd.org/governance/regional-policy/oecdworkonruraldevelopment.htm>)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United Nation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201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United Nations,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December 2014.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2015.

United Nations, World Soil Day and International Year of Soils, 2015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8/232)

WTO,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2015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mindecision_e.htm

< 부록 1 > UN 총회 결의문(세계 토양의 날 및 세계 토양의 해)

United Nations

A/RES/68/232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7 February 2014Sixty-eighth session
Agenda item 25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December 2013

[on the report of the Second Committee (A/68/444)]

68/232. World Soil Day and International Year of Soils*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53/199 of 15 December 1998 and 61/185 of 20 December 2006 on the proclamation of international years, and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0/67 of 25 July 1980 on international years and anniversaries, particularly paragraphs 1 to 10 of its annex on the agreed criteria for their proclamation, as well as paragraphs 13 and 14, stating that an international day or year should not be proclaimed before the basic arrangements for its organization and financing have been made,

Noting that soils constitute the found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essential ecosystem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hence are key to sustaining life on Earth,

Recognizing that the sustainability of soils is key to addressing the pressures of a growing population and that recognition, advocacy and support for promot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soils can contribute to healthy soils and thus to a food-secure world and to stable and sustainably used ecosystems,

Recalling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Agenda 21,² the 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³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⁵ and

¹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L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I.

² *Ibid.*, annex II.

³ Resolution S-19/2, annex.

⁴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⁵ *Ibid.*, resolution 2, annex.

13-45337



Please recycle



the commitments made therein and the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titled “The future we want”,⁶

Recognizing the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of good land management, including soil, particularly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biodivers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eradicating poverty, women’s empowerment,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improving water availability, and stressing that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are challenges of a global dimension and that they continue to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Recognizing also the urgent need, at all levels, to raise awarenes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of the limited soil resources, using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and building on al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ting that World Soil Day and the International Year of Soils can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⁷

Recognizing that, for these reasons, an international year and world day on the same issue on soil could exceptionally be proclaimed at the same time without constituting a precedent,

Recalling resolutions 4/2013 and 5/2013 adopted on 22 June 2013 by the Conference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thirty-eighth session,⁸

1. *Decides* to designate 5 December as World Soil Day and to declare 2015 the International Year of Soils;

2. *Invites* all Member States,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observe the Day and the Year, as appropriate;

3. *Invites* Governments,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for the observance of the Day and the Year;

4. *Invite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ndful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nnex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0/67,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Soil Partnership,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Day and the Year,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s,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⁷ and other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and the general public, and also invite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o keep the General Assembly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including on the evaluation of the Day and the Year;

⁶ Resolution 66/288, annex.

⁷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954, No. 33480.

⁸ Se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ocument C 2013/REP.

5. *Stresses* that the cost of all activities that may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should be met from voluntary contribution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and provision of voluntary contributions;

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bring the present resolution to the attention of all Member States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carry out activities to commemorate World Soil Day and the International Year of Soils.

*71st plenary meeting
20 December 2013*

< 부록 2 >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선언문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mindecision_e.htm)

T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NAIROBI, 2015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9 December 2015 : WT/MIN(15)/DEC

PART I

Preamble

1. We, the Ministers, have met in Nairobi, Kenya, from 15 to 18 December 2015 at our Tenth Session. As we conclude our Sessio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Kenya for the exceptional organization and the warm hospitality we have received in Nairobi.
2. We note that our Tenth Session takes place as we mark the twentieth anniversa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On this occasion, we underline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 and reaffirm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set out in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3. We reaffirm the pre-eminence of the WTO as the global forum for trade rules setting and governance.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that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made to the strength and st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We reaffirm the value of our consistent practice of taking decisions through a transparent, inclusive, consensus-based, Member-driven process.
4. We note with concern the slow and uneven recovery from the sever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of 2008, resulting in lower global economic growth, depressed agricultural and other commodity prices, raising inequalities, unemployment and significantly slower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recent years. We acknowledge that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role towards achieving sustainable, robust and balanced growth for all.

5. We pledge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o that it provides a strong impetus to inclusive prosperity and welfare for all Members and responds to the specific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6. We acknowledge that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We recognize the need for all our peoples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opportunities and welfare gains tha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rates. The majority of WTO Members are developing country Members. We seek to place their needs and interests at the centre of the work in the WTO.
7. We reaffirm the centrality of development in the WTO's work and commit to continuing to make positive efforts designed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especially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ecure a share in the growth of world trade commensurate with the nee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8. We recognize the role the WTO can play in contributing towards achievement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o far as they relate to the WTO mandate, and bearing in mind the authority of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ed coherence in global economic policy-making. We underscore the Marrakesh coherence mandate, and encourage initiatives for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ursuit of our common objectives, while respecting the competence of each organization.

WTO's twentieth anniversary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10. On the occasion of the WTO's twentieth anniversary, we acknowledge important achievements under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described in Article III of the Marrakesh Agreement.
11.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work in regular bodies in furthering the objectives of the WTO Agreements and in facilitating meaningfu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haring of experience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ir provisions. We note that the WTO's trade monitoring work, including trade policy reviews, has contributed

consistently to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achieving greater transparency in, and understanding of, the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Members.

12. We reiterate that the WTO shall remain the main forum to negotiate multilateral trade rules. We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At our Fourth Session, we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GATT and the WTO, a Development Round; the Doha Work Programme. We recall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We draw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FA) as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We commend those Members that have already accepted the respective Protocols and look forward to additional acceptances. We welcome the Decisions and the Declaration listed in Parts I and II of the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subsequen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November 2014 on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We note, however, that much less progress has been made in Agriculture and other central components of the WTO's negotiating agenda, namely NAMA, Services, Rules and Development.
13. We note that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continues to offer a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Members that is uniqu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system has dealt with a large and growing number of disputes, demonstrating Members' continuing confidence in it. We recognize that the increasing number and growing complexity of disputes present challenges to the system. We therefore commit to pursue and renew efforts to address current challenges and to further strengthen the system, including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ul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14. We recall the commitments made by Ministers at all of our previous sessions, as well a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Fourth UN Conferenc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in Istanbul, to assist LDCs secure beneficial and meaning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e recognize that LDCs remain vulnerable and continue to face structural difficulties in the global economy. We underscore the continued importance of initiatives aimed at fully and meaningfully integrating LDC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a more effective manner.
15. 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 in

mainstreaming trade in development policies of LDCs and building their trade capacity. This significant role in helping LDCs achieve their development objectives is duly recognized by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determined to further intensify our efforts to secure the necessary level of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program with the view to enabling the delivery of predictable trade-related support to LDCs, based on the programme needs as set out in the EIF Phase Two Programme Framework.

16.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Aid for Trade initiative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build supply-side capacity and trade-related infrastructure and we shall accord priority to the LDCs' needs. We take note of the outcomes of the WTO global reviews on Aid for Trade, in particular the Fifth Global Review, and recognize the continuing need for this initiative.
17. We note the substantial progress in WTO's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which focus on the needs and priorities of beneficiary Members. We recognize that dedicated facilities such as the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and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are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s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DCs to implement relevant WTO agreements. We als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argeted and sustainable financial, technical, and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programmes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particular LDCs, to implement their agreements, to adjust to the reform process, and to benefit from opportunities presented.
18. We celebrate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by ac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of the Marrakesh Agreement. We note that the accessions of the Republic of Yemen, the Republic of Seychelles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WTO have been completed since our last Session. In particular, we note with satisfaction that this Conference has completed the accession procedures for two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Republic of Liberi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We recognize the extensive commitments and the contribution of the Article XII Members resulting from their accession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will work jointly on the expeditious completion of current accessions. We remain committed to efforts to facilitate accession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acceding countries, including in the

post-accession phase.

19. As we recognize the centrality and primac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note that WTO Members have also successfully worked and reached agreements in plurilateral formats.
20. We take note of the reports from the General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We welcome the progress arising from these reports, and the Decisions stemming from them, i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as an organis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whole.

PART II

Regular work under the General Council

21. We welcome the following decisions we have adopted at this Session:
 -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 Ministerial Decision – WT/MIN(15)/40 – WT/L/975
 -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 Ministerial Decision – WT/MIN(15)/41 – WT/L/976
 -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 WT/MIN(15)/42 – WT/L/977
22. We further welcome the adoption by the TRIPS Council of the Decision on the Exten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under Article 66.1 of the TRIPS Agreement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for certain obligations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 products as well as the related Waiver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concern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bligations under Article 70.8 and 70.9 of the TRIPS Agreement.

Doha Development Agenda

- We welcome the progress in the DDA, which is embodied in the following Decisions and Declarations we have adopted at our Tenth Session:

Agriculture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 WT/MIN(15)/43 – WT/L/978
-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 WT/MIN(15)/44 – WT/L/979
- Export Competition –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 WT/MIN(15)/45 – WT/L/980

Cotton

- Cotton –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 WT/MIN(15)/46 – WT/L/981

LDC issues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Ministerial Decision – WT/MIN(15)/47 – WT/L/917/Add.1
-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Favour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Increasing LDC Participation in Services Trade – Ministerial Decision – WT/MIN(15)/48 – WT/L/982

PART III

24. We strongly commit to addressing the marginalization of LDC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improving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wards that end, we shall ensure that all issues of specific interest to LDCs shall be pursued on a priority basi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making them commercially meaningful and, when appropriate, legally binding.

25.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differential treatment in line with the

Marrakesh Decision in the context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in recognition of the challenges that these Members continue to face.

26.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ntinue to address in every area of WTO work, in a substantive and meaningful manner, the needs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SVEs) and to favourably consider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as would facilitate their fuller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SVEs in all areas of negotiations, without creating a sub-category of WTO Members.
27. We recognize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Members acce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o have undertaken extensive market access commitments at the time of accession. This situation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28. We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remain complementary to, not a substitute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this regard, we instruct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 to discuss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RTA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ir relationship with WTO rules. With a view to enhancing transparency in, and understanding of, RTAs and their effects, we agree to work 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provisional Transparency Mechanism into a permanent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ouncil Decision of 14 December 2006, without prejudice to questions related to notification requirements.
29. We agree to reinvigorate the regular work of the Committees and direct the General Council to consider the need for adjustments in the structure of their subsidiary bodies in light of their relevance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overed Agreements.
30. We recognize that many Members reaffirm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nd the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at the Ministerial Conferences held since then, and reaffirm their full commitment to conclude the DDA on that basis. Other Members do not reaffirm the Doha mandates, as they believe new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in multilateral negotiations. Members have different views on how to address the negotiations. We acknowledge the strong legal structure of this Organization.

31. Nevertheless, there remains a strong commitment of all Members to advance negotiations on the remaining Doha issues. This includes advancing work in all three pillars of agriculture, namely domestic support, market access and export competition, as well as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services, development, TRIPS and rules. Work on all the Ministerial Decisions adopted in Part II of this Declaration will remain an important element of our future agenda.
32. This work shall maintain development at its centre and we reaffirm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hall remain integral. Members shall also continue to give priority to the concerns and interest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Many Members want to carry out the work on the basis of the Doha structure, while some want to explore new architectures.
33. Mindful of this situation and given our common resolve to have this meeting in Nairobi, our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in Africa, play a pivotal role in efforts to preserve and further strengthen the negotiating function of the WTO, we therefore agree that officials should work to find ways to advance negotiations and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regularly to the General Council on these efforts.
34. While we concur that officials should prioritize work where results have not yet been achieved, some wish to identify and discuss other issues for negotiation; others do not. Any decision to launch negotiations multilaterally on such issues would need to be agreed by all Member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4

원자력법 분야

“에너지·원자력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부록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형 상 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변호사

형상철 변호사는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핵비확산과 핵안보분야이다.

04

원자력법 분야

에너지·원자력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형상철

Abstract

2015년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핵군축과 핵무기사용의 적법성, 중동비핵지대 건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아직 중국과 미국이 비준하지 못한 관계로 발효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201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각료급 회의’에서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경우 아직 조약문안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금지대상과 관련해서 과거 생산 핵물질포함여부, 금지대상 동위원소의 범위, 민수용핵물질과 핵추진선박용 연료 포함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검증기관, 검증대상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물리적 방호분야에서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개정 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5.8. 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 비준서 기탁시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했으며, 개정규정 중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도 발효된 날짜에 시행되었다.

I. 서론

원자력은 대량 살상무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핵비확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핵무기의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핵비확산 체제에서는 공식적으로 5개국을 핵무기보유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할 경우 이는 수평적 확산에 해당한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보유국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핵무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수직적 확산이라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FMCT(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차원이 아니라 테러단체에 의한 핵물질의 도난 또는 불법목적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한 물리적 방호 분야에는 **CPPNM(핵물질방호협약)**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각 조약들의 현황 및 논의사항들을 살펴보겠다.

II. 2015 NPT 평가회의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 개요

NPT 제8조 제3항은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 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1970년 NPT 발효이후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등 3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평가회의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2015년도에는 제9차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 핵군축-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논의

(1)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NPT 제6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에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 부정적인 여파는 최소화하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일본 피폭자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하늘에서 죽음에 떨어졌다’고 한 것은 자연 현상처럼 말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층 더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연 핵무기의 사용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가. 먼저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의 조문부터 검토해 보겠다.

NPT 제6조는 “조약 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 생물무기금지협약도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생물무기를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² 이에 반해 NPT 동 조에서는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핵무기 폐기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NPT 협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외무장관인 아이켄(F.Aiken)은 1958년 제13차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수를 현재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59년 제14차 유엔총회에서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방지’라는 새로운 안을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프랑스가 1960년 2월에, 중국이 1964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원자력발전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65년 유엔 18개국 군축위원회에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이 그 대안을 제시하자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핵비보유국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

1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제4조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레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시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 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

2 생물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제2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

자 핵보유국은 조약의 초안에 핵군축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한다는 동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³ 결국 핵무기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은 없으므로 핵무기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핵무기는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그 사용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199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는 결의를 통해 무력분쟁 시 핵무기의 사용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1995년 WHO 를 포함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질문에 관련된 국가, 단체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1996년 7월 8일 판결을 통해 동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UN 총회는 1994년 결의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국제법상 허락되는가’ 라는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했다. 그리고 재판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7년 7월에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은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일반적으로 위반하지만 국가의 존망 자체가 걸린 자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없다’ 라고 하고, 또 핵군축 교섭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완료시켜야 할 의무’ 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 (1) UN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기로 결정한다.
- (2) A: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주는 어떠한 관습 또는 조약상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 (2) B: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어떠한 관습 또는 조약상의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핵비확산 핸드북, 2010, 한국원자력연구원

- (2) C: U.N. 헌장 2조 4항을 위반하고 51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핵무기에 의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은 위법하다.
- (2) D: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약 또는 약속하의 의무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요건,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이나 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 E: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들, 특히 인도법의 원칙 및 규칙들에 일반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 상황과 재판소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관계되는 극단적인 지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할 수 없다.
- (2) F: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에 이르는 협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추구하고 협상의 결론에 도달할 의무가 있다.

(3)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등

2010년 NPT 평가회의 때 비동맹그룹국가들은 최종합의문에 핵군축을 위한 시한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핵보유국은 구체적인 시한이 없는 핵군축에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두 안을 절충하여 최종문서는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절차를 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NPT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고,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는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UN 총회에서의 논의 등

일본은 1994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강조하면서 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왔다. 2015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새롭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70주년을 기억하면서 지도자, 청소년 등의 원폭피해 지역 방문 및 피폭자 증언 청취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동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이 반대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 등 17개국은 기권하였으나, 여타 156개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대다수 국가들이 핵무기의 인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피해를 받은 국가 중심으로 20개국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한 것이다.⁴

(5) 소결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NPT 제6조에 기반을 두어 핵무기의 불법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NPT의 동 조항을 개정하여 생물무기나 화학무기처럼 폐지시한을 명기하지 않고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는 한 핵무기의 사용을 NPT 위반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중동비핵지대

(1) 비핵지대

비핵지대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관계국들이 핵무기의 제조, 개발, 취득, 배치, 저장 따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위협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4 신동익,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문제, 2016.4.25., IFANS FOCUS

지대이다. **NPT** 제7조에서는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 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1968년 남미지역에 설정된 **Tlateloco** 조약, 1986년 남태평양 지역에 설정된 **Rarotonga** 조약, 1997년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Bangkok** 조약), 1996년의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Pelindaba** 조약) 등이 발효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위 지역과 달리 중동의 경우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현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Neither Confirm Nor Deny**),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의 비핵지대 창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2) 제8차 평가회의

2010년 제8차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는 지난 1995년 제5차 평가회의 때 중동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2000년 평가회의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이집트 등 아랍국가에게 이를 양보하였다. 그리고 조약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비핵보유국으로서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비핵화와 **NPT** 가입을 중동 비핵지대 창설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왔고,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간의 전면적인 평화조약이 달성되지 않는 한 비핵지대 창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미국은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중동 비핵지대 형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평가회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여론과 더불어 중동국가들의 원전에 대한 관심증대와 이란의 핵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비핵지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일부 양보하여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그리

고 2012년까지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이라며 회의를 연기했으며,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3) 제9차 평가회의

제9차 평가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 중동비핵지대에 관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최종 문서 의장 안에는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NPT 제7조는 당사국들이 개별 지역의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NPT 회원국도 아니라는 점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II.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1. 개요

CTBT 이전에 3개의 핵실험 금지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1963년 8월 미국, 영국, 구 소련 등 3개국 간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은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였으나, 지하 핵실험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데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어 미국과 구 소련은 1974년 지하 핵실험의 규모를 150킬로톤 이하로 제한하는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체결하였으며, 1976년에는 핵무기 실험 장소 이외에서 행해지는 핵폭발 규모도 150킬로톤으로 제한하는 조약(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 NPT 평가회의에서 1996년까지 CTBT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9월 24일 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CTBT가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2. 발효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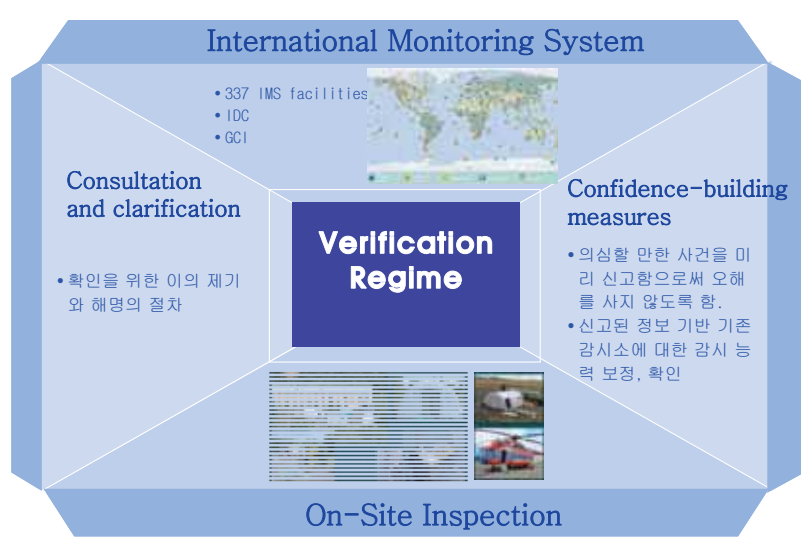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핵무기실험국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도 포함되는데,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현재 미비준국이다. 미국은 CTBT 첫 번째 서명국이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상원에 비준을 요청했을 때 부결됐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CTBT 비준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CTBT XIV 조에 따르면, 조약이 서명에 개방되고 3년이 경과하여도 발효되지 않을 경우, 비준국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촉진 방안을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비엔나에서 제1차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 2년 마다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가면서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 가면서 CTBT 발효를 촉진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각료급 회의’에서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3. 검증체계 구축

동 조약 제4조에서는 조약 발효 시 조약의 검증요구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검증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증 체제의 구축은 CTBT 발효를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축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CTBT 비준을 둘러싼 각국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조약의 발효여부 및 그 시점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CTBT의 주요 골격>



검증체제의 요소로는 지진파, 공중음파, 수중음파 및 방사능핵종 감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감시체제(**IMS,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협의를 통한 사안의 해명, 현장사찰(**OSI, On- Site Inspection**),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 중 협의를 통한 사안의 해명과 신뢰구축 조치는 별도의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제감시체제는 관측소와 **International Data Center(IDC)**, **Glob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GCI)**의 운용편람 작업을 마치고 이미 시험 및 잠정운용(**Testing and Provisional Operation**)단계에 있다. 하지만 현장사찰 분야는 그 민감성으로 인해 각국의 이견이 많은 탓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IV.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1. 개요

CTBT는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조약문이 채택되고 서명을 위해 개방된 것과 달리 FMCT의 경우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3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를 위한 다자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는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에서 생산금지(Cut-off)를 핵군축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승인했으며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군축회의(CD)내에 FMCT 특위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 개발계획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우주무기화 금지법 정의 문제’라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외기권 군비경쟁방지(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협상개시를 FMCT와 연계시켰고, 미국은 이에 대해 우주무기 개발 경쟁의 위험이 없으며 그 같은 조약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군축회의(CD) 작업계획이 채택되지 못해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00년 NPT 평가회의는 FMCT 협상의 조속한 개시 및 5년내 완료를 촉구하였고 미국은 2006년 군축회의(CD)에 검증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FMCT 초안을 제출하면서 즉각적인 협상개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비동맹그룹들은 반드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연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검증 가능한 FMCT 협상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그리고 2010년 제8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조약을 협상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며 군축회의가 조약의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CTBT

이후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다음 조치인 **FMCT** 협상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금까지 **FMCT** 에 관해 논의되어온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2. 금지대상 관련 쟁점사항

(1) 과거 생산 핵물질 포함여부

FMCT 가 발효된 후에 생산된 물질에만 적용될 것인지, 이전의 물질에도 적용될 것인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쟁점이다. 핵보유국들은 **FMCT** 발효시점 이후의 핵물질 생산분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비동맹 및 일부 서방국가들은 과거에 생산되어 비축된 핵물질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서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축(**Stockpile**)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핵군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일부 국가들은 상기와 같은 입장대립을 절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남아공은 **FMCT** 발효 시 핵무기 보유국들이 과도보유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여 이들을 검증체계 하에 둘 것을, 캐나다는 미래 **FMCT** 의 협상과는 별도로 핵보유국들 상호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체결을 포함, 재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 보유물질의 효과적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의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고농축우라늄은 희석(**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이 비축되어 있고,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 225톤이 군사용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몇몇 당사국들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기존의 분열성 물질을 사용한다면 **FMCT** 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이미 생산을 정지하였다. 결국 기 생산된 핵물질 재고분의 규제문제는 5대 핵보유국 보다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사실상

핵보유국 및 북한·이란 등 잠재적 핵무기 생산국가의 경우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인도는 **FMCT** 협상의 범위는 핵분열성물질의 ‘앞으로의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은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비대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존하는 핵분열물질의 감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FMCT 협상 위임장에 조약이 소급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보다는 어떤 방식(검증 포함)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동 문제에 대한 합의도달이 어려울 경우 동 문제 합의를 마지막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2) 금지대상 핵분열성물질의 범위

미국은 생산금지 대상 물질의 범위를 **Pu- 239(80%이상)**, **U- 235** 또는 **U- 233**을 20% 이상 함유한 우라늄으로 제안하며, 무기용으로 사용 및 전용이 가능한 핵물질 (**weapon- usable material**)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광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급(**weapon- grade**) 핵물질만을 금지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협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지대상 동위원소의 범위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핵분열 동위원소(플루토늄, **U- 235**, **U- 233**) 및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동위원소들(토륨, 넵투늄, 삼중수소 등)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들 물질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플루토늄

플루토늄은 **U- 238**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생산하며 중성자를 포획해서 **U- 239**를 생성한다. 그리고 **U- 239**는 **Np- 239**로 붕괴하고 이는 다시 붕괴해서 **Pu- 239**를 생

성한다. 원자로에서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므로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U- 238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루토늄은 대부분의 원자로 운영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성된다.

Pu- 239는 핵무기나 핵연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동위원소이다. 그러나 중독 포획 및 기타 부작용으로 동위원소의 혼합물이 생긴다. 주요 오염 동위원소는 Pu- 240이며, 일반적으로 동위원소의 성분비에 따라 아래의 등급으로 나뉜다.

< 표 1 동위원소의 성분비에 따른 등급 >

구분	동위원소(%)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Super- Grade	-	98.0	2.0	-	-
Weapon- Grade	0.12	93.8	5.8	0.35	0.022
Reactor- Grade	1.3	60.3	24.3	9.1	5.0
MOX- Grade	1.9	40.4	32.1	17.8	7.8
FBR Blanket	-	96.0	40.0	-	-

[출처: 핵무기 FAQ]

여기서 'Weapon- Grade'란 명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원래 미국에서 Pu- 240 함유량이 7% 이하가 되어야 실제로 폭탄의 제조에 성공할 수 있으며, 폭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하지만 기밀 해제된 정부문건(WASH- 1037, 핵무기의 소개)에 의하면 'Weapon- Grade'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정되었음이 명백해졌다.

Pu- 240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플루토늄 생산 비용은 낮아지지만 무기설계는 어려워진다. Pu- 240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자발적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발생확률이 높아져 핵무기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는 조기폭발(predetonation)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비용과 핵무기제조의 용이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Pu- 240의 함유량이 6~7%인 수준에서 'Weapon- Grade'가 지정되게 된 것이며, 미국은 저

연소도 특등급 플루토늄을 고연소도 원료와 혼합해서 무기등급의 물질을 만들어 왔다. 결국 'Weapon- Grade'란 명칭은 실제로는 무기로의 사용가능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본다면 모든 플루토늄의 동위원소가 임계질량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위원소 구성과 상관없이 플루토늄은 초임계질량으로 충분히 빠르게 합체된다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2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임계질량값 >

Pu- 238	9kg
Pu- 239	10kg
Pu- 240	40kg
Pu- 241	12kg
Pu- 242	90kg

[출처: 핵무기 FAQ]

■ 우라늄 - 235

HEU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U- 235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핵분열 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범위는 80~93.5% 까지며, 통상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HEU 가 핵무기로 사용되지만 그 이하의 순도로도 핵무기 제작이 가능하다.

천연우라늄을 20% 까지 농축하는 것에 비해, 농축도 20%이상의 우라늄을 더 높은 정도로 농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무기재고 HEU 의 절반 이상이 20~ 80%의 농축범위다. 이 물질들은 열핵무기 설계에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계질량에 미치는 농축효과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 표 3 우라늄 235 농축도에 따른 임계질량 및 반사재 >

농축(% U- 235)	무반사재	U238 반사재	베릴리움 반사재
93.5	48.0/44.5	18.4/17.2	14.1/13.5
90.0	53.8/48.4	20.8/18.7	15.5/14.0
80.0	68/54.4	26.5/21.2	19.3/15.4
70.0	86/60.2	33/23.1	24.1/16.9
60.0	120/72.0	45/27.0	32/19.2
50.0	170/85.0	65/33.0	45/23
40.0	250/100	100/40	70/28
30.0	440/132	190/57	130/39
20.0	800/160	370/74	245/49

[출처: 핵무기 FAQ]

※ 단위 : 전체kg/U- 235kg(밀도=18.9)

■ 우라늄 - 233

토륨- 232를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 235의 열중성자류에 접촉시키면 프로탁티늄 - 233을 거쳐 우라늄- 233이 얻어진다.

우라늄- 233은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부터 무기물질로 연구되어 왔는데, 효율이 높아 설계에는 매력적이었지만 제조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양의 우라늄 233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생산원자료가 필요하고 농축된 핵분열물질이나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플루토늄보다도 비쌌다.

우라늄- 233의 주된 동위원소 오염원은 우라늄- 232인데, 사용하는 토륨에 Th- 230의 함량이 낮도록 주의하고 알맞은 증식 블랭킷/원자로 설계를 이용하면 우라늄- 232가 5ppm 수준(0.0005%)인 무기등급의 우라늄- 233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우라늄- 235보다 훨씬 적은 임계량(16kg)을 가지며 플루토늄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 넵튠-237, 아메리슘-241

Np- 237과 Am- 241은 IAEA 가 특수핵무질(Special Nuclear Material)을 지정할 당시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 자체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양이 의미 있는 양(significant quantity)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측면에서 그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Np 과 Am 을 분리하는 기술을 몇몇 국가에서 개발하여 왔다. 또한 이들의 상업적인 용도도 증가하여 분리와 회수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77년 SAGCI 는 Np 과 Am 을 플루토늄 및 우라늄과 더불어 “threshold amount(the approximate quantity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for a single nuclear explosive device<하나의 핵 폭발 장치에 대한 특수 핵분열성 물질의 대략적인 양>)” 로 간주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권고한 바도 있다.

이들의 임계질량은 약50kg(반사재가 있을 경우 약 20kg) 정도로 U- 235와 비슷하다. Am 은 반감기가 430년 정도이며, 열 방출량은 114Watts/kg 이다. 이는 U- 235 와 Pu- 239보다는 크지만, 열방출로 인하여 핵폭발장치에의 사용이 부적합해서 안전 조치 대상물질에서 제외된 Pu- 238의 1/5 수준이다. Np 의 반감기는 2백만 년 정도이며 열방출량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물질에 의한 핵확산의 위험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낮으나, IAEA 는 미래에 대비하여 회원국이 이들 물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 기타 핵물질

토륨은 연쇄반응을 통하여 우라늄- 233을 증식하므로 핵무기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Th- 232는 고속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핵융합 2차 tamper 로 사용될 수 있다. 우라늄은 부족하지만 토륨은 풍부한 인도가 증식로를 사용해서 토륨/우라늄- 233 연료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중 수소는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 또한 플루토늄탄의 핵분열 폭발 규모를 증가시키는 역할(**boosting**)을 한다. 따라서 이것의 생산을 금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현대식 핵무기의 자연스러운 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이 3중 수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현재 3중수소 생산플랜트는 없지만 미국은 고에너지(약 **1Grev**) 양성자 가속기를 **Savannah River**에 설치해서 3중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3중수소는 핵분열 물질이 아니라 핵융합물질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명칭을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가 아니라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코발트 등 **Dirty Bomb**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의료기기, 차폐체 등 평화적인 용도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FMCT**에서 규제하여 생산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핵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 Illicit Trafficking Data Base**)나 안전조치협정(감손우라늄은 안전조치 대상임) 등에 의해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민수용 핵물질 포함여부

핵보유국들은 민수용(평화적 사용목적) 핵물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및 독일도 민간용도의 재처리 시설을 가동중이므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도가 제일 높은 것이 현재 하나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19.75%**이므로, **20%** 이상만 금지하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경우 금지대상 분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핵주기 연구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 이상 농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수용 핵물질은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FMCT의 취지가 핵분열성 물질 자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나 핵폭발용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수용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 안전조치 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핵추진 선박용 연료 포함 여부

핵보유국들은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HEU의 비폭발적 군사용도(non-explosive military use)가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FMCT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핵무기나 핵폭발용 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폭발적 군사용도로 HEU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제14조도 이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지되지 않는 군사적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도 평화적 핵활동에 재반입되는 경우 안전조치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이나 잠수함이 해체된 후 추진용 연료가 핵무기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와 달리 5개 핵보유국들만이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재고문제만큼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 검증체계관련 쟁점사항

기준에 미국은 사찰대상이 광범위하고 민감한 시설이 많으며 특히 핵잠수함의 동력원과 관련된 민감 시설 등이 사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하여 검증자체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검증을 수용하기로 한 이상 이제 이 문제는 어느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검증을 할 것인가가 중점이다.

(1) 검증 기관

다수 국가들이 별도의 검증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IAEA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은 IAEA의 검증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비용측면에서 **IAEA** 외에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든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의 예를 생각한다면 **IAEA**의 검증기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IAEA** 만큼 적절히 훈련받고 경험 있는 사찰관들을 갖추지 못한 별도의 기구의 능력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IAEA**가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IAEA**를 활용한다면 **NPT**처럼 **FMCT**에서도 가입국이 **IAEA**의 검증 조치를 수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인데, 이 경우 **IAEA** 기존 안전조치 임무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2) 검증 대상

FMCT는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만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① 신고시설의 전 용여부 및 미신고 시설에 의한 불법생산 여부검증을 위해 모든 시설 및 모든 핵물질(기존 재고 등은 제외)을 다루는 검증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comprehensive approach**)과, ② 검증 목적 및 비용/효과 문제 상 모든 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은 곤란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사찰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limited or focused approach**)이 대립하고 있다.

전용 및 은밀한 생산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는 모든 시설을 검증 대상으로 하여 경험을 쌓은 후 차츰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통합안전사찰(**IS, Integrated Safeguards**)의 선정확률을 도입한다면 검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 1) 비핵국의 경우 평화적 목적의 시설과 관련 핵물질은 이미 **IAEA**에서 전면 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에 의해 사찰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다.
- 2) 기존 안전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던 핵국의 민수용 시설은 **FMCT**의 검증 보다는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전면안전조치협정

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IAEA** 안전조치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 3)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생산 기관 등은 민수용과 달리 기밀보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FMCT**에 따른 검증 대상으로 하되 **IAEA**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찰관과 달리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5. 발효요건

핵무기보유국(5)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국 및 일본 등 대규모 재처리 시설 보유국들도 포함하는 안과 핵무기보유국(5)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 한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하도록 하고 후에 다른 나라도 비준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한다는 안이 대립하고 있다.

CTBT의 경우 44개 원자력능력 보유국 모두의 비준을 발효요건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조약의 발효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참조해 볼 때, 조약의 실효성 확보 못지 않게 조속한 발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효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핵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향후 전망

이상에서 보았듯이 **FMCT** 협상은 기존 비축분 포함여부, 핵물질의 범위, 검증체계 등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CTBT**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FMCT**는 이에 앞선 단계로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핵군축 및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V. 핵물질 방호협약

1. 개정협약 발효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개정 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5.8.** 일자로 발효되었다. CPPNM 이 발효된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운반 중 핵물질의 방호에 관심이 있었으나, 1990년 초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해당 국가들의 물리적 방호 체제가 와해되고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전반에 대한 방호로 관심분야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차례의 개정회의를 실시하였고, **2005년 7월 89개국**의 회원국들이 최종 개정회의에 참석하여 개정을 완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30일**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을 하였다. 하지만 개정협약은 **2/3**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약규정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비로소 발효되었다.

2. 개정 내용

협약의 명칭을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⁵에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⁶으로 변경했으며, 협약 적용 범위를 핵물질을 생산, 처리, 사용, 취급, 저장, 처분하는 건물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하는 원자력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2001년 IAEA 총회**에서 승인된 **12개 물리적 방호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을 협약에 수용하여 물리적 방호 규제를 강화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

5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6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험 발생 시 사전 통고에 관한 조항과 사보타주 범죄, 환경에 대한 손상, 정치범 불간주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 표 4 개정 내용⁷⁾ >

	기존 협약	개정 협약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제1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동위원소²³⁵ 또는 ²³³의 농축 우라늄, 국제 핵운송 관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항목에 원자력시설, 사보타주를 추가함
제1조 가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제2조 (협약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목적의 국제 운반중인 핵물질과 국가내의 핵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목적의 국제 운반중인 핵물질과 국가내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음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배제
제2조 가 (물리적 방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방호의 강화(12개 기본 원칙 제시)
제3조 (국제 운반 중 핵물질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의 국제 운반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함. 	변동사항 없음
제4조 (핵물질의 국제 운반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국제적 핵물질 운반의 제한 	변동사항 없음
제5조 (국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운반 중 핵물질과 자국 내 핵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운반 중 핵물질뿐만 아니라 자국 내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를 위해 상호 협력 사보타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상호 협력

7 원자력통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pp.308 ~ 310.

기존 협약		개정 협약
제6조 (비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보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하나 관련 회원국의 동의 시 비밀 공개 가능
제7조 (고의적 범죄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되어야 할 고의적 범죄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범죄 구성요건 이외에 다음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 사보타주 범죄 요건을 환경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누출로 제한 방조 및 미수행위도 처벌 범죄로 포함
제8조 (범죄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을 규정함 	변동사항 없음
제9조 (피의자 신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가 충분하면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고 필요시 관계 당사국에 통고 	변동사항 없음
제10조 (사건의 기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를 인도할 의사가 없으면 사건을 당국 (competent authorities)에 기탁하여야 함 	변동사항 없음
제11조 (범죄인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를 인도 가능한 범죄로 규정 당사국과의 협정 관계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시 본 협약을 법적 근거로 하거나 혹은 인도국의 국내법을 따름. 	변동사항 없음
제11조 가, 나 (정치범으로 간주불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는 정치범 혹은 정치관련 범죄 혹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 종교, 국적, 태생적 인종, 정치적 견해 때문에 기소하거나 혹은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구 또는 상호 법률적 도움을 위한 요구 시,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인도국에게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소송절차의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 절차 중 피고인은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변경사항 없음
제13조 (증거 제공 및 상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 관한 범죄의 소송 시 당사국은 필요한 증거 제공을 비롯하여 상 	변경사항 없음

기존 협약	개정 협약
호 협력함.	
제13조 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산업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강화에 책임지어지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산업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국내 법규 및 소송 결과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가 핵물질과 관련돼 있고, 피의자가 범죄가 범해진 당사국내에 있으면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그 당사국에게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범죄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돼 있고, 피의자가 범죄가 범해진 당사국내에 있으면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그 당사국에게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제15조(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서는 본 협약의 일부임.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사항 없음</p>
제16조 (당사국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 후 5년 이후에 본 협약의 이행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 2005. 7.8일 채택된 본 수정안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협약 이행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
제17조 (분쟁 해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국의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협의하거나 혹은 국제사법재판 소장 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사항 없음.</p>
제18조 ~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발효 방법 및 일정, 협약 폐기 그리고 수탁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일정만 제외하고 변경사항 없음.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선 준위로 100 rad/hr를 사용 방사선 준위 단위를 100 rad/hr를 1Gy/hr로 바꿈.

3. 국내법 반영

개정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2014년도 비준서 기탁 시에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했다.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외교부장관은 핵테러 등 범죄정보를 인지한 경우 국제기구에 알리도록 했으며, 제47조에서는 핵물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방사성물질·핵물질·핵폭발장치·방사성물질비산장치·방사선방출장치·관련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범죄자 처벌조항도 추가해서 국가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핵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 등을 손상하는 사람 (제4항 신설), 핵물질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재산 및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제5항 신설), 범죄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가입·활동하는 사람 (제6항 신설), 범죄목적으로 핵물질 등을 소지·제조한 사람 (제7항 신설), 미수범, 예비·음모죄도 처벌 (제9항, 제10항 신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도 2016년 5월 8일자로 시행되었다.

* 방사능방재법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방사능방재법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사능방재법 제44조제3항(보고·검사 등)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FORMATION CIRCULAR

IN

INFCIRC/140
22 April 1970GENERAL Distr.
ENGLISH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otification of the entry into force

1. By letters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n 5, 6 and 20 March 1970 respectivel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are designated as the Depository Governments in Article IX. 2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formed the Agency that the Treaty had entered into force on 5 March 1970.
2. The text of the Treaty, taken from a certified true copy provided by one of the Depository Governments, is reproduced below for the convenience of all Member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tates concluding this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the Treaty",

Considering the devastation that would be visited upon all mankind by a nuclear war and the consequen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avert the danger of such a war and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peoples,

Believing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enhance the danger of nuclear war,

In conformity with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taking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other efforts to further the appl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system, of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effectively the flow of source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s by use of instruments and other techniques at certain strategic points,

Affirming the principle that the benefits of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any technological by-products which may be derived by nuclear-weapon States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explosive devices, should be available for peaceful purposes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whether nuclear-weapon or non-nuclear-weapon States,

Convinced that, in furtherance of this principle, all Parties to the Treaty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or, and to contribute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Urging the co-operation of all States in the attainment of this objective,

INFCIRC/140

Recalling the determination expressed by the Parties to the 1963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in its Preamble to seek to achieve the discontinuance of all test explosions of nuclear weapons for all time and to continue negotiations to this end,

Desiring to further the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rust between Sta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essation of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the liquidation of all their existing stockpiles, and the elimination from national arsenals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their delivery pursuant to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non-nuclear-weapon State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receive the transfer from any transferor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of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not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nd not to seek or receive any assistance in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I

1.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accept safeguards, as set forth in an agreement to be negotiated and concluded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Agency's safeguards system,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Treaty with a view to preventing diversion of nuclear energy from peaceful us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Procedures for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followed with respect to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whether it is being produced, processed or used in any principal nuclear facility or is outside any such facility.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on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INFCIRC/140

2.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provide: (a)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b)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unless the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3.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comply with Article IV of this Treaty, an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rt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set forth in the Preamble of the Treaty.

4.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conclude agre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within 180 days from the original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States depositing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180-day period,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uch deposit. Such agreements shall enter into force not later than eighteen months after the date of initiation of negotiations.

ARTICLE IV

1.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is Treaty.

2.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arties to the Trea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alone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especially in the territories of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needs of the developing areas of the world.

ARTICLE V

Each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und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bservation and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potential benefits from any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xplosions will be made available to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that the charge to such Parties for the explosive devices used will be as low as possible and exclude any charg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be able t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a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 or agreements, through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y with adequate representation of non-nuclear-weapon States. Negotiations on this subject shall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o desiring may als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bilateral agreements.

INFCIRC/140

ARTICLE VI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ICLE VII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the right of any group of States to conclude regional treaties in order to assure the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RTICLE VIII

1. Any Party to the Trea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Treaty.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which shall circulate it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Thereupon, if requested to do so by one-third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nference, to which they shall invite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consider such an amendment.

2. Any amendment to this Treaty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including the votes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Party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a majority of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3.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order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Treaty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re being realised. At intervals of five years thereafter,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may obtai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the convening of further conferences with the same objective of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IX

1. This Treaty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Treaty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3.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its ratification by the States, the Governments of which are designated Depositaries of the Treaty, and forty other States signatory to this Treaty and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nuclear-weapon State is one which has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1 January, 1967.

INFCIRC/140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nd the date of receipt of any requests for convening a conference or other notices.

6. This Treaty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2. Twenty-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 or periods.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ARTICLE XI

This Treaty,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Treaty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to the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triplicate, at the cities of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the first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eight.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Lined area for writing or drawing,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 집필진 |

오선영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형상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변호사

| 기획 및 편집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한정미 연구위원
김형건 연구위원
김종천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2016 GLOBAL LEGAL ISSUES (II)

2016년 6월 30일 발행

2016년 8월 30일 인쇄

발행인 이 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044-861-0300 FAX: 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5-000000호

<http://www.klri.re.kr>

ISBN :

1. 이 보고서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를 금합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GLOBAL LEGAL ISSUES (II)

